

청일전쟁 발발 130년, 러일전쟁 발발 120년 기획 학술회의

전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청일전쟁 발발 130년, 러일전쟁 발발 120년 기획학술회의

전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3:30~17:30

장소 전쟁기념관 이병형홀(1층)

주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문의 (일반)02-748-1685/(군)900-1685

주제		발표자/토론자
사회: 한동훈(군사편찬연구소)		
1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활동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이승원(수원대)
2	청일전쟁 직후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문제	김봉준(인천대)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3	근대적 군대의 의료와 위생문제 - 청일·러일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김영수(연세대) 이규원(서울대)
4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박우현(고려대) 김윤미(군사편찬연구소)
종합토론		좌장: 서영희(한국공학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일 정

13:30~13:40	개회사
13:40~14:15	[제1주제]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활동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 이승원(수원대)
14:15~14:50	[제2주제] 청일전쟁 직후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문제 김봉준(인천대) /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14:50~15:00	휴식
15:00~15:35	[제3주제] 러일전쟁시기 위생과 의료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위생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수(연세대) / 이규원(서울대)
15:35~16:10	[제4주제] 청일·러일 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박우현(고려대) / 김윤미(군사편찬연구소)
16:10~16:20	휴식
16:20~17:30	종합토론 좌장 : 서영희(한국공학대)

〈 목 차 〉

[제1주제]	1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활동	
발표자: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 토론자: 이승원(수원대)	
[제2주제]	29
청일전쟁 직후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 문제	
발표자: 김봉준(인천대) / 토론자: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제3주제]	51
근대적 군대의 의료와 위생문제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위생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자: 김영수(연세대) / 토론자: 이규원(서울대)	
[제4주제]	71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발표자: 박우현(고려대) / 토론자: 김윤미(군사편찬연구소)	

제1주제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활동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활동

박한민

1. 머리말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정보 수집
 - 1)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의 조선 파견과 가스가함
 - 2)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함선 파견과 개항장 물색
3.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 1) 다케조에 변리공사 도한 시기 인천항 체류와 정세 보고
 - 2) 마에다 부산총영사 일행의 남해안 시찰과 신문보도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청일전쟁 발발과 아마기함

1. 머리말

정탐(偵探)이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탐 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일은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의 여러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주재국 외교 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한일 관계 속에서는 동래부(東萊府)에 설치되어 있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대표적으로 양국인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서로의 내밀한 정보까지 입수할 수 있는 통로였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던 왜관이 철폐된 것은 1872년이였다.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외무성(外務省)의 지령을 받고 도한하여 쓰시마 상인들을 퇴거시키고,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개시하였던 것이

다. 이후 한일 관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서계 접수 문제로 인하여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그 와중에 조선 정부 내에서는 ‘대원위분부(大院位分付)’의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단행하면서 대일 관계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핵심 세력의 절반은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으로 구미 여러 국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남아 있던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정한론(征韓論) 정변이 발생하였다. 외교적으로 조선과 경색되어 있던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지를 두고 노선이 나뉘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치우선론(內治優先論)’의 입장에 서있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일파에 승리를 거두고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본 국내의 식산흥업 문제에만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완급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1874년 타이완 침공 후 청국과의 류큐의 귀속 문제 처리, 1875년 러시아와의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등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조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해금(海禁)’과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을 명분으로 문호개방을 거부하고 있던 조선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 조한 함선을 파견하여 정탐과 측량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보를 수집해 나가야 했다. 일본으로서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조선 연안에서 먼저 수행한 측량 결과물로 해도(海圖)를 입수하여 여기에 자신들의 정탐 활동 결과를 반영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해도·외방도(外邦圖) 제작, 정탐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888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參謀本部)에서 조선 내 정탐활동 결과를 집대성한 『朝鮮地誌略』 간행에 대해서는 참모본부의 활동 전반을 해제 형식을 빌려 무라카미 가쓰히코(村上勝彦)가 상세하게 정리하였다.¹⁾ 이후 지리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국 일본이 제작한 ‘외방도’에 주목하여 일본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의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한국과 일본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 또한 ‘외방도’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이루어져 지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한편으로는 조선에 들어와 정탐 활동을 벌이고 측량도를 제작한 대표적 인물로 가이즈 미쓰오(海津三雄)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그가 수행한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³⁾ 가이즈 미쓰오를 비롯하여 조선에 활동하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

1) 村上勝彦, 1981, 「解説 隣邦軍事密偵と兵要地誌」, 『朝鮮地誌略』 1, 東京: 龍溪書舎.

2) 양윤정, 201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小林茂, 2011, 『外邦圖: 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東京: 中公新書 ;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조선말~일제강점기』, 法文社 ; 小林茂 編, 2016,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3) 安岡昭男 1999, 「初期の東京地学協会と軍人」, 『政治經濟史学』 400, 東京: 日本政治經濟史学研究所 ; 小林茂·岡田郷子 2008, 「19世紀後半における朝鮮半島の地理情報と海津三雄」, 『待兼山論叢: 日本學編』 42, 大阪: 大阪大學 文學研究科 ; 박한민, 2013,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정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歷史學報』 217.

房義質) 등이 관여한 도쿄지학협회의 활동에 주목하여 회원들의 명단과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른 기관 등에 대한 논문까지 포괄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⁴⁾ 한편으로 해군의 조선 연안 측량 결과물 속에 울릉도·독도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 한철호의 연구가 있었다.⁵⁾ 한철호는 1876년 호쇼함(鳳翔艦), 1878년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에 주목하여 시기별로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최근에는 1875년 9월 20일 강화도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킨 운요함의 두 차례에 걸친 도항을 추적하면서 관련 기록을 새로 발굴하여 조선 측의 대응과 일본 내 언론 보도까지 폭넓게 다루는 연구로까지 연안 측량과 정탐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본 발표문에서는 일본의 조선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 연구에서 잘 활용하지 않았던 사료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1870~80년대의 정보 수집과 유통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출발점은 1872년 하나부사가 도항 당시 승선하였던 가스가마루(春日艦)로 삼을 것이다. 1875년 운요함 사건 전후로 연안 측량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한 일본 정부 내 인사들의 의견이 조일수호조규 조관에 반영되는 과정도 검토해 보려 한다. 그리고 개항 전후로 활발하게 동해와 남해, 황해 연안을 왕래하면서 지역 정보를 활발하게 수집, 정리한 다카오마루(高雄丸)와 아마기함(天城艦)의 활동도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이들 함선이 측량한 결과물인 해도와 견문 기록이 어떠한 매체에 재수록되어 활용되었는지까지 아울러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조선에 대한 정탐, 측량 정보가 어떻게 축적, 확산되어 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870년대와 80년대에 생성된 조선 관련 정보가 결국은 1894년 청일전쟁 발발 당시 육해군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기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체 내용 구성상 1894년 청일전쟁 개전 이후의 상황은 소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아마기함의 대동강 연안 보고서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 1870년대 일본 측의 함선 파견과 지리정보 수집

1) 1872년 하나부사 외무대승의 조선 파견과 가스가마루

1872년 8월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하나부사 요시모토 외무대승을 왜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관을 접수할 목적으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파견 명령은 8월 18일에 있었다. 하나부

4) 최혜주, 2019, 『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 한양대학교출판부.

5) 한철호, 2015,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 50 ; _____, 2021,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일본 군함 호쇼(鳳翔)의 조선 해안 최초 측량과 그 의의」, 『韓國史學報』 83.

6) 박한민, 2023,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 정탐 활동과 신문보도」, 『韓國史研究』 202.

사가 조선으로 파견될 때 이용한 선박은 가스가함과 유코마루(有功丸)였다. 출발에 앞서 하나부사는 조선국 지도 7매를 해군성(海軍省) 관리 엔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회람하였고, 해군성에서는 이 지도를 필사한 다음 외무성에 돌려주었다.⁷⁾ 이 문서에 첨부된 도서목록을 보면, 조선 도한과 관련하여 외무성에서 기본적으로 소장한 참고자료가 여러 종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관원고(朝鮮官員考)』 같은 자료를 비롯하여 조선과의 교섭 기사가 수록된 『조선통교시지서(朝鮮通交始之書)』와 『통교대기(通交大紀)』, 울릉도쟁계(鬱陵島爭係)에 대한 조일 간 교섭 전말을 기록한 『죽도기사(竹島紀事)』, 『해동기(海東記)』 등의 자료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리와 풍속 관련 서적으로는 『조선속고(朝鮮俗考)』와 『조선각도도리(朝鮮各道[各邑各山]道里)』가 기록에 나온다. 공무로 조선에 도항할 때 제도와 역사, 지리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서적을 구비하고 수시로 참고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부사 일행은 8월 28일 시나가와(品川)에서 가스가함을 타고 출항하였고, 9월 15일 부산포 초량항에 도착하였다. 함선의 입항 당시 부산에서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철시(撤市)로 인하여 왜관에는 통역들만 드나들고 있었다.⁸⁾ 일행에는 육군성 관원 3~4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기타무라시게요리(北村重頼) 육군 소좌, 벳부 신스케(別府晋介) 육군 대위이다. 이 두 명의 육군 장교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이타가기 다이스케(板垣退助)에게 조선 정탐을 수행하고 오라고 지시를 받은 자들로, 삼남 지방의 물정을 은밀히 탐색하였다.⁹⁾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9월 23일 새벽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를 청원하는 조선인 1명과 접촉하였다. 이때 그 조선인은 「팔도경성노정기(八道京城路程記)」와 지도를 휴대하고 있었다.¹⁰⁾ 10월 3일에는 전교린괘(交隣掛)가 가지고 나온 『동국여지지략(東國輿地誌略)』 같은 자료를 열람하면서 조선 측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하나부사는 초량 왜관에서의 공무를 마친 후, 가스가함을 타고 이즈하라(巖原)를 거쳐 귀국하였다. 11월 6일에는 외무경(外務卿), 10일에는 정원(正院)에 출석하여 참의(參議) 이타가기 다이스케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서류 제출을 마쳤다.¹²⁾

하나부사 일행이 왜관을 일방적으로 일본 공관으로 접수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도 조선과의 교섭은 서계 접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일본 국내의 정한론 정변 발발, 조선 정계에서 대원군이 하야하는 등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고 있었다. 1874년 5월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조선으로 파견되는 외무성 6등 출사 모리야마 시

7) 丙第1385號 壬申 9月 15日 海軍省→外務省, 「明治五年ノ七ノ卷之十七 係于花房大丞渡韓ノ2 壬申八月二十七日至」(Ref. B03030170600).

8) 壬申 9月 17日 花房 外務大丞→大少丞,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9) 村上勝彦, 1981, 앞의 글, 5쪽.

10) 1872년 9월 22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1) 1872년 10월 3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12) 1872년 11월 10일, 위의 자료(Ref. B03030170600).

게루(森山茂)에게 선박 3척 고용하고 조선으로 파견해 내부 상황을 탐색하도록 다음과 같은 지시를 비밀리에 내렸다.

우선 나가사키(長崎)에 가서 증기선을 고용하여 쓰시마(對馬)로 항해함에 따라 소형 일본 선 3척으로, 하나는 초량관으로 파견하여 자세하게 동정을 묻는다. 두 번째는 탐색(探索)으로 거제, 울산 근처의 해안에 표착하도록 하여 저들의 접대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도록 한다. 이 증기선이 쓰시마에 계박하는 것은 대략 20일간으로 할 예정이며, 미리 약속을 정해 두고 임기(臨機)로 진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탐색선(探索船) 각자가 귀향하여 이상이 없음을 보고한다면 신속하게 증기선 고용을 해제할 것.¹³⁾

탐색선 3척을 동래와 거제, 울산으로 각각 보내어 현지에서 조선 지방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탐색해 보도록 한 것이다. 발포 같은 무력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 선박이 부산포 항구에 가서 만약 저들로부터 갑자기 발포 등을 하는 일이 있다면 신속하게 쓰시마로 퇴각하고, 오히려 임기로 관내의 동정을 탐지할 수단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 시찰할 방도가 끊어질 때는 속히 상경하여 그 취지를 보고할 것.¹⁴⁾

일본 선박의 부산 입항 후 조선 측의 발포라는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왜관 내 상황의 ‘탐지’에 주력하되, 더 이상 확인할 방도마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다면 도쿄까지 올라와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한론 정변이 발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였다. 조선 측으로서는 ‘유원지의의(柔遠之義)’에 따라 통사를 파견해 문정을 실시하면서 일본 선박의 도항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발포부터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운요함(雲揚艦)이 조선 동해안 연안 일대를 오르내리면서 정탐한 1차 도한 당시 함경도 덕원, 경상도 영일 지역의 지방관이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함장과 사관들과 조우할 때 문정부터 실시하던 양상에서도 잘 드러난다.¹⁵⁾

1875년 9월 20일 이노우에 함장과 승조원들이 보트를 타고 염하(鹽河)를 무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 측에서 발포하자, 포격을 구실로 삼아 운요함은 22일까지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를 공격하였다. 나가사키로 귀향한 운요함은 상황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였고, 3일간의 전투를 하루에 있었던 일로 보고서를 조작하였다. 또한 일본 군함이 조선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응전하였다는 식으로 대외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국내에서는 조선을 응

13)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14) 1874년 5월 15일 太政大臣 三條實美→外務省 6等出仕 森山茂(Ref. B03030131600).

15) 박한민, 2023, 앞의 논문, 285~292쪽.

징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정한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운요함 사건의 발생 이후 조선 연안을 측량할 권리를 취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서를 기초, 번역하여 외무성 고문 스미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조선국 연해측량 권리의 건(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조선국이 “포를 발사하여 흉포한 해를 가한” 운요함 사건 발발 이후 조선 연해를 측량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다를 소유하고, 선박의 편리가 필요한 우리 섬나라 같은 곳은 그 연해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웃 나라의 해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박이 이르는 곳은 모두 그 얕고 깊음, 위험한 암초의 유무를 상세하게 함으로써 사람과 선박의 보안을 예방한다. 또한 이로써 운수 방법을 쉽게 하여 상업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상 만국이 각기 해안을 상세히 파악하는 일을 힘써서 설정하고, 스스로 착수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것을 허락함으로써 항해 선객의 편리를 얻도록 한다. 특별히 조선국에서는 아니다. 그 연해를 방치하여 불행한 운수의 난처함을 무수한 항해객이 입도록 하였고, 때로는 외국인이 저 나라에 이르러 측량의 작업을 시작하려고 바라는 자가 있다면 망령되게 이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포를 발사하여 흉포한 해(暴害)를 가하였다. 그렇지만 외국은 아직 깊이 여기에 화내지 않고, 일이 많아서 관대함을 주로 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정략과 술법 역시 능히 이것을 모방할 수 있다. 이것은 필경 저들을 다른 나라의 공법을 인정하고 지키는 여러 나라와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 나라는 우리와 이웃하고, 그 연해는 우리 선박과 사람의 운명을 맡기는 곳임은 결코 이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가령 그 죄는 잠시 제쳐두고 따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그 해안을 상세하게 함으로써 선박과 사람의 보안을 예방해야 한다. 이것을 하는데 이르러 만약 저들이 포악함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여기에 응하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으며, 상당한 징계를 가하여 그 포악함을 제어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측량을 수행하고 중지할 뿐. 그렇더라도 그 업무를 시작하는 쪽에서는 우선 일단 저들 정부에게 그 일을 예고함이 옳다. 여기에 문의하는 대략을 아래에 기록한다.

첫째, 우리 선함을 통해 조선의 연해를 측량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조난선(難船) 예방을 위한 데서 나오며,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을 것.

둘째, 조선 정부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측량도(測量圖)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는 부득이하나 거액의 돈을 소비하여 조선 연해의 아직 측량이 있지 않은 부분을 자세하게 측량함으로써 우리 조난선의 예방을 하는 일은 적확하게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셋째, 조난선 예방은 정부가 인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무로, 그 주의는 애초부터 인도(人道)의 대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이것을 도와서 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소위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혹

은 망녕되게 우리 측량선을 향하여 발포 등의 폭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스스로 역시 우리 권리일 수 있음.

위에서 논한 내용은 전적으로 연해측량의 권리 한 가지 건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실지에서 시행하더라도 조선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예의를 결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만국의 판단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명예를 칭함을 얻더라도 결코 그 모함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밑줄은 인용자)¹⁶⁾

이 의견서를 보고 모리와 대화를 나눈 스미스는 “포탄이 도달하는 곳의 연해는 여기를 갖고 있는 국가의 권리 안이기 때문에 윤허를 받지 않고서 마음대로 침입하여 측량하는 일은 공법의 조리에 따르자면 심히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선국은 “아직 공법의 지배를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獨立)한 일국으로 스스로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해측량의 거부도 “그 권리 내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선이 독립국인 이상 당연히 타국의 ‘연해측량’을 허가할지 말지의 여부는 주권국의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리가 주안점을 두었던 연해측량과 관련된 내용은 「조일수호조규」 제7관에 반영되었다.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어서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수시로 연해를 측량해 그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만들어 양국 항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한다.¹⁷⁾

2)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함선 파견과 개항장 물색

1876년 2월 27일 조일 양국은 12개 조관으로 이루어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부산 이외에 추가로 두 곳을 조사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장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통상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별도로 사절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역규칙」을 협의할 목적으로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 이사관(理事官)이 파견되기에 앞서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관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 연해를 측량하는 일이 ‘금일의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통상장정은 그 조목이 자못 번잡하고 쇠말하여 상세하게 고찰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순일(旬日)의 공을 허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해로(海路)가 요원(遼遠)하고 항정(航程)을 저애하고 지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시기를 지체함이 있다면 신의를 외국

16) 1875년 11월 7일, 「朝鮮國沿海測量權利之儀」, 『自明治八年至同九年 朝鮮關係 考證彙輯』.

17) 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36쪽.

에게 상실하고, 그 경모함(輕侮)에 편승하니 그 해(害)가 어찌 깊이가 얇고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위원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 나라의 연해(沿海)를 측량하여 그 험난함과 용이함(嶮易)을 고찰, 강구하고, 통상에 편리함이 있는 지역을 택하여 조약 가운데 20개월을 기약하여 개항할 곳의 항구를 예정하는 일은 금일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선은 연해가 위험(危巖)한 지역이 많고, 겨울에는 기후가 격량인 시기를 맞아서 항행이 불편하므로, 능히 지금에 이르러 군함을 파견하고, 계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¹⁸⁾ (밀줄은 인용자)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담당한 구로다로서도 조선의 연해측량을 통해 통상에 편리한 개항장을 설정하는 일을 신속히 추진하는 일이 중요함을 태정대신에게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곳의 추가 개항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할 때 군함이 수행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1877년부터 1879년 사이 조선에 파견된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이 대표적인 함선으로, 연해 측량 및 정탐과 관련된 기록이 잘 남아 있어 주목된다.

(1) 다카오마루와 아마기함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7년 10월 4일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부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부사 일행이 타고 온 다카오마루 안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선내를 소독하고 병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10월 7일 부산포에서 출항, 나가사키(長崎)로 일시 귀항하였다.¹⁹⁾ 하나부사는 동래부사와 면담 등을 한 후, 다카오마루가 돌아오자 11월 3일 부산포를 출발, 전라도의 남해안 일대를 경유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대리공사 일행이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한 후 조선 정부에서는 예조판서 조영하(趙寧夏)와 예조참판 홍우창(洪祐昌)이 이들을 맞아 담판에 임하였다. 개항장 설정 건의 경우 “다시 탐색을 실시하여 나중에 지명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탐색의 편의를 위해서 함선에 석탄을 적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함경도 문천군 송전(松田), 전라도 거문도와 진도 세 곳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7개 조관으로 된 「석탄위장약조(石炭圍場約條)」는 12월 20일 하나부사와 홍우창이 조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함선을 동원한 측량에 필요한 석탄 등의 물품을 조선의 지정된 장소에서 적재해 두고 공급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둔 것이었다.

1. 수호조규 제5관에 기재된 두 곳의 항구는 모름지기 측량과 수색을 한 후 지명을 지정해야 한다.

18) 1876년 5월 25일 參議 黒田清隆→太政大臣 三條實美, 『三條家關係文書』書類の部-明治期書類の部-諸氏意見書類-51.朝鮮-黒田清隆意見書 51-10.

19) 「復命概略」,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1. 일본국 정부는 이 일을 위해서 일본력 메이지 11년(1878) 4월, 조선력 무인(戊寅) 3월 부터 12개월 사이, 석탄을 조선국 전라도 진도의 벽파정(碧波亭)과 거문도에 저장할 수 있다.
1. 함경도 측수(測水)를 할 때, 우선 석탄을 적재할 곳을 선정해야 한다. 만약 아직 선정 하지 못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기한으로 문천(文川)의 송전촌에 석탄을 적재하 며, 좋은 지역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을 탐색해서 얻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만약 탐색해서 얻지 못하였다면 다시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다.
1. 조선국 정부는 미리 그 지방에 명령을 내려 일본 측량선이 있어 석탄을 그 선박에 운 반, 탑재하는 일이 필요할 때는 소재 촌민이나 선박을 고용하는데 방해가 없어야 한 다.²⁰⁾

하나부사 일행은 12월 21일 서울을 출발, 30일 부산에 도착하여 1주일 체류한 다음 출항 하여 1878년 1월 20일 요코하마(橫濱)로 돌아갔다.²¹⁾ 조선을 왕래하면서 하나부사가 이용하 였던 다카오마루가 부산에서 전라도 서남 지역과 충청도 연안을 거쳐 경기도까지 항해하면서 수집한 지역 정보와 측량 내역은 「메이지 10년 조선기사」에 일자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작성자는 측량 업무에 종사한 장교 가이즈 미쓰오와 시모무라 슈스케(下村修介)였다. 이들은 조선이 “쇄국(鎖國)을 원대한 방책으로 삼은” 나라이지만, 국제정세상 동북 국경을 청과 러시 아에 접하고, 서남쪽은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쇄국으로 외교(外交)를 막으 려는 일은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²²⁾ 본인들이 이번 도한에서 맡은 소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재 하나부사 대리공사가 다카오함(高雄艦)으로 하여금 항행하도록 하는 길에 진도, 목 포, 아산의 여러 지역을 우회하여 항만이 좋은지 여부를 조사, 측량하도록 하였다. 그 사 이에 무릇 1개월 정도 저들 나라 서남 해안의 지세, 풍토, 그 견문한 바에 기초하여 이것 을 기술한다. 또한 영국 해도(海圖)와 우리 해군사관의 실측도(實測圖)에 기초하여 이것을 보완하여 기술을 부수함으로써 참고에 제공한다.²³⁾ (밑줄은 인용자)

위 내용은 「조선기사」를 작성하게 된 연유와 목적을 소개한 도입부 글이다. 경기도 인천까 지 항해하는 도중에 전라도 서남 지역에 위치한 진도, 목포를 거치는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수집하고, 기존에 있던 영국 해도를 참고하여 실측도를 새로 제작하도록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부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라도 강진현 소안도(所安島), 해남현

20) 1877년 12월 20일 乙號 「石炭圍場約條」,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21) 「復命概略」,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22) 辯言,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23) 辯言,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의 오마로도(五馬路島), 진도 내 벽파정(碧波亭), 사도(沙島) 등산진(登山津), 목포(木浦), 경기도 남양만(南陽灣)의 풍도(豐島)와 고온포(古溫浦), 인천만(仁川灣) 제물포(濟物浦), 영종도와 월미도, 통진부에서 한강을 거슬러 한성에 들어가는 길 등을 지역별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들은 들른 지역마다 경위도, 호구수, 주요 생산물과 생업, 방어시설과 선박 계류 상황, 주둔 병력수, 주변의 풍경과 조류, 수심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이들이 상륙할 때마다 각 지방관들은 문정을 하기 위해서 속관이 일본인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진도 벽파정에서는 진도군수 속관 김갑진(金甲鎭), 목포에서는 상존위 문진규(文珍奎)와 만호 김진우(金振祐), 청산첨사 정용묵(鄭容默)의 속관 박홍성(朴弘性), 인천에서는 인천부사 이남집(李南輯)과 영종첨사 양주성(梁柱星)이 나와서 문정을 하거나 접대를 하였다.

목포 지역을 둘러본 측량 장교들은 “항구 안의 위험과 평온함을 추측하고 포구가 개항장에 적당한지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서” 입항하였지만 이곳은 “개시장(開市場)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²⁴⁾ 오마로도와 목포 지역에 대해서는 측량 담당 장교들이 기록한 「조선국 남해안 화성돈 해만 기사(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와 「11월 10일 토요일 오마로도에서 목포에 이르는 기사」, 그리고 목포 측량도가 1장 남아 있다.²⁵⁾ 오마로도에서 목포로 갈 때는 다지리(田尻) 중위, 고다마 가네타카(児玉包孝)와 다카스기 하루키(高杉春祺) 해군 소위, 가이즈 미쓰오 육군 소위, 아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 외무 5등속이 함선에서 내려 소증기선을 이용하였다. 다만 목포 지역을 둘러볼 때는 석탄과 식량이 부족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견취도(見取圖)」만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정밀한 측량은 추후에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기록해 두었다.²⁶⁾ 이 두 개의 기사는 원래 「다카오마루 항해일지」에서 발췌한 문건인데, 문서의 필사본은 『하나부사 요시모토 관계문서(花房義質關係文書)』에도 남아 있다.²⁷⁾ 활자본은 일본 해군 수로국(水路局)에서 1879년 6월에 간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 제18호에 「조선국 남안과 서안 약기(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란 제목으로 약간의 편집과 보완 작업을 거쳐 게재되었다.²⁸⁾ 잡지 수록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출전과 더불어 향후 정교하게 대조하여 활용해야 하다는 점을 부기해 두었다.

이 기사는 메이지 10년(1877) 중 해군 소좌 스기 모리미치(杉盛道)가 다카오마루를 통해 조선해(朝鮮海)로 도항할 때 그 승조원 해군 소위 고다마와 동 다카스기가 실제 경험하고

24) 木浦,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第1卷(Ref. B03030183400).

25)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甲圖 木浦」,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26)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27) 『花房義質關係文書』M/F 404-1.

28) 海軍少尉 児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第18號, 1~12쪽. 「朝鮮國南海岸華盛頓海灣記事」는 ‘華盛頓海灣’, 「十一月十日土曜日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記事」는 ‘五馬路島ヨリ木浦ニ至ルノ海路 附雜記’로 수록하였다. 수로국은 항적(航跡)을 표시한 지도로 「從五馬路島至木浦略圖」를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필기한 내용이다. 이후 이 지역에 항해하는 자는 모조록 여기에 일치하는 해도(海圖)와 수로지(水路誌)를 비교 대조하고, 면밀히 그 상황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²⁹⁾

다카오마루 승선 장교가 남양부에 상륙하였을 때는 이 근처에 “현재 역력(疫癘)가 유행”하여 “사망한 자가 수천 명 정도”가 된다는 상황을 청취하였다.³⁰⁾ 여기서 언급된 ‘역력’은 개항 이후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였을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측량 정보는 「조선국 남양만 기사(朝鮮國南陽灣記事)」에 실려 있으며, 남양만 측량도가 1부 남아 있다.³¹⁾ 이 기록 역시 수로국의 편찬을 거쳐 『수로잡지』 제18호에 같이 실렸다.³²⁾ 영종도에 대해서는 「조선전도(朝鮮全圖)」에 ‘호도(虎島)’라고 기재한 것이 착오였음을 밝히며 오류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원래 성안에 민가 60여 호가 있었는데, 왕년에 운요함의 일거(一擧)로 병요가 발생하여 지금은 겨우 11호가 남았을 뿐이며, 첨사가 거주하는 관사도 이곳에 있다가 병요 후 여기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운요함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내 변동 상황을 탐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³³⁾ 통진(通津)에서 김포로 가는 길은 4리 정도인데, 도로는 진흙탕인 곳도 있어서 “야포(野砲)나 치중(輜重)이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목제 교량도 “야포를 통과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여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도 하였다. 일본 장교들은 한성 안에 가 있는 동안 조선의 병제(兵制)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많고, 특히 고루한 한인이 자국 제도를 타인에게 누설하기를 싫어한다”는 분위기를 전하였다. 몇몇 조선인에게 몰래 듣게 된 병사수는 훈련도감(訓練都監) 5,772명, 금위영(禁衛營) 2,504명, 오위영(五衛營) 2,504명이었다. 무기와 화약은 군기시(軍器寺)에서 제조하며, 훈련은 봄과 가을 2회 교외에서 실시하며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³⁴⁾

다카오마루가 활동을 마치고 돌아간 후,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앞서 체결한 「석탄위장약조」에 따라 1878년 4월부터 측량선을 조선 연안으로 파견하여 “충분히 탐색한 다음 계속해서 개항 담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해군성에 하명하여 측량선을 파견하도록 해 달라고 태정대신에게 요청하였다.³⁵⁾ 3월 4일 태정대신은 외무성에서 요청한 조선국 함경도와 전라도 연안 측량을 위한 측량선 파견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 파견하게 된 선박이 아마기함으로, 선장은 해군 소좌 마쓰무라 야스타네(松村安種)였다.³⁶⁾ 아마기함이 측량

29) 海軍少尉 児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5쪽.

30) 新里,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31) 「朝鮮國南陽灣記事」,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乙圖 南陽灣」, 『代理公使 朝鮮復命概略 明治十一年』.

32) 海軍少尉 児玉包孝・高杉春祺 述, 「朝鮮國南岸及西岸畧記」, 『水路雜誌』 第18號, 12~15쪽. 「朝鮮國南陽灣記事」는 ‘南陽灣’이라는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33) 永宗島及ヒ永宗城,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34) 兵制及ヒ租稅, 「明治十年 朝鮮紀事」, 『花房代理公使渡韓一件』 第1卷(Ref. B03030183400).

35) 1878년 2월 20일 外務卿 寺島宗則→太政大臣 三條實美, 『日本外交文書』 卷11, #139, 284쪽.

36) 1878년 4월 13일 海軍大輔 川村純義→外務卿 寺島宗則, 『日本外交文書』 卷11, #141, 286쪽.

선으로 조선 연안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법은 외무성에서 기초한 「측량선 파견목적」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³⁷⁾ 측량 탐색할 지역의 우선 순위는 함경도 원산진과 북청, 전라도 흥덕과 옥구, 충청도 해미와 결성 지역으로 정하였다. 지역에 갈 때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무성 관원이나 어학생도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측량 외에도 해안의 지형, 상선의 출입과 매매 품목, 호구수와 다수의 종사 직업, 기본 인프라와 운수의 편리 여부 등을 명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문건의 부전(附箋) 가운데 “함경도 측량 순서로 마쓰시마(松島)의 실황은 ‘차이나 디렉토리(China Directory)’에 실린 바와 같은지 여부를 답사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란 문구가 있다. 함경도에 측량을 다녀오는 길에 ‘차이나 디렉토리’라는 구미 측 자료에 소개된 ‘마쓰시마’ 항목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1873년도판 『The China Sea Directory』에 나오는 울릉도(MATU SIMA, Dagelet Island)에 근거한 지시였다.³⁸⁾ 실제로 아마기함이 함경도에서 내려오는 길에 울릉도를 들르면서 경위도를 실측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⁹⁾ 아마기함은 함경도의 영흥만과 송전만 일대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출항하였다.⁴⁰⁾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릉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지형을 살펴본 다음 부산으로 귀항하였다.⁴¹⁾

아마기함은 나가사키로 돌아가 선박 수리를 마친 후, 8월 13일 출항하여 다음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⁴²⁾ 여기서 통역으로 아비루 유사쿠(阿比留裕作), 다케다 쿠니타로(武田邦太郎),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가 승선한 다음, 8월 23일 전라도와 충청도 연안 측량을 위해서 출항하였다.⁴³⁾ 이날부터 9월 30일 부산으로 귀항할 때까지의 일지는 「아마기함 승조 중 일지(天城艦乗組中日誌)」에 상세히 실려 있다.⁴⁴⁾ 8월 24일에는 전라도 흥양현 삼도(三島), 즉 거문도에 도착하여 촌락의 대표들과 만났다. 28일은 비인현에 가서 현감 이용주(李用周)와 만나 문정을 하는 가운데 옥구만(沃溝灣) 측량 건을 알리고 식량 공급, 길 안내자 고용 건을 요청하였다.⁴⁵⁾ 31일에는 김제군수(金堤郡守) 겸 옥구현감 송기로(宋綺老)가 와서 문정을 하고 접대를 하였다.⁴⁶⁾ 9월 8일에는 천수만(淺水灣)에 닿을 내렸고, 여기서는 홍주영장 겸 목사 조의인(趙義仁)이 문정을 하러 내함하였다.⁴⁷⁾ 다음날에는 부함장과 사관들이 아사야마를

37) 1878년 4월 16일 寺島 外務卿→河村 海軍大輔, 『日本外交文書』 卷11, #142, 287~289쪽.

38) 한철호, 2015, 앞의 논문, 32~33쪽.

39) 한철호, 2015, 위의 논문 ; 박한민, 2023, 「일본의 동해안 정탐 활동과 원산 개항」, 『한국근현대사연구』 107.

40) 박한민, 위의 논문, 20~25쪽. 일본인들의 측량에 대한 조선 지방관의 인식과 대응은 여기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41) 1878년 7월 4일 外務5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書記官 田邊太一, 『日本外交文書』 卷11, #145, 292~293쪽.

42) 『橫濱毎日新聞』 1878년 8월 15일 2면 2단.

43) 1878년 8월 25일 外務5等屬 山之城祐長→外務大輔 森有禮, 『日本外交文書』 卷11, #146, 293쪽 ; 『橫濱毎日新聞』 1878년 9월 13일 2면 3단.

44) 「天城艦乗組中日誌」, 『帝国軍艦天城号朝鮮国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45) 1878년 8월 28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46) 1878년 8월 31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47) 1878년 9월 8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통역으로 데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보령(保寧) 지역 수영(水營)에 담수를 탐색하러 나갔다. 수영에서는 이들을 맞아 문정을 실시하였고, 성내의 사공청(沙工廳)으로 이동하여 술과 안주를 내어 접대하였다.⁴⁸⁾ 홍주 지역에서 아비루 유사쿠는 “깃발을 세우고 석회를 도포하여 측량 표목을 삼아” 측량을 실시하였다. 9월 16일에는 충청도관찰사 사절로 절충장군 박응순(朴膺淳)이 함선에 와서 인근 가옥을 빌려 요양하는 건을 논의하였다.⁴⁹⁾

9월 22일에는 요시다 시게치카(吉田重親) 중위와 아사야마가 결성(結成) 지역으로 측량을 하러 나갔다. 이들이 산을 넘어가 성호동까지 가자 지역민들이 물려와 도로를 막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소란이 발생하자 군관들이 와서 제지하면서 요시다 일행과 대화를 하였다. 조선 관리들은 감영에서 일본인의 측량 건에 대하여 알리기는 하였지만, 등산과 육로행까지 허가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사야마는 “측수(測水) 방법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우리 군함이 이미 각지에 가서 측량을 하였는데, 아직 등산과 육로행을 방해한 부현(府縣)이 없었다”고 하고, 결성 지역에서만 이를 금지한다면 이 행위를 함장에게 보고한다고 답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정탐 행위를 제지한 것은 결성현감(結成縣監)이 일본국 사람들의 산 답사와 육로행을 스스로 멋대로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요시다, 아사야마는 결성현감과 면담을 요청하였고, 만나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결성현감 : 지난번에 등산 건을 이야기하였는데, 다시 상륙하여 등산하려 한 것은 무슨 일인가?

아사야마 : 이번 측량은 양국 정부의 약조에서 기인하였다. 그러한 것을 이 지역에 제한하여 자유롭게 측량할 수 없다면 우리들이 명을 받드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 역시 부득이하여 등산을 하게 되는 까닭이다.

결성현감 : 공들이 지금 등산을 한다면 나는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역시 부득이다.⁵⁰⁾

일본인들의 측량을 핑계로 산에 올라가고, 육로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성현감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은 양국이 조약 체결을 통해 ‘자유로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정탐활동을 제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긴장을 누그러트리기 위해서 연회를 연 결성현감은 “주객(主客)의 길은 교린(交隣)의 마땅함을 두터이 하는데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술을 권하였지만, 일본 측은 이를 받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제지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해미(海美)와 결성 지역에서 5일 동안 체류하면서 측량과 정탐활동을 마친 아마기함은 9월 28일 천수만에서 출항, 30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⁵¹⁾ 천수만 일대

48) 1878년 9월 9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49) 1878년 9월 16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50) 1878년 9월 25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를 측량하고 견문을 채록한 것은 아사야마가 「시을 만 근방 섬 명칭과 견문기」란 제목의 문건으로 남겼다.⁵²⁾ 나가사키로 귀향한 후 아마기함장 마쓰무라 해군 소좌는 동해진수부사령관이 토 스케마로(伊東祐磨)에게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측량 결과와 승선 수병들의 상황을 보고하였다.⁵³⁾ 아마기함장은 이번에 측량을 지정하였던 해미, 결성, 옥구 지역은 실견한 결과 간만(干滿)의 차이가 크고, 정박할 만한 좋은 항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서에 보면 수로국에서 연안 측량을 위해서 가토 시게나리(加藤重成) 소위와 고바야시 순조(小林春三) 소위보(少尉補) 두 명을 파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11월 1일자로 해군성에 제출된 아마기함의 출장 결과물 11종의 문서와 지도 목록은 다음과 같다.⁵⁵⁾

<표 1> 1878년 아마기함 제출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전라 충청 양도 중 비인 옥구 결성 해미 지방 견문기 수로잡지(水路雜誌)	1책 1책	
조선국 충청도 천수만문(淺水灣門) 지도	1장	해도 100호 → 해도 74호(1892.04.08.), 측량자로 요시다 중위와 가토 소위 기재
동국(同國) 동도(同道) 결성현 하성호악 약측도	1장	
동국 동도 해미 근해 약도	1장	
동국 전라 충청 양도의 경계 장포강 약측도	1장	
동국 전라도 옥구만 약도	1장	
동국 천수만문(淺水灣門) 원점과 나침편차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경위도 추산부(推算簿)	1책	
동국 천수만문 투연부(投鉛簿)	1책	
동국 측량 각소 기사		

참고문헌 :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図取調の件東海鎮守府届」; 小林茂 編, 2016,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51쪽.

51) 1878년 9월 28일.30일, 「天城艦乗組中日誌」, 위의 자료.

52) 淺山顯藏, 「附錄 ショー灣近傍島名并見聞記」, 『帝国軍艦天城号朝鮮国沿岸測量一件』(Ref. B07090444500)

53) 1878년 10월 1일 天城艦長 松村安種→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磨, 「外入842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諸港測量等の件東海鎮守府届」(Ref. C09113084200).

54) 아마기함장이 승선 장교 명단을 보고하고, 이것을 동해진수부사령장관 해군소장 이토 스케마로가 해군대보 가와무라 스미요시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履入734 吉田中尉外9名進退の件東海鎮守府届」(Ref. Ref. C09112941600).

55) 1878년 11월 1일 東海鎮守府司令長官 伊東祐磨→海軍卿 川村純義, 「外入924 天城艦朝鮮全羅忠清兩道測量略図取調の件東海鎮守府届」(Ref. C09113084300).

(2) 1879년 대리공사 도한 당시의 연안 측량과 정탐 활동

1879년에도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대리공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개항장을 물색하고 선정하려는 협상은 계속되었다. 하나부사 일행이 조선으로 건너가는 데 이용한 함선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 2척이었다.⁵⁶⁾ 하나부사 일행은 3월 31일 요코하마에서 출항하여 고베, 부산을 거쳐 경기도 화성 고온포(古溫浦)에 상륙한 다음 육로를 이용하여 한성의 청수관(淸水館)에 도착하였다. 한성에서 조선 정부 강수관(講修官)과의 현안 교섭은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이어졌다.⁵⁷⁾

하나부사의 도한 중 개항 적합지 물색을 위한 ‘서안 탐항(西岸探港)’ 작업은 다카오마루와 호쇼함이 수행하였다. 이 당시 측량과 정탐 활동을 통해 생산된 문서와 지도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879년 하나부사 대리공사 도한시 생산된 정탐 문서와 지도 목록

문서명	수량	비고
진강기(鎭江記)	1건	『東京地學協會報告』 1권 수록(1879.11.29.)
진강약도(鎭江略圖)	1책	
아산기(牙山記)	1건	
조선국 아산요지(朝鮮國牙山錨地)	1장	해도 74호 「朝鮮西岸諸錨地」 수록(1892.04.08.) 여기서 동경은 ‘40분’을 ‘42분 10초’로 수정. 측량자로 아오키 소좌와 요시다 중위 기재
등쌍봉기(登雙峯記)	1건	
신리면기(新里面記)	1건	
자인천경통진입경성악기(自仁川經通津入京城畧記)	1건	
자고온포지한성약도(自古溫浦至漢城略圖)	1장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1장	해도 79호(1877.03.08.) 정보 추가
교동도약측도(喬桐島畧測圖)	1장	해도 133호(1881.04.22.)→해도 74호(1892.04.08.) 喬桐錨地. ‘1879년 다카오마루 약측’으로 기재하고 수심 표기
송도강견취도(松都江見取圖)	1장	마쓰모토(松本) 해군 소위 제작(1879.09.06.)
구진(口陳)	1건	
인천항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하는 의견(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1건	

참고자료 :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 小林茂 編, 2016, 『近代日本の海外地理情報収集と初期外邦圖』,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51쪽.

56) 『朝日新聞』 1879년 4월 6일 1면 1단.

57) 1879년 조일 양국의 교섭 안건과 협상의 진행 과정은 다음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박한민, 2011,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는 하나부사가 다카오마루 선장과 호쇼함장,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이시바타 사다(石幡貞), 가이즈 미쓰오 중위, 통역으로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太郎)와 아사야마 겐조를 대동하였다.⁵⁸⁾ 작년에 아마기함이 한산군(韓山郡)까지만 들어가 측량을 중단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보다 좀 더 거슬러 은진현(恩津縣)까지 가서 현감 정기우(鄭基雨)와 접촉하였다. 일행 가운데 가이즈 중위가 목측(目測)으로 「진강약도(鎭江略圖)」를 제작하였다.⁵⁹⁾ 가이즈는 들렀던 지역별로 “상세한 것은 별도로 기사가 있으니 모쪼록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곤도가 저술한 「진강기」를 가리킨다. 측량도와 기사를 아울러서 참고해야 금강 유역에 접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5월 12일부터는 아산만 일대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다. 곤도는 지역별로 가서 채집한 정보를 「아산기(牙山記)」로 작성하였다. 「진강기」와 마찬가지로 「아산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곤도는 『팔역지(八域誌)』에 수록된 지명과 비교하여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론된 『팔역지』는 이중환(李重煥)이 저술한 『택리지(擇里志)』를 곤도가 부산에서 사본으로 입수한 책자로, 1881년 『조선팔역지』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간행하는 책의 저본에 해당한다.⁶⁰⁾ 다카오마루에서는 「조선국 아산요지(朝鮮國牙山錨地)」란 측량도를 제작하였다. 작성일자는 1879년 5월이며, 동경 126도 40분, 북위 36도 59분 54초, 나침편차 4도 15분 4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⁶¹⁾ 이외에도 다카오마루에서는 「교동도약측도(喬桐島畧測圖)」도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1879년 9월로 기재되어 있다.⁶²⁾ 여기에도 동경과 북위, 나침편차 등의 측량 정보를 같은 양식으로 표를 만들어 기입하였다.

호쇼함장 아마자키 가케노리(山崎景則)는 작년에 아마기함이 기항하였던 비인만과 진강, 천수만을 재차 탐사하면서 조류의 흐름과 지세 등은 작년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 항구로 삼을 좋은 곳은 없다고 보았다. 그로서는 “충분히 해도를 열람하여 숙고해 보더라도 축조 비용이 약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정하는 것”이 다른 장소보다 낫다고 판단하였다. 제물포와 월미도 사이에 부두를 축조하고 도크 시설을 만드는 편이 선박 수리와 물자의 육지 운송에 편익이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제물포 내 거류지가 ‘번식(繁殖)하여 협애’해지면 가옥과 창고 등의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였다.⁶³⁾

58) 「鎭江記」,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59) 1879년 5월 陸軍中尉 海津三雄, 「鎭江略圖」,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60) 靑華山人 著, 近藤真鋤 譯, 1881, 「題言」, 『朝鮮八域誌』, 東京: 日就社. “왕년에 내가 조선국 부산포에 있을 때 등본 하나를 얻었는데, 팔역지(八域誌)라 제목을 붙였다. 즉, 청화산인이 저술하였다. 이것을 열람하니 팔도 지리, 산천, 시세 변천의 대개를 볼 수 있었다.”

61) 「朝鮮國牙山錨地」,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62) 「喬桐島畧測圖」,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3 復命書.

63) 1879년 5월 17일 海軍少佐 山崎景則→花房 代理公使, 「口陳」,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두 함선의 연안 측량은 「인천만 제물포로 개항장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작성으로 이어졌다. 의견서는 다카오마루 선장 아오키 스미자네(青木住眞)와 호쇼함장이 연명으로 기술하였다.⁶⁴⁾ 먼저 진강(鎭江)의 만과 하천을 아마기함이 전해 약측(略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시찰하였지만, 하천과 만 모두 “좋은 항구(良港)이 아니므로 측량을 중지”하였다. 아산만(牙山灣) 지역도 “애초에 좋은 항구가 아니지만” 격랑의 우려가 없는 지세이고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우선 가능한 항만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천만의 해안은 “보트로 곧바로 착안하여 왕래할 자유가 있고, 일찍이 진강과 아산에 비할 곳이 아닌 천연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부두를 신설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해륙 모두 경성에 가깝고, 왕복이 가장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안은 개항장으로 삼기에 충분하며 가장 좋은 장소”로 판단하였다. 이 소식은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나가사키로 회향한 다카오마루발 통신으로 언론에 “개항장에 적당한 지역을 측량하여 이윽고 경기도 인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⁶⁵⁾

의견서에 첨부된 지도는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 해협 약측도」에는 영종도, 물치도, 월미도, 사도, 제물포 등의 수심 곳곳을 측량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지도의 영문 제목은 ‘West Coast of Korea The Sketch of OLEE STRAIT’라고 육필로 표기하였다. 이 약측도의 제작자는 다카오마루에 승선한 미우라 기신(三浦義深) 해군 소위보와 아라키 료이치(荒木亮一) 해군 소위보 외 1명이었다. 작성 일자 1879년 9월이었다. 아울러 1876년 8월 당시 측량한 결과도 같이 기입되어 있는데,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26도 33분 50초’, ‘간만 차이 29척’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측량자는 해군 대위 나가무라 유헌(中村雄飛)와 소위 고다마 가네타카(児玉包孝), 대위 반 마사토시(伴正利)였다고 기재하였다.⁶⁶⁾ 아울러 항산도(項山島)의 투묘지에 이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해군 수로국에서 기재한 내용까지 나온다. 이렇게 조선 연안을 측량하는 작업을 해온 다카오마루는 1880년 3월 미쓰비시회사(三菱會社)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먼저 돈 후, 히젠(備前)의 호상 3명이 대가 17만 엔을 일본 정부에 지불하고 이 선박을 구입하였다.⁶⁷⁾ 1880년대 초반 조선 연안에 주기적으로 파견되어 정탐 활동을 계속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아마기함이 담당하였다.

卷5 仁川開港.

64) 1879년 6월 25일 高雄丸船長 海軍少佐 青木住眞.鳳翔艦艦長 海軍少佐 山崎景則→代理公使 花房義質, 「仁川灣濟物浦ヲ以テ開港場ト成スヘキ意見」, 『明治十二年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 卷5 仁川開港.

65) 『郵便報知新聞』 1879년 7월 14일 2면 4단.

6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는 「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이란 제목의 지도로 소장되어 있으며, 간행 연도는 1877년 3월, 해도 ‘제79호’로 난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67) 『朝日新聞』 1880년 3월 19일 2면 1단 ; 『朝日新聞』 1880년 3월 23일 2면 1단.

3. 1880년대 아마기함의 조선 연안 파견과 정탐 활동

1880년 2월 초부터 아마기함이 조만간 ‘조선해(朝鮮海)’로 도항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다.⁶⁸⁾ 이해 4월 해군경(海軍卿)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는 아마기함장 다키노 나오토시(瀧野直俊)에게 8개 조항으로 된 훈령을 내렸다. 아마기함의 조선 파견은 이번에 새로 개항하게 된 함경도 원산진과 관련하여 거류민의 보호와 무역 편리 도모에 있었다(제1조). 원산진으로 부임할 예정인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총영사와 부산에서 만난 후 그를 태우고 원산에 다녀오도록 지시하였다(제2조). 부산에서 원산까지 다녀오는 연안에 500~600톤 규모의 범선이 정박할 만한 항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제3조). 조선으로 도항한 이후 해군 이외의 관리 승선, 소총 사격이나 대포 발사 훈련 등 필요한 업무는 조선 재류 총영사나 영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제5조~제7조). 만약 조선인들이 거칠고 사나운 행동을 할 경우에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여 총영사나 영사에게 통첩하도록 지시하였다(제8조).⁶⁹⁾ 조선에 파견된 이후에는 부산과 원산 주재 외무성 관리와 협의하여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물론 아마기함의 기본 업무는 항만 탐색과 측량, 지도 제작에 있었다.

조선국 연해(沿海) 순항 중에는 원산 총영사, 부산 영사와 상의하여 두 곳 거류인민의 안녕을 보호하고, 무역의 편리를 도모해야 함은 물론, 여한(餘閑)으로 강원도, 경상도의 동안(東岸)에서 선박의 피난을 충족할 항만을 탐색하고, 그 위치를 정하여 형상을 살피는 일에 종사하고, 정밀한 지도(精圖)를 작성하여 훗날의 준거(遵據)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한다. … 단, 공사 담판의 모양에 따라 군함의 체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부산으로 복귀하여 전 조관에 기재한 내용의 준비와 더불어 측량(測量)에 종사해야 한다.⁷⁰⁾ (밑줄은 인용자)

5월 18일 부산에서 출항한 아마기함은 20일 원산에 도착하였다. 6월 2일 원산진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출항하였는데, 도중에 기상 악화로 인하여 아마기함은 강원도 통천군 장전동(長箭洞)에 잠시 기항하였다. 이 지역에서 이틀 동안 ‘항구 탐색’을 실시하면서 “해안선과 수심에 대한 약측(略測)을 실시”하였다. 4일 이곳에서 출발한 후 아마기함은 5일 아침 “울릉도(鬱靈島, 우리나라[일본]에서 마쓰시마[松島]라 칭하는 곳) 근방으로 회항”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울릉도로는 1878년에 이어 두 번째 항해였다. 아마기함 승선 장교들은 울릉도에 “항구와 정박지 등이 없고 단지 동쪽 해변에 작은 만

68) 『郵便報知新聞』 1880년 2월 6일 2면 3단 ; 『郵便報知新聞』 1880년 2월 9일 2면 2단.

69) 1880년 4월 海軍卿 榎本武揚→天城艦長 海軍少佐 瀧野直俊, 訓令,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 『花房義質關係文書』 M/F 406-5.

70) 天城艦へノ訓條大意, 「往出521 天城艦出發日限の件に付外務省へ申入」(Ref. C09114128400) ; 『花房義質關係文書』 M/F 406-5.

(灣)이 있어서 좋은 날씨라면 보트를 타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짧게 기술하였다. 아마기함은 울릉도에서 경상도 영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항구 탐색을 계속한 다음, 6월 7일 부산에 도착하였다.⁷¹⁾ 아마기함은 부산에서 원산을 왕래하면서 울릉도를 비롯하여 곳곳을 측량하면서 항구 탐색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측량도 제작은 임오군란이 발발한 이후인 1882년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기함에서 제출한 「조선국 남양만 마산포 약측도(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²⁾ 물론 새로운 실측도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개항이 확정된 제물포보다 마산포가 “도리어 나은 점은 없다”고 중함대사령관 니레 가케노리(仁禮景範)는 판단을 내렸다.⁷³⁾ 이 무렵부터 조선의 각 개항장을 순시하며 현지에서 탐문한 조선 국내의 정세 변동까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양상을 아마기함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다케조에 변리공사 도한 시기 인천항 체류와 정세 보고

임오군란 발발 이후 일본 정부는 군함 두 척이 조선의 개항장에 계박해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 한 척은 인천항에 항시 가서 정박해 있도록 명하였다.⁷⁴⁾ 1882년 11월 30일 아마기함은 바칸(馬關)에 귀항하여 인천과 부산 지역 동향을 탐지하여 정리한 문서 「조선국 근시 경향 보고」를 우편으로 해군성에 보냈다.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해군경은 이 문건의 내용을 외무경에게도 회람함과 동시에 태정대신에게도 보고하였다.⁷⁵⁾ 이듬해 1월 17일에는 일본 정부 내 참의(參議)들에게도 이 문건이 회람되어 조선 정세와 관련된 정보가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⁷⁶⁾ 「조선국 근시 경향 보고」에는 현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물포에서 영사관 건축이 진행 중이며, 전 훈련대장 저택을 공사관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육군 소대 병력이 경비를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청국 측 동향과 관련해서는 함선이 매달 6회 텐진(天津)에 가서 보고를 하거나, 상하이(上海)에 가서 군수품을 운반해 온다고 기록하였다. 근래에 조선 정부에서 척화비를 제거하였다는 점도 특기하였다. 조선 정계 내 정치 세력은 친청파가 정부 내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친청파 인사로는 김윤식, 조영하, 어윤중, 김굉집을 거론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외척 민태호는 민응식

71) 1880년 6월 9일 海軍少尉補 小掠元吉.海軍少尉 有川貞白.海軍少尉 三浦重郷→水路局長 柳檣悅.水路局副長 伴鐵太郎, 「外入313 天城艦乗組三浦少尉外2名より報告書水路局届」(Ref. C09114129500).

72) 1882년 12월 25일 海軍卿→太政大臣, 朝鮮國南陽灣麻山浦略測圖上呈, 「普4169の3 水路局へ通牒 朝鮮國麻山浦測量図を天城艦にて調製済」(Ref. C09103597500).

73) 1882년 12월 16일 中艦隊司令官 海軍少將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國南陽灣麻山浦測量圖ニ付上申, 위의 문서(Ref. C09103597500).

74) 丙號ノ四 1882년 11월 13일 太政大臣 三條實美→海軍省, 「3月9日 朝鮮國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届」(Ref. C10100941600).

75) 1882년 12월 26일 海軍卿 川村純義→外務卿 井上馨.海軍卿 川村純義→太政大臣 三條實美, 普第4136號ノ3,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76) 1883년 1월 17일, 「天城艦報告朝鮮國ノ近況」(Ref. A03023650600).

(閔應植). 민공식(閔肯植) 형제와 다르게 처신하여 국왕과 왕비로부터 배척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민영익은 “일본당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청파에 대항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보정부(保定府)에 유배된 대원군 외에 왕족 이재원(李載元)과 이재면(李載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현명하지 않다’거나 ‘완고’하다는 평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부산포를 잠깐 들렀을 때의 조일 상인 간의 교역 현황을 언급하였는데 ‘점차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선의 대일 수출품은 콩과 쌀이며, 곡물 매입은 조선 동전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지 않다고 소개하였다.⁷⁷⁾

12월 28일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변리공사는 수신사 박영효 일행과 요코하마를 출발, 이듬해 1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⁷⁸⁾ 이로부터 5일 후 다케조에는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하였다.⁷⁹⁾ 이 소식은 2주 후 일본 정부에도 외무경을 통해 보고가 되었다.⁸⁰⁾ 1월 19일에서 아마기함장은 인천에서 근황 보고를 실시하였다. 한성과 제물포 모두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서 외무성 관리들의 출항과 부임 소식, 조선 정부의 신설 아문으로 ‘내무기무아문’과 ‘외무기무아문’, 직책에 임명된 관리 명단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독일인 뮐렌도르프에 대하여 “이번에 조선국에 와서 자국 풍속을 바꾸어 조선의 의관을 입고 그 나라 직책을 받들어 내외의 기무에 참여”한다고 소개하였다. ‘목린덕(穆麟德)’이란 이름은 조선 정부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였다.⁸¹⁾

2월 12일자 보고에서는 조선의 ‘개혁 아문’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명단을 정리하였다. 관서는 ‘군국사무아문’과 ‘총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직책과 임명자 명단, 의정부 및 지방관, 6조 관리의 명단을 제시하였다. 1월 24일 민영익이 중국 선박에 승선해 출항한 것은 ‘해관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파악하였다.⁸²⁾ 이 외에는 장악원에 주둔 중인 일본병사 가운데 각기병에 걸려서 사망한 자가 5명, 치료를 받는 자가 1중대 안에 5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2월 21일에도 아마기함장은 니레 중함대사령관에게 조선 내 상황을 견문하여 보고하였다.⁸³⁾ 조선 정부 내에서 ‘완고당(頑固黨)’은 그대로이고, ‘개화당(開化黨)’은 일본과 중국으로 나누어져 “알력이 심한” 상태로 파악하였다. 국왕의 특단으로 불필요한 관리와 과세를 줄이

77) 朝鮮國近時景況之報告, 「普4136の2 太政官届 天城艦仁川釜山等停泊中探知の景況」(Ref. C09103598300); 「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Ref. A03023650600).

78) 박한민, 2015, 「유길준 《世界大勢論》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 외 지음,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65쪽.

79) 竹添進一郎, 『赴韓日記』, 1883년 1월 10일.

80) 公第15號 1883년 1월 24일 外務卿 井上馨→太政大臣 三條實美, 「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Ref. A03023650600).

81) 城3第10號 当灣近況之報告, 1883년 1월 19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Ref. A03023650600).

82) 城3第17號 韓京并仁川灣近時之景況報告, 1883년 2월 12일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Ref. A03023650600).

83) 1883년 2월 21일 朝鮮政府及京城近時之景況報告, 天城艦長 瀧野直俊→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 「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Ref. A03023650600).

고자 하고 있지만, “무상의 가난함” 때문에 “충분히 개화에는 이르지 않는” 상황으로 보았다. 이번에 개혁을 단행한 관서와 직원 명단은 ‘군국사무아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기존 관서의 보직자 명단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의 이름만 일본식 한자 발음에 입각하여 ‘홍순박(洪淳朴)’으로 오기한 것만 제외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한 명단이었다. 민영익과 밀렌도르프의 상하이행은 관세 조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과의 조약 체결과 100만 엔 정도의 외국채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적었다. 함경도에서는 초적(草賊)이 안변(安邊) 지역에 준동하여 판찰관과 일본인 거류지를 습격하러 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원산 주재 마에다 겐키치 영사가 호위 군함을 요청한 사실도 기록하였다. 실제로 원산 재류 일본인 가운데 일부가 ‘한행이정(間行里程)’을 벗어나 안변 지역까지 진입하였다가 조선인들과 충돌하여 살상 사건으로 이어진 선례가 1882년 3월 31일에 발생한 적이 있었다.⁸⁴⁾ 안변에서 초적이 습격하러 올 수 있다고 하는 풍문을 듣고 마에다가 호위 병력을 원산에 파견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전년에 경험한 사건의 기억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기함은 히에이함(比叡艦)과 교대하기 위해 바칸으로 회항하였다.⁸⁵⁾ 1월과 2월 중 제물포에 정박하면서 아마기함장이 견문하여 채록한 보고 문건은 3월 20일 니레 중함대사령관이 가와무라 해군경에게 일괄 제출하였다.⁸⁶⁾

2) 마에다 부산총영사 일행의 남해안 시찰과 신문 보도

1883년 당시 아마기함은 인천에만 정박해 있던 것이 아니었다. 4월 17일부터 5일 동안 경상도 남해 연안의 통영(統營)과 거제(巨濟), 마산포(馬山浦)를 순시하였다. 통영으로의 항해는 이미 1880년 11월 28일에 한 차례 있었다. 이때 통영의 중군 우후 김병철(金炳哲)이 문정하러 함선을 방문하였다. 김병철은 아마기함의 선체 내부를 둘러보고, 공포 발사와 보트 훈련, 총기 사용법 등을 관람하였다. 통제사 측에서는 백미와 계란 등의 식품류를 증여하였고, 아마기함에서는 답례품으로 이불, 부채 등을 주었다고 한다.⁸⁷⁾ 1883년 아마기함에는 마에다 겐키치 총영사, 니시(西) 해군 중위, 통역 쓰에 나오스케(津江直助), 혼간지(本願寺) 별원의 오타 유케이(太田祐慶), 스즈키 준켄(鈴木順見), 조선인 통역이 승선하였다. 조선인 통역은 동래부사가 통제사에게 보내는 서류를 휴대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의 종자로 일행을 따라간 자가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한이 센타로(半井泉太郎)로, 그는 기행을 다녀온 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 기사를 투고하였다.⁸⁸⁾

84) 박한민, 2014,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 150~156쪽.

85) 『朝野新聞』 1883년 3월 2일 1면 4단.

86) 1883년 3월 20일 中艦隊司令官 仁禮景範→海軍卿 川村純義, 朝鮮国近景等報告の義に付御届(Ref. C10100941600).

87) 『東京横濱毎日新聞』 1880년 11월 27일 2면 4단.

88) 『아사히신문』 특파원으로 부산에서 오래 활동한 한이 센타로(半井桃水)의 전반적인 활동은 다음 연구

마에다 일행은 4월 17일 오후 6시 통영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다키노 아마기함장과 사관 10명, 니시 중위 등의 일행이 상륙하였고, 통제사 이원회(李元會)와 만났다.⁸⁹⁾ 19일에는 통제사의 종사관 심의영(沈宜永)과 면담을 한 후 3도 소관 병력 3만 5,878명, 대소 선함 548척, 성 내외의 인구 3만 2천 여 명, 지역 특산물, 시장 개설 등을 조사하였다. 20일에는 물길안내인을 소개받아 거제로 이동하였다. 도착 후 마에다 총영사와 아마기함장, 통역 등의 수행원이 상륙, 제승루(制勝樓)에 올라가 거제부백 윤영규(尹泳奎)와 만났다.⁹⁰⁾ 21일에는 마산포로 이동하였다. 마산포는 “영국인이 가장 주목할 정도”의 장소로 “항구가 꽤나 광대”하였다. 이들은 창원부백(昌原府伯) 최치영(崔致永)을 만나러 보트를 이용하였다. 마에다 총영사와 사관들, 통역 등이 동행하였다. 마산포의 호수는 3천 5백으로 상인들이 많으며, 물산은 곡물과 목면, 사금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최치영은 종자들을 데리고 답례 겸 아마기함을 방문하였고, 함내를 구경한 후 돌아갔다. 다음날 오전 8시 아마기함은 마산포에서 출항하였고, 정오에 부산으로 귀항하였다. 기행문의 필자는 통영과 마산포 근처에 일본 군함이 들렀다고 하여 상륙을 거절당하거나, 조선인이 돌팔매질로 공격하는 일 없이 우호적으로 맞이해 준 점에 대하여 조일 양국의 교제가 점차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친밀해짐을 강조하려는 입장에 서 있었다.⁹¹⁾ 부산으로 복귀한 아마기함은 체류 일정을 마친 후 귀항하였고, 6월 9일에는 고베로 이동한 다음 도쿄로 돌아가는 일정을 밟았다.⁹²⁾ 이해 10월 인사 발령으로 아마기함장 다키노 나오토시는 아즈마함장(東艦長)으로, 곤고함 부함장(金剛艦副長) 미우라(三浦) 소좌가 아마기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⁹³⁾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청일전쟁 발발과 아마기함

1880년대 이후 아마기함이 다시 조선에 파견되어 지역에 대한 정황을 보고하는 기록은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9월에 등장한다. 9월 20일 아마기함장 하야사키 겐고(早崎源吾)는 상비함대사령관 이토 유코(伊東祐亨)에게 9월 15일부터 5일 동안 대동강 경비를 위해 어은동(漁隱洞) 일대에서 전개한 활동을 보고하였다.⁹⁴⁾ 9월 15일은 평양 전투가 시작된 날이

가 상세하며, 1883년 당시 마에다 일행의 경남 연안 지역 시찰에 참여한 내용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上垣外憲一, 1996, 『ある明治人の朝鮮觀：半井桃水と日朝關係』, 東京: 筑摩書房.

89) 『朝日新聞』 1883년 5월 4일 3면 4단~4면 1단.

90)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昨日の續)」 『朝日新聞』 1883년 5월 6일 3면 4단~4면 1단.

91) 「在朝鮮釜山半井泉太郎紀行(一昨日の續)」 『朝日新聞』 1883년 5월 8일 3면 4단~4면 1단 ; 上垣外憲一, 1996, 앞의 책, 212쪽.

92) 『朝日新聞』 1883년 6월 12일 1면 2단.

93) 『朝日新聞』 1883년 10월 12일 1면 1단.

94) 1894년 9월 20일 天城艦長 早崎源吾→常備艦隊司令長官 伊東祐亨 軍艦天城大同江回航報告, 「明治28年 朝鮮国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었다. 대동강 입구를 경비하는데 아마기함 외에 반조(磐城)와 야마시로마루(山城丸)가 동원되었다. 16일에는 철도(鐵島), 17일에는 기진포(棋津浦) 일대에 보트를 파견하여 정찰 활동을 벌였다. 이때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중영장(中營將) 토포사(討捕使) 아문 외막(外幕) 김광찬(金光燦)과 박영숙(朴永叔)이 위문을 한다면서 아마기함을 방문하였다. 이들과 접촉하면서 육군 병력의 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 18일에는 해양도(海洋島) 부근에서 함대의 개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 강의 경비를 위해 투묘자를 석도(席島)로 옮겼다. 19일 함선이 기진포로 이동한 후, 병참부 사령관 육군 기병소좌 야마가타 요시아키(山縣則顯)가 함선을 찾아와 평양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육지에서 전투 소식이 함선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인근 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야마가타의 전언에 따르면 9월 15일 전투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해질 무렵 청국군이 백기를 게양한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야간에 불의의 급습이 있어 여기에 전군이 분격하여 다음날 새벽에 입성하였다. “적군의 사상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없고, 사체가 도로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일본군에서는 “중위 아무개 한 명이 즉사하고, 기타 사상자는 각 중대마다 5~6명 정도의 비율”이었다고 기록하였다. 9월 16일 육군에서 평양 전투 직후 현지에서 상황을 타전한 두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전언과 비교해 볼 만하다.

어제 이래 사단이 평양을 포위하고 격전을 한 후 대승리. 오늘 아침 미명에 완전히 평양을 약취(略取)하였다. 적의 사상을 포함하여 다수이고, 우리 군 장교 이하 사상은 약 3백명이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16일 오전 8시 노즈(野津)

사단은 양식 운수의 커다란 곤란에도 불구하고, 각도에서 평양을 향하여 전진하여 어제 도착한 성의 사면을 포위하고 격렬한 전투를 하던 중 큰 승리를 얻어 오늘 아침 미명으로 완전히 이를 약취하였다. 적의 대장 좌보귀(左寶貴) 이하 사상, 생포. 기타 병기, 미곡으로 우리 수중에 떨어진 것이 극히 다수이다. 적의 병력은 2만을 칭하는데, 어제 이래 한 두 개의 무리를 이루어 우리 초병선(哨兵線)을 도망하였을 뿐이다. 기타는 대개 사상 및 포로가 되었다. 우리 군의 사상은 장교 이하 약 3백명이다.⁹⁵⁾

승전 소식을 접한 후 아마기함장은 다시 어은동으로 복귀하여 강 입구의 경비를 계속하였다.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군령부장(軍令部長)의 명을 받고 다음날 어은동에서 떠났다.

이 글에서는 1870년대 하나부사가 초량 왜관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려 조선에 파견될 때 승선하였던 가스가함의 활동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1875년 9월 운요함 사건 발발 이후 이듬해 2월에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부산 외 두 곳의 개항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

95) 1894년 9월 16일 오후 1시 50분 中和 發 野津 師團長 전보, 「明治28年 朝鮮国派遣中特別書類 連合艦隊司令長官(14)」(Ref. C08040631400).

견되었던 다카오마루, 아마기함 등 일본 군함이 연해에서 어떠한 측량 활동을 벌이고,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을 남겼는지 검토하였다. 측량 기록은 해도로 작성되었고, 해를 거둬서 측량 작업을 거둬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항해일지 내용 가운데 일부를 편집, 가공하여 『수로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에 게재하면서 관계자의 활용도를 높이려 하였다. 여기서는 조선 연안을 측량하였던 여러 일본 군함 가운데 아마기함이 18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전개한 활동을 부각시켜 복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개항 초기 조선 연안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항해일지와 견문록, 해도를 작성한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함선이기 때문이다.

아마기함의 활동을 동해 연안과 울릉도 측량으로만 국한해서 접근한다면 개항 초기 일본 군함의 정탐과 측량 활동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측량 정보의 축적과 연속성은 이듬해 다른 함선의 개항장 선정에서도 기록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조선 연안을 수시로 왕래한 일본 함선의 측량 기록은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산과 인천이 개항된 이후 조선에서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발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항장에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상주하는 군함이 늘어났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각 국면별로 조선의 여러 개항장에 정박하면서 조선의 내정 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작업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기에 조선의 여러 개항장에 상주하면서 연안을 빈번하게 왕래한 군함이 남긴 보고 기록을 추적하고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군의 조선 정탐」 토론문

이승원(수원대)



제2주제

청일전쟁 시기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 문제



김봉준
(인천대)

청일전쟁 시기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 문제

김봉준

- I. 서론
- II. 조선에서의 전황과 패잔병의 발생
- III. 조선의 치안 상황과 일본의 치안권 간섭
- IV. 결론

I. 서론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역내의 세력 균형이 전환된 기점이자, 조선에 대한 청의 우월적 지위가 일소되는 결과를 낳은 전쟁이다. 전쟁과 전후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은 명목상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실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보호국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전통적인 조공·책봉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조공 사절 등 조청 양국의 정기적인 관례 또한 중단되었으며, 청이 조선에 파견한 상무위원이 모두 철수하는 등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 전쟁은 조·청·일 각국의 내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청 내부에서는 패전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조선은 청의 속국에서 벗어나 명목상 독립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은 스스로 근대 국가임을 표방하면서 임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후 제국주의적 확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동아시아 역내 세력 균형이 전환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일전쟁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자 각국의 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전쟁으로 각기 다른 의미 부여와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시점에 관한 문제를 통해 한일중

삼국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일전쟁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 각각의 차이를 만들어 냈으므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청에 먼저 선전포고를 한 일본의 경우, 전쟁의 공식적인 기간은 선전 조서를 공포한 1894년 8월 1일에서부터 전후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1895년 4월 17일까지를 전쟁 기간으로 본다. 이에 관해 오타니 다다시는 선전 조서를 공포하기 전에 선전의 대상을 '청국(淸國)'으로 할지 '청국 및 조선국'으로 할 것인지 일본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군이 선전포고 이전인 7월 23일에 조선군과 교전하여 조선 왕궁을 점령하면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오타니의 지적은 청일전쟁을 청과 일본만의 전쟁으로 규정함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¹⁾

또한 하라다 게이치는 조선의 동학 의병과 전투 역시 청일전쟁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시점 이후에도 조선에서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선 역시 전쟁 당시 일본의 주요 상대국이었다고 봐야 함을 지적한다.²⁾ 히야마 유키오 또한 대만에서의 전투를 사례로 들어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이 청일전쟁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대만 민주국과의 전투까지 청일전쟁(日淸戰爭)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1896년 4월 1일 일본 대본영이 해산하는 시점을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³⁾ 히야마의 설명은 일본 정부가 대만 평정 선언을 한 1895년 11월 18일보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라다 게이치 역시 히야마와 같은 관점에서, 청일전쟁의 폭넓게 해석하여 청과의 전쟁, 조선과의 전쟁, 대만(민주국)과의 전쟁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쟁이었음을 주장한다. 또 하라다는 청일전쟁의 기간을 1894년 7월 23일부터 1896년 3월까지로 설정하여 히야마보다는 약간 짧게 그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조선과 대만에서의 전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히야마와 하라다의 해석은 일본 측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선과 대만까지 포함하여 전쟁의 성격, 기간을 재해석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

1) 大谷正, 『日淸戰爭』, 中公新書, 2014, pp.i-iii. 또한 오타니 다다시는 전쟁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주목한다. 1894년 조선에서 발발한 이 전쟁을 청일전쟁/일청전쟁, 또 국가에 따라 제1차 중일전쟁, 항일전쟁, 중동전쟁 등의 호칭을 붙이면서 자국 중심의 역사관 혹은 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인식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부여해 왔음을 지적한다. 전쟁의 종료 시점에 관해, 1895년 4월 17일에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되고 5월에는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것을 두고 이때를 기점으로 전쟁이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약 문건 상에서 대만과 평호 열도 등지를 일본이 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할양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일본군은 대만에서 대만 민주국의 군대 및 원주민(原·漢) 의용병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일본군이 대만에서 대만 민주국을 상대로 5개월 동안 전투를 벌인 사실은 '점수'보다는 '점령'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물론 대만 민주국이 실제로는 대만의 할양을 무산시키려는 청의 시도가 좌절되고 서구 국가의 외면으로 생겨난 국제적 고립과 그 자구책으로 급하게 세워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만 민주국은 실제 1년도 채 유지되지 못해 자멸에 가깝게 사라진 정권이었지만, 일본과 교전한 국가의 범위를 넓게 가져본다면 대만 민주국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原田敬一, 『日淸·日露戰爭』, 岩波書店, 2007, p.86-87.

3) 檜山幸夫, 「日台戦争論—台湾接收時における台湾での戦争の呼称問題を中心に—」, 『帝国日本の展開と台湾』, 創泉堂, 2011. 이 글에서는 대만민주국의 항거까지 청일전쟁의 범주에 넣고 있다.

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전쟁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청과 일본의 관점만으로는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⁴⁾

한편 청일전쟁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점과 해석은 중국과 일본의 학설을 받아들이면서, 전쟁 당시보다는 전쟁 이후의 상황과 조선의 내부 정치 및 주권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전쟁 기간 중 조선 정부에서 시행한 갑오개혁에서 일본의 강화된 조선 내에서의 영향력을 전제하고, 전쟁부터 아관파천으로 이르는 이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94년부터 조선 정부의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우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내정 개혁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⁵⁾

따라서 청일전쟁의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일 양국의 군사적 성패와 전후처리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당시 조선의 실정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1894년 이후 청 패잔병 처리 사안은 조선 정부의 전쟁 참여와 실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통해, 전쟁 기간 중 청과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의 발발과 종료 시점을 다시 한번 재고찰함으로써 청일전쟁에서 조선의 지위와 처지에 관한 문제를 환기하고 전쟁의 의의와 해석에서 조선의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다. 위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일안(日案)』과 『첩보존안(牒報存案)』, 『고종실록』⁶⁾ 등에 있는 청일전쟁 당시 패잔병 관련 기록을 주로 참고했다. 『일안』은 근대 조일관계 자료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년 편찬한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가운데 『일안』의 원본이 된 사료이다. 현재 그 필사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894년~1895년에 해당하는 제29책과 제30책에 청일전쟁 시기의 공문이 수록되어 있다.⁷⁾ 또한 『첩보존안(牒報存案)』은 1895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선 각 지방의 감영(監營), 감리서(監理署)에서 중앙 정부로 보낸 첩보(牒報)를 정리한 자료로 1895년 조선 중앙과 지방

4) 청일전쟁을 갑오전쟁(甲午戰爭)이라고 지칭하는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 전쟁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선에서의 전투, 두 번째 단계는 구련성 및 여순 등지의 전투, 세 번째 단계는 위해위 및 오복 해역, 영구 등에서의 전투로 나누고, 전쟁의 종료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한다. 청 본토에서의 전투에 좀 더 집중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대만에서도 대만에서의 전역과 대만 민주국을 전쟁 상대국 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만 민주국이 실제 청의 괴뢰국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해석 역시 일본의 기존 해석과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5) 議政府(朝鮮) 編, 『誓言』, 189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5294). 일부 연구에서는 일본 내에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는 명분이 조각으로부터 충분히 설득력과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 정부의 반발을 얻는 바람에 입지가 축소되었음을 지적한다(조명철, 『청일·러일 전쟁의 전후처리와 한국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2010, pp.264~265).

6) 『고종실록』은 DocuSky(<https://docusky.org.tw/>)의 公開資料庫에 있는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編, 국편영인본)』 판본을 이용했으며, Corpus Grams Tool을 활용하여 관련 언어 및 표현의 사용 유형, 빈도, 시기 등을 초보적으로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키워드: 淸兵, 東匪, 匪類, 淸匪).

7)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日案』, 第29冊~第30冊, 1894~1895年(高宗31~32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9572-v.29, 30).

의 상황을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동학 토벌, 청 패잔병과 관련된 보고를 비롯하여 오토리 게이스케, 이노우에 가오루 등 일본 공사와 주고받은 공문 또한 포함되어 있어, 1895년 청일전쟁 후반기 조선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⁸⁾

청일전쟁 시기 조선과 대만에서의 전역은 이른바 "작은 전쟁(Little war)"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청의 속지(屬地)였던 대만까지 일본의 전쟁 상대국에 포함하는 것은 전쟁의 성격과 경과를 재해석할 수 있다면, 청일전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일전쟁이 청과 일본의 관점과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관련 국가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그 상호영향에 주목하고, 전쟁의 실상과 이면에 주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조선의 전황과 패잔병의 발생

(1) 정연하지 못한 패주, 낙오하는 병사

우선 조선 영내의 전투에서 청의 패잔병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4년 6월 8일, 동학교도를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아산만 부근에 섭지초(葉志超)·위여귀(衛汝貴) 휘하 청군 3,000명(선발대는 1,000명)이 상륙해 주둔하고 있었다.⁹⁾ 일본군은 7월 8일 경 인천에서 상륙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8,000명에 달해 있었다. 조선에서 청군과 일본군의 첫 번째 전투는 1894년 7월 25일에 일어난 풍도 해전으로, 이 전투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 함대에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 아산의 청군 진영과 본국과의 보급로가 차단되었다.¹⁰⁾ 사흘 뒤인 7월 28일, 천안 부근 성환읍에서 벌어진 성환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청군을 패퇴시키게 되면서, 일본군은 전쟁 초반부터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1894년 6월에 고종은 아산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이 부근 백성과 민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현영에게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지시했다.¹¹⁾ 또한 아산 일대에 주둔한 청군에 대한 물자 지원은 해당 지방과 지방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¹²⁾ 청

8) 內閣(朝鮮) 編, 『牒報存案』, 1895年(高宗32年), 1冊(29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7247).

9) 『고종실록』에 의하면, 조선 정부는 이중하(李重夏)를 영접관(迎接官)으로 보내 아산에 주둔하게 될 청군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5월 1일 정축 4번째 기사).

10) 제노네 볼피첼리(유영분 譯),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살림, 2016, p.223; 조재근, 2024, p.243. 볼피첼리는 풍도 해전에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이 전투로 청군의 보급선을 비롯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청군이 패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점이 되었다. 일본군이 서울 경복궁에 진입한 시점은 풍도 해전보다 앞선 7월 23일이다.

11) 『고종실록』 第31卷, 1894年(高宗31年) 6월 13일 기미 1번째 기사.

12) 차경애,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 14, 2008, pp.68~72; 조재근, 『조선인

일 양군의 전투가 발생하기 전부터 동학 세력뿐만 아니라 청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후 풍도와 성환의 전투에서 패배한 청군은 평양에 병력을 집결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기도하였으나, 같은 해 9월 중순 평양 방어에 실패했다. 압록강 해전에서도 패배했다.¹³⁾ 또한 평양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일본군이 서울에 진입함에 따라 당소의(唐紹儀)를 비롯한 청국 관원이 대부분 조선을 떠나야만 했다. 조선 내에서는 청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었다.

잇따른 패전과 보급의 단절로 조선 영내의 청군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1894년 7월 말부터 해로를 통한 복귀로가 차단된 청군은 연패로 인해 대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육로를 통해 귀환하고자 함경도를 향해 퇴각하기 시작했다. 패주하는 청군에게 조선 정부의 협조를 통한 현지조달만이 보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으나, 주둔 시기부터 청군의 무리한 요구 및 무단 행위로 조선 측 지방관들이 청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청군은 강제로 물자를 조달하거나 일대 민가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물자를 조달했다. 이러한 청군의 행동은 지방 관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선 관민에서 팽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¹⁴⁾

(2) 패주 속에서 자행되는 약탈

청일전쟁에서 청군은 일본군에 연달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대오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조선 영내에 패잔병들을 남기고 패주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기록에 따르면, 평양 전투 이후 청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어 청군 병사들은 그저 도망가는 것에 혈안 되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¹⁵⁾

1894년부터 1895년 초까지 청군의 패주로는 아산 방면에서 평양을 거쳐 봉황성까지 이어졌으며, 조선 영내 격전지 일대와 패주로는 부상병 이외에도 부대에서 낙오한 패잔병이 산재하고 있었다. 성환 전투 이후, 일본군은 충남 아산 일대에 배회하는 청국인 30여 명을 포착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아산, 면천, 예산 일대에서 백성들을 협박하고 약탈을 자행했음

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2024, p.270.

13) 조재곤, 2024, pp.566~567, p.582. 일본 측 기록에는, 평양 전투에서 560여 명의 포로가 발생했음을 밝히고 있다. 포로의 숫자는 보도 기사 및 보고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평양 전투에서 대략 500~700명 정도의 포로가 일본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도쿄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군 포로 중 489명 病死 3명, 부상 119명, 부상 후 사망 26명, 도주 및 참살 47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조선인 포로도 11~12명이 있었다. 청군 포로 중 일부는 일본군에 끝까지 대응하다 즉시 처형을 당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밖에 일본 측에서는 성환 전투에서 포로 3명, 풍도 전투에서 78명(장교 6명, 하사 이하 72명)을 송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조선에서 일어난 청일 양군의 전투 가운데 평양 전투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조재곤, 2024, p.266~274. 성환 전투로 인해 일대에 큰 피해가 있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관들도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15) 제노네 볼파첼리(유영분 譯), 2016, pp.191~192.

을 조선 정부에 알렸다. 계속되는 패전과 보급의 상실로 인한 청군의 낙오와 약탈은 청군 지휘관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기율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본국으로 퇴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¹⁶⁾

특히 청군의 약탈로 인한 피해는 건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아산, 성환과 같은 충청도 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전투가 있었던 함경도 일대에도 9월 이후부터 청군의 약탈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당시 일본 측 종군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함경도 일대에서 약탈로 피해가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피해 규모를 뛰어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함경도 일대에서는 청군이 휩쓸고 간 이후에도 동학 잔존병¹⁷⁾이 치안의 균열을 타고 유입되어 약탈을 자행했으며, 일대의 치안은 물론 백성의 생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⁸⁾ 패주하는 청군뿐만 아니라 조선 영내에 남아 있는 청 패잔병은 조선의 각 지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동학 잔존병 역시 일본군을 피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치안이 약한 지역에 자리잡고 조선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즉 당시 약탈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은 청의 패주로에 있던 함경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895년 이후 함경감영이 대대적인 청 패잔병 및 동학 잔존병 소탕 작전을 벌이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지방관 가운데 의주 부윤과 같은 조선 지방관 일부는 패주하는 청군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청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¹⁹⁾

평양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앞선 풍도 해전에서 조선 연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일본군은 청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26일에 압록강 도하를 시도했으며, 압록강을 건너는데 성공한다.²⁰⁾ 청 본토로의 진격을 앞둔 일본군의 앞에는 구련성(九連城)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일본군은 구련성까지 접수하였다. 청군은 봉황성(鳳凰城)까지 퇴각할 수밖에 없었으나 봉황성까지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 전쟁이 향방이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청군의 동향과 행적을 주시하고 있었다.²¹⁾

16) 多田省刊編, 『日清戰爭史』, 一二三館, 1897, p.49.

17) 본고에서는 동학에 참여했다가 1894년 후반 이후 동학군이 와해되면서, 일정한 지휘통제 체제 밖에 있는 동학의 무장병력을 잔존병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동학 비적이라는 뜻에서 동비(東匪)로 지칭하고 있다.

18) 차경애, 2008, pp.79~81.

19) 조재곤, 2024, pp.542~546. 아울러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피해 상황에 관해서는 차경애, 2008을 참조. 여기서는 평양 전투 이후 조선 측 피해가 상당했으며, 특히 지방관의 임지 이탈과 직무 유기가 더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해임된 평양감사 민병석이 계속 평양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지방 통치의 기강이 악화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차경애, 2008, p.76.). 청에 협조를 거부한 의주 부윤의 사례도 당시 청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군에 협조한 지방관도 있었다. 定州 牧使 趙贊顯은 일본군에 협조하여 물자 등을 제공하였으며, 일본군은 이에 대해 조지현을 표창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井上響→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초5일, p.16a). 전쟁의 향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조선 정부는 일본군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894년 10월에 의주 선유사 권영진은 일본군에게 물자를 보급해 주기도 했다(井上響→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1월 9일, p.51ab).

20) 제노네 볼피첼리(유영분 譯), 2016, pp.228~229.

21) 平安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3월 26일, p.16a.

1894년 하반기부터는 청일 양군의 주요 전역(戰域)은 청 본토로 옮겨 갔으나, 아직 조선에서의 총성은 그치지 않고 있었다.²²⁾

III. 조선의 치안 상황과 일본의 치안권 간섭

(1) 청 패잔병·동학 잔존병·비적의 횡행, 불안한 치안

주 조선 일본공사관은 1894년 초부터 동학 세력의 동태를 예의주시한 바 있으며, 동학 교도가 서울로 진격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에 대해 조선 정부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²³⁾ 그리고 일본 영사관 측은 전라 지역에 있는 자국 상민의 명단을 조선 측에 보내면서 이들의 보호를 요청하고 항구로의 피신을 지시했다.²⁴⁾ 5월 9일에 오토리 공사는 일본군 300명이 인천에 도착했음을 조선 정부에 알렸으며,²⁵⁾ 조선 정부는 일본군의 서울 진입과 주둔에 대해 조약에 위배 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할 경우, 조선 백성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며, 청 측과의 충돌에 대해 염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대리공사 스기무라는 자신은 오토리를 대신한 대리공사일 뿐이며 이미 정해진 주둔 결정을 자신이 철회할 수 없다는 핑계를 들어 조선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서울에 주둔하였다.²⁶⁾

이미 일본은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94년 8월 26일에 조선 정부와 《조일동맹조약(朝日攻守同盟條約)》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제3조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과 일본이 강화조약을 맺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는 등 전시에 한정되는 임시조약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조선 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청군과 전투를 벌이는 일본군에게 군량과 인부 징발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²⁷⁾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 정부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

22) 이성환, 『청일전쟁』, 살림, 2021, p.141.

23) 大石井巳→趙秉稷, 『日案』, 제22권, 1894년 2월 28일, p.106a; 趙秉稷→大石井巳, 『日案』, 제22권, 1894년 2월 28일, p.106a, p.107a.

24) 『日案』, 제27권, 1894년 4월 27일, 5월 5일, pp.136~143, p.151.

25) 衫村濬→趙秉稷, 『日案』 제28권, 1894년 5월 초6일, p.15a.

26) 衫村濬→趙秉稷, 『日案』 제28권, 1894년 5월 초7일, p.16a~20a.

27)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22일 병신 3번째 기사. 이 조약의 정확한 명칭은 《大朝鮮大日本兩國同盟條約》으로 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一條: 此盟約, 以撤退清兵于朝鮮國境外, 鞏固朝鮮國獨立自主, 而推充朝、日兩國所享利益爲本。 第二條: 日本國既允擔承與清國攻守爭戰, 豫籌糧餉等諸項事宜, 必須襄助予便, 不遺餘力。 第三條: 此盟約俟與清國和約成日, 作爲罷約。 이후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해관의 납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일본 측의 요구로 추가되었다(井上馨→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1월 12일, p.69b, p.70a.).

본은 조선 각지에 주둔지와 병참기지를 건설하면서 조선 각지를 사실상 일본군의 작전 지역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²⁸⁾

조약 체결에 앞서 1894년 8월 19일, 일본 특명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성환과 아산의 패전으로 발생한 청 패잔병이 함경·강원 지역으로 넘어갔으며, 일대의 백성을 약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조선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알렸다. 그리고 오토리는 청 패잔병의 약탈이 사실인 경우, 일본 측이 나서 청 패잔병을 조선 경내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조선 각지의 지방관에 일본군의 청 패잔병 토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²⁹⁾ 이후 동학 잔존병에 의해 일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측은 조선 정부 측에 범인의 색출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는 등 조선 내에서의 군사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³⁰⁾

이후 11월 6일, 이노우에 가오루가 김윤식에게 보낸 서신에는 일본군이 아산·옥천 지역을 순찰하면서 예산 일대에 청 패잔병 30여 명이 잠복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조선 정부에 보낸다. 이노우에의 서신에 따르면 이들은 9월경 공주 방면으로 패주하면서 근처 빈 절에 들어가 있던 자들로 정산(定山) 지역의 지방관을 협박하여 자금을 요구하는 등 일대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김윤식에게 알렸다. 또한 이노우에는 청 패잔병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조선과 일본의 상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니 이를 조사해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조선 측 지방관의 협조를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³¹⁾ 이에 김윤식은 청 패잔병이 동학 잔존병과 합세하거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으며, 실제 청 패잔병 일부는 비적이 되거나 동학 잔존병에 합류하여 그들에게 조력하기도 했다.³²⁾

1894년 10월, 청주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이 동학 잔존병에 의해 섬멸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충청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에 일본군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실상 작전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치를 단행했다.³³⁾ 이는 조선군의 열악한 작전 능력으로는 동학 잔존병을 평정하기 역부족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 패잔병과 동학 잔존병이 조선 경내를 계속 배회하면서 피해를 주고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수습하고자 일본군에 치안권과 군사작전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당시 조선 정부는 정산·예산 등지에 남아 있는 청 패잔병이 비적과 합세하는

28) 당시 조선 영내에 있는 일본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원활한 보급이었다. 먼 본국에서 보급이 오기에는 많은 시일과 인력이 소모되었으므로 일본군은 현지 보급과 지원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일본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조선 경내에 있는 일본 상민의 보호를 조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29) 大島圭介→金允植, 『日案』, 제29권, 1894년 8월 19일, p.17a.

30) 井上響→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초5일, p.19ab.

31) 井上響→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9일, p.33ab.

32) 金允植→井上響,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초10일, p.40a.

33) 金允植→井上響,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초10일, p.41a. 당시 조선에는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는 강화병의 군대가 그나마 군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여 일본군의 지원 없이는 출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金允植→井上響,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16일, p.68ab.).

상황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군에서 실제 진압에 나설 수 있는 병력과 군비 상황은 열악했으며, 사실상 일본군의 협조가 없이는 이들을 토벌하고 치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외무대신 김윤식 또한 청 패잔병과 비적 토벌을 위해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협조를 구하고자 했으며, 조선군과 협력하여 토벌에 나서주길 원하고 있었다.³⁴⁾

이러한 상황은 일본군에게 조선에 병력을 증파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치안 및 군사 작전을 일본군이 주도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 영내에서 일본군의 작전을 보장받는 기회가 되었다. 김윤식의 요청을 받고 일본 측은 즉각 조선 영내의 비적 토벌을 구실로 일개 중대를 증파할 수 있었다.³⁵⁾ 조선 주둔 일본군을 늘어나면서 청 본토에 진출해 있는 부대의 예비대를 가까운 조선에 주둔시킬 수 있었으며, 간접적으로는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이노우에는 조선에 남아 있는 청국 상민을 통제하는 일에도 관여하려고 했다.³⁶⁾ 사실상 일본의 청국 상민 관리는 “보호”보다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시 상황에서 청국 상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만이 보장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조처는 조선에서 청국 상민의 간첩 행위 및 유란을 방지하고, 조선으로 새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³⁷⁾ 한편으로 전황을 구실로 민간 영역의 청국 상민까지 통제함으로써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일소하고자 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2) 토벌 작전의 수행과 일본군 주둔의 허용

전쟁 당시 조선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불안해진 치안을 바로 잡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조선 정부는 영내에 산재해 있는 소수의 청 패잔병을 처리하는 일보다 동학 잔존 병력과 비적을 소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청일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에 걸쳐 비적으로 인한 치안의 불안 및 재산상의 손실은 당시 조선 정부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였다.

1894년 후반부터 1895년 중반까지 당시 조선 영내에서 일본군의 토벌 대상은 청 패잔병, 동학 잔존병, 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비적은 청일전쟁 전부터 만주와 조선 변경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토벌을 피해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넘나드는 등 일대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³⁸⁾ 조선 정부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대에 비적의 토벌도 요청했으며,

34) 金允植→井上馨,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16일, p.68a.

35) 井上馨→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18일, p.74a.

36) 井上馨→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19일, p.75a.

37) 박준형,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한국문화』 47, 2009, pp.238~241.

38) 原敬 → 西園寺, 「施政一班 等 報告」,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1권, 明治二十九年九月十一日(1896년 09월 11일). (一. 曩キニ平安道鎮衛隊參尉千應聖ハ六月初旬匪徒剿討ノ爲メ境界ヲ巡視セシニ匪徒多クハ境界ヲ越エテ清國領地ニ逃竄セリ依テ清國團練局ノ官吏王懋忠ニ照會シテ其引渡ヲ求メタルニ彼ニハ

일본군은 청 본토에서 전투 중에도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 영내 비적 토벌에 나서기도 했다.

1894년 중반 이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선 영내에 산재하고 있던 동학 잔존병이었다. 삼례 등 전라·충청 지역의 동학 세력은 전봉준, 김개남 등 수뇌가 처형되어 구심점을 잃은 이후에도, 세력을 완전히 잃지 않고 계속 충청도 일대에서 조선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공주 등지를 공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동학 잔존병 일부는 비적이 되거나 비적에 합류하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동학 잔존병을 일소하기 위해 토벌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빈약한 조선군의 상황으로는 토벌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공주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이동하려고 하자 동학 잔존병이 공주를 습격하여 충청도 일대가 동학 세력에 다시 들어가는 상황을 우려하여 일본군의 이동을 만류하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³⁹⁾ 이후 동학 잔존병은 경기도, 황해도 등 지역을 옮겨 항전을 계속 이어갔다.

1895년 1월 이후부터 『牒報存案』에는 전쟁 중반 이후 조선 영내에서 동학 잔존병을 비롯한 비적의 토벌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 영내에서 청군과의 전투가 종료된 이후 치안 상황과 일본군과의 협력 상황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군 일부 부대는 청 본토를 공격하는 부대를 합류하지 않고 인천 등 조선 영내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은 청 본토를 공격하는 일본군의 후방과 보급선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조선 정부에 협력하여 황해도, 영남, 경기도 등지에 산재한 비적 토벌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1895년 1월, 황해감영이 중앙 정부(內閣)에 보낸 첩보에 따르면, 접응관(接應官) 홍재준(洪在駿)과 초모관(召募官) 이규진(李圭鎭)이 일본군과 함께 비적 수괴 이창주(李昌周), 이성길(李成吉)을 체포하였으며, 잔당 13명을 포살(砲殺)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적이 가지고 있는 군수품 등을 서울에 보내면서 수괴의 처분을 문의하는 보고를 올렸다.⁴⁰⁾ 또 나흘 뒤인 1월 13일의 황해감영이 보낸 첩보(牒報)에서도 황해감영 소속 포군(砲軍) 120명과 일본군 200명이 함께 비적 토벌에 나섰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당시 조선 정부는 영내 치안 유지를 위해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군과 연합하고 있었으며,⁴¹⁾ 일본군의 영내 주둔이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까지 올린 것을 볼 수 있다.⁴²⁾

1894년 11월 3일에 고종이 조선 각 지역 지방관과 백성들에게 일본군에 협조하여 물자

匪徒四散踪跡ナキ旨ヲ回答シタル由ナリ). 위에서 언급된 청국 團練局의 관리 王懋忠은 앞선 1895년에도 조선 영내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역시 비적을 쫓아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牒報存案』, 제1권, 奎17247, 1895년 3월 25일, 016a-016a).

39) 金允植→井上響,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15일, p.63a, p.67b. 결국 일본군 보병소위 鈴木彰가 공주 錦營에 주둔하면서 사병을 모아 훈련 시키고 방어를 돕게 했다(井上響→金允植, 『日案』, 제31권, 1894년 10월 25일, p.97ab).

40)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1월 9일, p.1b면.

41)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1월 13일, p.2a면.

42)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1월 13일, p.2a.

등을 지원하라는 칙유를 내리면서 일본군의 조선 주둔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이 칙유에서 고종은 조선이 먼저 일본의 군사원조를 요청했으며, 일본군이 조선에 있는 것은 곧 동양의 판국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기회이니 일본군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⁴³⁾ 즉 조선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일본군의 힘을 빌리고자 주둔을 용인한 것이다. 그리고 체포한 청 패잔병과 비적의 처결에 대한 기록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3) 조선 정부의 토벌 실정

조선 정부는 비적 토벌도 힘쓰고 있었으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 청 패잔병을 제외하고 동학 잔존병은 비적(匪類)과 동류로 취급되었다.⁴⁴⁾ 이천악(李千岳)과 같은 비적 수괴를 체포하여 효수하는 등 토벌에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비적들이 조선과 청의 토벌을 피해 국경을 넘나들면서 약탈을 자행하는 등 작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양 등지에서 비적 토벌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⁴⁵⁾, 무엇보다 조선군의 부족한 병력과 군비는 비적을 일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⁴⁶⁾

또한 영남과 황해 일대에서 비적과 동학 잔존병⁴⁷⁾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이 시작되었다. 1월 27일, 황해감영은 일본군이 봉산(鳳山), 당탄(唐灘), 장연(長淵) 등지로 출병하여 동학교도(東徒)를 격살·체포했다는 보고를 올렸으며,⁴⁸⁾ 같은 날, 경기감영에서도 이천부(利川府)에 있는 일본 주둔군이 동학 수괴(東魁) 고재실(高在實)을 잡아 처형했다고 알리기도 했다.⁴⁹⁾ 즉 청군이 조선 영내에서 물러난 전쟁 중반 이후부터 경기·황해도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동학 잔존병에 대한 토벌이 시행되었으며, 이 토벌에서 일본군이 주도적으로 토벌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황해도 일대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를 위한 군사 행동은 조선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1895년 2월 11일 호남 초토사의 보고를 보면, 전라도 일대 대대적인 비적 토벌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과 군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중앙에 보냈다. 이 보고에서는 비적 토벌을 시행하더라도 전라도 내 병력 중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대는 나주(羅州)의 수성군(守城軍)뿐이며, 이 부대 또한 병장기가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비적과 동학 잔존병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조선 군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이 보

43)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11월 4일 병자 1번째 기사.

44)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경자 5번째기사. 조선 정부가 전봉준·손화중·최경선·성두한·김덕명 등 동학 교도를 처형할 때도 이들을 匪類라고 지칭하면서 동학과 비적을 동일시 한 것을 볼 수 있다.

45)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4일 병자 3번째 기사.

46) 『고종실록』 32권, 고종 32년 12월 6일 무신 3번째 기사.

47) 東徒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뇌는 東魁으로 지칭하고 있다

48)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1월 27일, p.4a.

49)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1월 27일, p.4b.

고를 통해 알 수 있다.⁵⁰⁾ 즉 당시 조선 경내에서 일본군의 토벌 대상은 청 패잔병뿐만 아니라 동학 잔존병과 비적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1895년 2월, 문화 구월산(九月山) 일대를 3,000명 규모의 비적이 습격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조선 전역에 산재해 있는 비적 무리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월산 비적에 대한 토벌을 맡고 있던 황해감영이 중앙 정부에 보낸 2월 15일의 첩보에 따르면 비도(匪徒)의 거두(巨魁)가 문산 구월산(文化 九月山)에 모여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빈약한 조선군만으로는 비적을 토벌하기 어려우니 일본군 100~200명을 속히 보내어 협력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⁵¹⁾ 토벌 작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군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흘 뒤에도 황해감영은 비적 수천 명이 구월산에서 내려와 신천읍(信川邑)을 약탈하고 있으니 일본 영사관에 요청을 보내 일본군 200명을 속히 보내달라는 요청을 재차 보냈다.⁵²⁾ 당시 구월산 일대의 비적 규모는 3,000명 정도에 달하는 규모를 이루고 있었으며, 일대 민가를 약탈하는 등 함경도의 치안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구월산의 비적은 이후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토벌되었다. 1894년 후반부터는 조선 정부와 일본 군대의 적극적인 토벌은 1895년 중반 이후부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⁵³⁾ 이듬해까지 일본군은 조선군을 대신해 조선 영내의 비적 토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조선 영내에서 비적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토벌 작전으로 인해 비적 등 일부는 국경 부근으로 이동하여 만주 일대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⁵⁴⁾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북방 변경 지역에서 “북변청비지환(北邊淸匪之患)”이 발생한다. 청비(淸匪)가 국경을 어지럽히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이 청비는 청 패잔병과는 다른 대상을 지칭한다. 평안도 진위대 참위(鎭衛隊 參尉) 천응성(千應聖)은 1896년 6월에 비적 토벌을 위해 국경을 순시하다 비적 다수가 국경을 넘어서 청국 영토로 도망가는 것을 확인한 일이 있었다. 이에 천응성이 청국 단련국(團練局) 관리 왕무충(王懋忠)에게 조회를 보내 그들의 인도를 요구으나, 왕무충은 비적이 사방으로 흩어져 종적을 알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있다.⁵⁵⁾ 이 사례를 통해 당시 조선과 청은 국경 지역의 비적을 단속하기 어

50) 湖南招討使→內閣, 『牒報存案』 0001권, 1895년 2월 11일, p.8a.

51)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2월 15일, p.9a.

52)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2월 17일, p.9b;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3월 26일, p.16b.

53)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27일 기사 1번째 기사. 이 기사에서도 호서와 호남에 비적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군에 협력을 지시하는 조칙을 확인할 수 있다.

54)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10월 9일 양력 2번째 기사;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11월 23일 양력 3번째 기사. 물론 비적의 활동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1896년 金奉松의 상소에서와 같이 江界와 같은 변경 지역에서 響馬賊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비적을 막을 병사의 수 역시 태부족임을 밝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적은 충청, 함경 등 조선 영내에서 변경 지역으로 지역을 옮겨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55) 京城特命全權公使原敬 → 西園寺大臣, 「施政一班 등 보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96년 9월 11일.

려운 실정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청비라는 표현은 1897년부터 조선 정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명칭에서 보듯 청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⁵⁶⁾ 청비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 정부는 각 도의 관찰사에게 방비를 지시했으나, 청 정부와 직접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⁵⁷⁾

IV. 결론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조선에서의 전황을 보면, 풍도 해전에서의 패배로 보급선을 잃은 청군은 성환 전투로 인해 아산 일대의 주둔지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청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육로를 통해 보급과 지원병을 받을 수 있는 본토로 최대한 복상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반격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평양에서도 패전함으로써 조선 영내에서 반격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과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당시 원세개의 후임으로 서울에 주재하고 있던 총상무위원 당소의(唐紹儀)까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조선을 이탈하면서 교섭을 통해 전쟁을 멈추거나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없어지고 말았다.⁵⁸⁾ 1894년 당시 조선 정부는 전쟁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청군이 잇따라 패전하자 일본 측에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었다.

풍도와 성환, 그리고 평양에서의 전투 이후, 해상의 보급선이 끊긴 청군은 육로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청군은 본토를 향해 패주했으며, 사기 또한 떨어진 상태에서 낙오하는 병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청군의 주둔지와 패주로에는 병사들에 의해 약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1894년 후반에 이르면, 공주·서산·해미·홍주·덕산·예산 등 충청도 일대와 평양 등 함경도 일대에서는 조선인 민가에 대한 청군의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패잔병 중 소수는 본대와 합류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선 영내에 그대로 산재해 있었으며, 일본군과 조선군의 토벌 대상이 되었다. 청군은 조선에 주둔할 때부터 일대 지방관에서 보급 등을 요구했으며, 이후 패주하면서도 패주로에 있는 지역에 보급을 요구했다. 조선의 지방관들은 주둔 때부터 이어지는 청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 행위로 인해 청군의 요구에 불응했으며, 일부는 청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조선 영내에서 조선 정부가 토벌 대상을 정리해보면, 먼저 동비(東匪)는 조선 정부에서 비적으로 규정한 자들로 동학 비적으로 동학병을 말한다. 또 전봉준, 김개남 등이 처형된

56)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2월 21일 陽曆 6번째 기사.

57)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8월 1일 陽曆 6번째 기사.

58) 당소익은 조선에 있는 청국 상민과 관련한 사무를 주 조선 영국공사 가드너에게 위탁하고 조선을 떠났다. 이 청국상민의 처우 문제는 조선과 청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이 되었으며, 자주권을 찾고자 하는 조선의 입장과 청국 상민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청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었다. 여기에 당시 조선 내 청국 상민이 영국산 면직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므로 영국 또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김봉준, 2023, pp.11~14).

이후 조선 영내 각지로 흩어져 경기, 함경 등지의 치안이 약한 지방을 전전하면서 민가에 대한 약탈한 무리까지 포함한다. 이들은 동학농민운동 시기부터 1900년 전까지 계속 지역에 산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말 비적과 합세하였으며,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동비와 비적은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나 동비는 반란군에 속해 있으며, 조선 정부의 최우선 토벌 대상이 되었다.

두번째, 청병(淸兵)은 청나라 병사를 지칭한다. 비적으로 구분되는 청병은 1894년 청일전쟁 전에 충청도 등지에 주둔한 청병과는 다르다. 이는 청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 및 인식 변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비적으로 구분되는 청병은 청나라 패잔병을 지칭한다. 아산, 성환, 평양 등지의 전투에서 청군이 일본군에 패배하면서, 패주로를 따라 조선 영내에서 적지 않은 낙오병을 발생시켰다. 낙오한 패잔병들은 일대 민가를 약탈하면서 충청, 함경 지방에 많은 피해를 끼쳤으나, 청 패잔병에 대한 토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조선군을 동원해 직접 토벌에 나설 경우, 청 정부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므로 청 패잔병에 대한 토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선 영내에 있는 일본군이 주로 청 패잔병 토벌을 맡게 되었다.

한편 청비(淸匪)는 청나라 비적을 말하며, 청 패잔병과는 달리 청인(淸人)으로 이루어진 비적을 말한다. 이 청비라는 명칭이 사용된 기간, 장소 등을 보면 청일전쟁 이후 1897년부터 1904년까지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897년 내부참서관(內部參書官) 최훈주(崔勳柱)의 상소에서 "북변청비지환(北邊淸匪之患)"이라는 표현이 사용한 첫 번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⁵⁹⁾ 청비는 주로 삼수, 갑산, 평안북도 일대 국경지대에서 활동했다. 청비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 정부는 해당 지방 관찰사에게 방비를 지시했으나, 청 정부와 직접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청비는 조선과 청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청일전쟁 이후 청에 대한 조선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⁰⁾

청 패잔병과 동학 잔존병의 약탈 행위로 큰 피해를 얻은 황해 및 경기 지역의 감영은 일본군의 힘을 빌려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자 했다. 해당 지방관은 불가피하게 일본군의 힘을 빌려 치안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 패잔병 및 비적 토벌에서 일본군에 대한 의존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조선 지방관의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토벌 작전에서 일본군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일본군이였다.⁶¹⁾

59)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2월 21일 陽曆 6번째 기사.

60) 향마적(響馬敵)의 명칭도 조선 정부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향마적은 마적을 칭한 것으로 향(響)이 붙은 연유는 당시 마적들이 무리의 수를 불리고자 말에 방울을 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향마적은 중국에서 마적의 대명사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민국시기에도 그대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선 측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많이 없으며, 대부분 청나라 마적과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

61) 黃海監營→內閣, 『牒報存案』, 제1권, 1895년 3월 26일, p.16b. 日本陸軍少尉 齊藤溫, 歩兵太衛 山村忠正가 挾擊하여 海州 甕津 등지의 賊類가 長湍의 땅으로 쫓겨 갔는데, 沁營兵丁 150명이 18일 來到하면 計議하여 出土할 것이라는 牒報를 담고 있다. 이 역시 당시 비적 토벌 작전은 실질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은 조선 측의 토벌 요청에 따라 군대를 증파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 정부가 비적과 동학 잔존병 토벌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본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토벌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구실로 조선 영내에서 작전권을 보장받았고,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면서 청 본토의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또한 전쟁 당시 청국 상민은 보호 혹은 규제의 대상으로 논의 되고 있었으나 청 패잔병은 당시 조선 경내에서는 치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이유로 조선군과 일본군의 토벌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두 대상은 같은 청국인이지만 처우는 다른 원칙과 규정이 적용되었다.⁶²⁾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치안을 어지럽힌 것은 청 패잔병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의 여파로 불안해진 치안을 틈타 동학 잔존병과 비적이 각지를 활보하게 되었다. 청 패잔병이 다른 비적과 합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선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빈약한 군대로는 소탕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으며, 동학 토벌로 적지 않은 군비를 소모한 조선 정부는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동학 잔존병에 대한 토벌에 힘을 기울이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정부가 나서 청 패잔병을 직접 토벌하거나 토벌을 공식 선포하는 경우, 향후 청과의 외교 및 군사상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 패잔병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영내에서 청군의 수탈 문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1897년에도 다시 논의되었다. 1897년 3월, 당시 황해도 감찰사 민영철은 1894년 청군 접지 초의 부대가 호서(湖西)를 지나 평양으로 패주하는 동안 일대 지역에 지나친 병량과 군수품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 피해 보상을 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공문을 올리기도 했다.⁶³⁾ 이는 당시 청 측이 조선에 제기한 차관 반환 등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2) 청일전쟁 전후 시기 청국 상민의 처우에 관한 연구는 박준형, 2009; 김봉준, 「청일전쟁 직후의 청국 상민 문제와 조선-청-영국의 관계」, 『세계문화와 역사연구』 69, 2023 등을 참조.

63) 『公文編案』, 제75권(奎18154-v.75), p.13b.

[참고문헌]

사료

『公文編案』第75卷, 奎18154-v.1-99,
外部(朝鮮) 編, 『警務廳來去文奎』,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奎17804), 1895.
議政府(朝鮮) 編, 『誓言』, 1894(고종3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5294).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日案』, 第29冊~第30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9572-v.29, 30).
內閣(朝鮮) 編, 『牒報存案』, 高宗32年(1895), 1冊(29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규장각 청구기호 奎17247).

연구서

이성환, 『청일전쟁』, 살림, 2021.
조재근,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2024.
제노네 볼피첼리(유영분 譯),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 살림, 2016.
原田敬一, 『日清・日露戦争』, 岩波書店, 2007.
大谷正, 『日清戦争』, 中公新書, 2014.

연구논문

김봉준, 「청일전쟁 직후의 청국상민 문제와 조선-청-영국의 관계」, 『세계문화와 역사연구』 69, 2023.
박준형,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각지에서의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한국문화』 47, 2009.
차경애,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 14, 2008.
檜山幸夫, 「日台戦争論—台湾接收時における台湾での戦争の呼称問題を中心に—」, 『帝国日本の展開と台湾』, 創泉堂, 2011.

웹 자료

『고종실록』 https://docusky.org.tw/DocuSky/projects/ntu/06_JWS/ 검색일: 2024.08.02.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기록』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itemId=jh>
검색일: 2024.05.05.

「청일전쟁 시기 조선 영내의 淸 패잔병 처리 문제」 토론문

김상규(군사편찬연구소)

본 발표문은 청일전쟁 중 한반도에서 일본과 청국의 전투가 종료된 이후 청 패잔병의 처리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 포로문제는 일부 다루어진 것이 있기는 하나 주로 약탈 등의 사례 제시⁶⁴⁾, 의병의 구성문제⁶⁵⁾ 혹은 청국상인 규제⁶⁶⁾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 발표문은 주로 치안문제에 주목하여 청 패잔병 문제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1. 청 패잔병이 가지는 의미

필자는 “청일전쟁의 전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일 양국의 군사적 성패와 전후처리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당시 조선의 실정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1894년 이후 청 패잔병 처리 사안은 조선 정부의 전쟁 참여와 실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통해, 전쟁 기간 중 청과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태도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조선 정부의 청 패잔병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주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정부의 청 패잔병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식에서 선언한 것 이상으로 조선정부를 비롯하여 청국, 일본의 이를 둘러싼 입장차이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여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ㄱ. 청 패잔병의 카테고리화 문제

64)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2024, 266쪽~504쪽 참조, 조재곤은 2부 1장에서는 풍도 해전과 성환전투 이후 청국군의 패주상황을, 3절, 3부 2장 2절에는 평양전투 이후 청국군의 패주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65)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한국 독립운동사연구』14, 2000

66) 박준형, 「淸日戰爭 발발 이후 동아시아各地에서의 淸國人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한국문화』47, 2009 ; 김봉준, 「청일전쟁 직후의 청국상민 문제와 조선-청-영국의 관계」, 『세계문화와 역사연구』 69, 2023

우선 ‘청 패잔병’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 굳이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 패잔병을 패주하고 남은 이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5p) 하지만 주로 들고 있는 사례의 경우 퇴각하는 청국군 본대와 패잔병의 서술이 섞여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도만전투 아산성환 - 평양 - 국경으로 이동했던 청국군 본대, 본대와 떨어져 합류하지 못한 이들을 나누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재곤의 경우 한반도 내의 청국군 패주를 ‘풍도해전, 성환전투’, ‘평양전투’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 육군성의 『일청전쟁통계집』에서는 청국군 포로의 현황을 성환아산 / 평양 / 풍도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전투의 크기와 진행과정에 따라서 청국군 본대의 이동, 패잔병의 발생이 각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우선 시기별로, 지역별로 청의 패주로를 따라서 제기된 패잔병 관련 사항이나 정도가 제시되면 더 알아보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ㄴ. 청 패잔병에 대한 각 국의 입장

필자는 서론에서 청 패잔병에 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분석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조선정부의 입장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 정부는 영내에 산재해 있는 소수의 청 패잔병을 처리하는 일보다 동학 잔존 병력과 비적을 소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8p) ‘조선 정부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군대에 비적의 토벌도 요청했으며, 일본군은 청 본토에서 전투 중에도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 영내 비적 토벌에 나서기도 했다.’(8p) ‘정부의 입장에서 청 패잔병을 제외하고 동학 잔존병은 비적(匪類)과 동류로 취급되었다’(9p) 등의 서술은 조선정부를 객체화 하는게 아닌가 라는 인상마저 받게 됩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청 패잔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청일전쟁의 과정, 전후처리에서 정부 내의 권력관계, 각 나라의 외교관계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의 입장과 사안의 처리과정, 청국, 일본과의 외교적인 입장과 처리과정역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정부 내에서도 당시 개화파정권의 내각구성과 내각과 고종사이의 관계가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⁶⁷⁾ 이것이 각 패잔병 사례의 처리과정,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과 조선정부가 원하는 것, 청국이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결정되어어나가는 지가 세부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조선정부나 조선의 지방관들은 일본군의 토벌을 요청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7) 조재곤에 따르면, 아산·성환 전투 이후 강원도와 함경도 관찰사는 우마와 군량, 마초를 청국군에게 제공했습니다. 갑오개화파 정부는 이에 대한 추고를 청했고, 고종의 윤허를 얻게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산 주재 일본영사관의 보고를 받은 일본정부가 주한일본공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를 압박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조재곤, 앞의 책, 274쪽.) 청국군에 대한 입장이 지방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전투의 개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2. 기타

- 연구사 검토가 좀 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연구의 경우 각주로 짧게 처리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기존해석과 비슷하다’로만 넘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패잔병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도, 중국에서도 각 전투 단계의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서론의 문제제기와 소재가 충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론에서는 ‘청의 속지였던 대만 까지 일본의 전쟁 상대국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성격과 경과를 재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청패잔병 문제가 대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에 대한 분석이 전쟁의 성격과 경과의 재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필자는 결론에서 ‘동비’, ‘청병’, ‘청비’ 등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서론에서 제기하거나, 각주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조선정부, 일본군의 ‘토벌’ 대상으로 필자는 ‘동학잔존병’과 비적, 청 패잔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의 서술에서는 동학잔존병과 비적은 거의 한뫼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동류로 취급하고 있다고 서술은 하였지만, 이렇게 한뫼음으로 쓰는 상황에서 구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덧붙여 ‘동비’, ‘동학 수괴’와 같은 용어는 사료에 나오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3주제

근대적 군대의 의료와 위생문제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위생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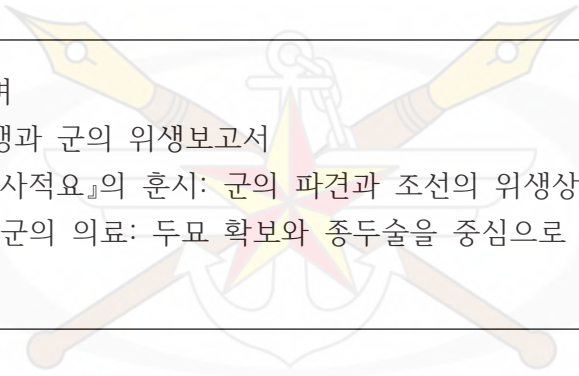


김영수
(연세대)

근대적 군대의 의료와 위생문제

—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위생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영수

- 
1. 들어가며
 2. 청일전쟁과 군의 위생보고서
 3. 『위생기사적요』의 훈시: 군의 파견과 조선의 위생상황 파악
 4. 전시기 군의 의료: 두묘 확보와 종두술을 중심으로
 5. 나가며

1. 들어가며

구한말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전통적인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패권을 쥔 신흥 강자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다. 청이 주도하던 동아시아의 질서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일전쟁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새로운 강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서구화를 추진하던 일본이 서구의 강대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에 승리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허로 일본이 등장했음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대만을 식민지로 삼아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배상금으로 근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

를 차단하는 동시에, 열강의 이해가 걸려있는 만주 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되며 영일동맹으로 인한 영국의 개입,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입하는 가운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서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두 번의 전쟁은 한중일의 역사에서 모두 분절점을 제공하였기에 전쟁 결과의 정치·외교사적 의미에 관한 분석은 다수 진행되었는데 최근의 연구는 정치와 외교 문제 자체보다 전쟁이 파생한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전쟁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연구 주제의 다각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²⁾

다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의학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전쟁에는 수많은 군인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대부분 징병제³⁾ 실시에 따라 동원된 (훈련된)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징병제로 모집한 군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정교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청일전쟁은 근대화된 군대조직으로서는 처음 치러보는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군부는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러한 대책은 전쟁의 승패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시기의 군 의료 및 위생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의학발전의 상황과 의료 및 위생에 관한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나마 연구가 진행된 부분은 전쟁에서 의료 및 의학지식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육군과 해군의 각기병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⁴⁾ 육군은 각기병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고 생각했고, 해군은 쌀밥 위주의 식단을 바꿔 각기병을 예방했다. 육군과 해군

- 1) 관련 연구를 모두 언급하기보다 최근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노윤지, 「메이지 일본의 종군기 연구: 마쓰바라 이와고로(松原岩五郎)의 『정진여록(征塵餘錄)』(1896)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1), 2024;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2024; 위신광, 「청일전쟁 개전과 일본 혼성 제9여단의 인천-용산 간 병참선 구축」,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4; 최석완, 「임오군란·청프전쟁·갑신정변과 일본 언론-미래 국가 구상과 청일전쟁 논리의 형성」, 『일본역사연구』 62, 2023; 박홍서,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 고종 정권과 대원군 세력의 권력투쟁, 그리고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63(3), 2023; 김봉준, 「청일전쟁 직후의 청국상민 문제와 조선-청-영국의 관계」,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9, 2023; 박영준, 「동아시아 패권전쟁으로서의 청일전쟁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2), 2023; 김경리, 「일본 육군의 모의 전쟁이 전시는 전승의 욕망-육군특별대연습을 중심으로」, 『일본학』 60, 2023; 신효승, 「러일전쟁 이후 일본 육군의 인사 적체와 조선 주둔 일본 육군의 공훈 경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7, 2023.
- 2) 서영희, 「청일전쟁·러일전쟁-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군사』 100, 2016.
- 3) 1873년 징병령에 따라 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 전원이 국민군명부(國民軍名簿)에 등록되었고, 20세가 되면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어, 합격하면 3년간 복무해야 했다.
- 4) 內田正夫, 「日清·日露戦争と脚氣」, 『東西南北』 2007(和光大學総合文化研究所年報), 2007; 荒木肇, 『脚氣と軍隊: 陸海軍医団の対立』, 並木書房, 2017; Alexander R. Bay, *Beriberi in Modern Japan: The Making of a National Disease*,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2012.

은 의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여 각기병 해결은 의학논쟁으로 변졌고, 비타민이 발견되기 이전 쌀밥이 원인이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군인들의 식단 변화를 가져왔다.

이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두 번의 전쟁은 의료사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두 전쟁 모두 일본이 제국 일본으로 나아가는 데에 역사적인 계기로 작동했다는 점, 그리고 전장이 한반도와 중국의 요동반도 인근, 한반도 인근의 바다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전쟁은 그 성격이 달랐다. 청일전쟁은 이질이나 콜레라 등의 급성감염증에 의한 병사자가 전사자의 약 90%를 차지했으나, 러일전쟁에서는 병사자는 약 30%로 급감했기 때문이다.⁵⁾ 이것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대 내의 의료 수준의 성장 또는 체제의 정비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장이 일본이 아니었던 만큼 병사들은 해외로 파병되어 낯선 기후와 위생환경에 적응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했다. 이에 당연히 군대 내의 의료와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큼 군에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발한 두 번의 전쟁은 군의 의료와 위생 문제의 주요한 지점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이후 식민통치의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청일·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의료와 위생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전장이 된 한반도와 중국의 동시기 의료와 위생문제에 대한 대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사의 측면에서 두 전쟁을 다루는 연구는 타 연구 분야에 비해 주목도가 낮아 전쟁 기록을 다루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몇몇 학자들이 근대 일본의 전쟁과 의료의 관계에 주목⁶⁾하고 있으나, 전쟁과 의료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기초연구, 즉 당시 육군 내의 담당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체제 속에서 의료부문을 지휘, 감독했는지 등 군 내의 의료부문의 기초적인 지휘체계와 활동 영역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근대의학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일본의 군의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을 뿐이다.⁷⁾ 이는 두 전쟁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기는 했으나, 구한말 조선, 대한제국의 의료정책에 전쟁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두 전쟁에 관한 기록 중에 의료 분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전장이 되었던 한반도의 당시의 의료와 위생 상황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본 발표에서는 청일·러일 전쟁을 다루는 군의 의료 및 위생을 다룬 출간물을 소개하고,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의 의학지식과 실천, 그리고 한반도 의료 및 위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료

5) 加藤眞生, 「日清戦争におけるコレラ流行と防疫問題」, 『日本史研究』 689, 2020, 23쪽.

6)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연구자로 가토 마사키(加藤眞生)를 꼽을 수 있다.

7) 구한말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일본 군의나 그들이 운영한 의료기관에 관한 연구를 지칭한다.

사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본 발표는 기초적인 분석을 시작하는 단계로, 두 전쟁기 모두를 다루지는 않고, 먼저 청일전쟁 시기에 육군에서 발간한 위생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청일전쟁과 군의 위생보고서

일본이 근대화 작업을 진행하며 치른 두 번의 전쟁은 많은 군인을 동원했고, 또한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치른 본격적인 대외전쟁으로 약 24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고, 전쟁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근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⁸⁾ 러일전쟁은 약 40만 명의 현역·예비역 요원으로도 필요 전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충 병원(兵員)까지 동원되는 대규모의 전쟁이었고, 소모전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지만 서구 국가와 싸워 승리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제국국가로 한 단계 올라가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

먼저 청일전쟁은 첫 대외전쟁이라는 점에서, 전쟁터가 일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병력과 자원을 요하는 첫 전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쟁은 많은 인력이 집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위생문제에 취약하다. 이는 1877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최후의 내전인 세이난전쟁(西南戦争)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귀향하는 군인들을 따라 퍼지면서 전국적인 유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쟁은 질병의 발생과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은 군전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했다.

보급 부족,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위생환경의 악화는 병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중에서도 위생환경의 악화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이어져 집단의 건강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질병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병사가 직접 적진으로 투입되어 교전하던 근대 초기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사들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중 전사자(戰死者)는 명예로운 죽음이지만, ‘전병자(戰病者)’는 쓸모없는 자, 부대에 폐를 끼치는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병사의 건강은 군에게도, 개인 병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⁹⁾

근대 일본은 징병령을 통해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징병제를 실시했다. 따라서 병사들은 아직 ‘국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었다.¹⁰⁾ 개

8) 오타니 다다시 지음, 이재우 옮김, 『청일전쟁-국민의 탄생』, 오월의봄, 2018.

9) 内田正夫, 「日清・日露戦争と脚氣」, 『東西南北』 2007(和光大學総合文化研究所年報), 2007, 145쪽.

10) 오타니 다다시 지음, 이재우 옮김, 『청일전쟁, 국민의 탄생』, 오월의 봄, 2018.

개인의 영양상태도, 위생상태도 서로 달랐다. 이 당시 이들의 건강을 살펴야 하는 군의(軍醫) 역시도 교육체계가 완전하지 않았고, 관련 제도도 정비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전장의 의료와 위생에 대한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야 했다. 부상병을 치료하고 후송하는 경험은 이전 전쟁에서의 경험치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위생의 분야에서는 달랐다. 청일전쟁은 일본 국내가 아닌 한반도와 중국 북부지역, 대만 등지가 주요 전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정보 없이 양호한 위생을 확보,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환자는 20만 명 넘게 발생했고, 그중 대부분은 병에 걸린 환자였다. 지역별로도 조선, 청, 타이완 모두 전병자(戰病者) 수가 전상자(戰傷者) 수를 넘어섰다. 특히 조선은 전상자 대비 전병자 비율이 6배로 다른 지역보다도 높았고, 타이완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¹¹⁾ 더 많은 인력과 의료보급을 필요로 하는 전병자의 수가 상당했던 만큼, 청일전쟁은 군 위생부(衛生部)가 더욱 중요해진 전쟁이었고, 따라서 경험의 축적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및 위생분야는 근대 일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였고, 군 내부에서도 그 중요성은 아주 컸다. 따라서 군의 위생부는 근대화를 추진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군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조직되었다. 위생부는 1868년에 조직된 이래 청일전쟁 직전까지 직제의 개정을 거치며 체계화되었다.¹²⁾ 청일전쟁에서 위생부의 역할은 일본 육군에서 작성한 위생보고를 정리하여 출간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생보고는 청일전쟁 시기 각지에 배치된 군의가 작성한 것으로, 현재 관련기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에서 편찬한『명치 27-28년 전역 육군위생기사 적요(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1898, 이하『위생기사적요』)와『명치 27-28년 역 육군위생사적(明治二十七八年役陸軍衛生事蹟)』(1907, 이하『위생사적』)이다.¹³⁾『위생기사적요』는 한 권이고,『위생사적』은 네 권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기록물은 부상자와 전염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유사점이 많다. 다만, 1907년에 발간된『위생사적』이 육군성 의무국의 공식기록으로,『위생기사적요』는『위생사적』의 전단계로 작성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¹⁴⁾

육군성 의무국의 공식기록인『위생사적』의 제1권은 전시 위생사무, 대만정벌군, 점령지 및 한국수비대를, 제2권은 부상자 일반 개황과 통계를, 3권은 전염병 및 각기를, 4권은 전상자(戰傷者)를, 부록에는 동사(凍死) 및 파상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3

11) 환자 1,000명 당 전상자는 192명, 전병자는 871명에 달했고, 전상자에 대한 전병자의 비율은 청에서는 약 3배, 타이완에서는 약 2배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타이완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한 자는 부상으로 사망한 자에 비해 약 34배 많았고, 조선은 8배, 청은 7.5배였다. 內田一郎,『日清戰爭における醫療・衛生』,『近代日本戰爭史: 1 日清・日露戰爭』, 1995, 234쪽.

12) 『衛生部の職制』,『陸軍軍醫學會雜誌』68, 附錄, 1894년 4월, 21쪽.

13)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1900; 陸軍衛生事蹟編纂委員會編,『明治二十七八年役陸軍衛生事蹟』, 陸軍省醫務局, 1907.

14) 加藤眞生,『日清戰爭におけるコレラ流行と防疫問題』,『日本史研究』689, 2020, 4쪽.

권과 4권만 공개되어 있어 이 기록의 전반적인 성격을 확인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 기록물의 기초자료로 여겨지는 『위생기사적요』의 서언(緒言)을 통해 집필 목적과 두 기록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생기사적요』의 서언은 청일전쟁 당시 야전 위생장관이자 육군군의총감인 이시구로 다다노리(石黒忠憲, 1845~1941)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1874년의 대만정벌 당시의 위생부의 사업에 관한 기록은 한 권, 1877년 세이난 전쟁 후의 위생기사는 간행하지 못했고, 그가 사적으로 편집한 『오사카육군임시병원보고적요(大阪陸軍臨時病院報告摘要)』 2권이 있을 뿐으로, 관련 기록을 보고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군의를 일반 의사 중에 고용하여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도 있으나, 그만두지 말고 개요를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료물자를 수송하기 어려운 해외 전장에서 환자를 수송하고, 진력을 다해 임시위생사업을 행한 점,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환자 구호 등에 얼마나 진력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자 하였다.¹⁵⁾ 그리고 청일전쟁에서의 질병 조사와 환자 치료 등의 상세는 전시위생사적편찬위원회(戰時衛生事蹟編纂委員)¹⁶⁾을 두고 편찬할 것이므로, 그 대강을 보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⁷⁾

서언의 내용은 이전에 의료보고서를 편찬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의료보고서의 편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군 환자에 대한 구호 항목도 포함시키고 있어, 전후 문명국으로서의 국제적인 평판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보고서의 편찬에는 몇 명의 군의와 약제감, 군속이 동원되었는데, 출판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육군군의총감 이시구로가 전쟁의 의료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의 등의 일부 인력을 활용하여 편집, 출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위생기사적요』는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간된 보고서이다보니, 이 보고서는 전쟁 중의 위생개황, 각 위생부의 위생사업, 환자수송, 인사, 환자 및 치료, 전역(戰疫)의 유행 및 방역, 적병 및 전지(戰地) 주민의 구료(救療), 위생재료의 총 9가지의 제목 아래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⁹⁾ 각 편은 군인 개인 및 군조직이 위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단 및 여단에 속한 군의와 관련자, 즉 위생부가 시행한 위생사업을 보고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위생사업 보고는 사단, 여단, 수비대 단위나 점령지, 병참, 전투를 단위로 기술하고 있다. 환자는 조선, 청국, 대만 등의 국가별, 직군별 등으로 분류, 질병도 각 국가별 및 지역별로 분류하여 환자 발생 상황을 전달하고 있

15)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서언 1-5쪽.

16) 전시위생사적편찬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육군위생사적편찬위원회(陸軍衛生事蹟編纂委員會)이다. 『위생사적』의 발간자명을 확인할 것.

17)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서언 2쪽.

18)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서언 5쪽.

19)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목차 1-35쪽.

다. 즉,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각 단위의 군대가 진군하면서 시행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의료와 위생의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사적』은 전체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별도의 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육군성 의무국에서 출간한 것으로, 제1권은 전시위생근무, 제2권은 부상자 일반 개황 및 통계, 제3권은 전염병 및 각기, 제4권은 전상(戰傷)을 각각 수합하여 발간하였다. 제1권과 제2권²⁰⁾은 목차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목차상 청일전쟁 당시의 각 군조직의 의무활동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제3권과 제4권은 청일전쟁에서 발생한 부상의 종류와 치료, 전염병 종류 및 발생, 예방, 치료, 그리고 각기병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전염병의 경우, 전쟁 중에 발생한 환자 수만을 집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과 전후의 일본에서의 전염병 발생 상황, 각 사단별 전염병 발생 추이 등을 비교분석하며 전시기 전염병 유행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전염병의 경우 전쟁 중에 발생했던 모든 종류에 대해 수록한 것은 아니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유행성뇌척수막염만을 선별하여 유행 개황과 임상 사례, 통계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위생사적』의 출간 목적이 전쟁 중의 의료적 대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의학지식과 다양한 임상 증례를 선별하여 전쟁에서 획득한 의학적 성과를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쟁 중의 전반적인 전염병의 유행 상황과 의료 현황을 포함한 기후 및 풍토, 위생사업, 환자, 질병 상황 등을 살피기에는 『위생기사적요』가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위생기사적요』의 훈시: 군의 파견과 조선의 위생상황 파악

『위생기사적요』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1편 전쟁 중의 위생개황의 시작 부분에 서언을 작성한 이시구로(石黒忠憲)의 훈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시구로는 청일전쟁 당시 육군군의총감으로, 군의료를 총괄하던 인물로, 1845년 출생하여 에도에서 막부의학소를 졸업했다. 그러나 막부가 붕괴한 후에는 의학소(醫學所)의 후신인 대학동교(大學東校, 도쿄대학의학부의 전신)에서 근무했다. 1871년 병부성의 장(長)인 마쓰모토 료준(松本良順, 1832~1907)의 추천으로 병부성에 들어가 근대 일본 초기의 군의(軍醫)가 되었다. 1890년 육군군의총감으로 승진했고, 청일전쟁 때에 의무국장으로 대본영육군부의 야전위생장관을 역임했다. 1890년 육군군의총감으로 승진했고, 청일전쟁 때에 의무국장으로 대본영육군부의 야전위생장관, 일본 적십자사사장을 역임했다. 군의제도의 확립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896년에는 군의총감으로 육군성위생사적편찬위원회(陸軍衛生事蹟編纂委員會)를 조직하여 고이케 마사나오(小池正直), 모리 린타로(森林太郎) 등 군의감 4명, 오카다 구니타로(岡田國太郎), 호리 마

20) 그중에 1, 2권은 일본 자위대 부설 쇼코칸(彰古館)에 소장되어 있다.

사나오(保利眞直) 등의 독일에서 유학한 인물 등 12명을 임명하여 『명치 27-28년 역 육군위생사적』을 편찬하는 데에 진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평소 서간, 의견서 등 다수의 기록²¹⁾을 남겼는데, 청일전쟁 개전 이전에 군의 및 약제관이 해야 할 업무의 대강을 정리하여 33개 조의 훈시를 작성하여 군의부(軍醫部)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위생기사적요』의 첫 부분에 삽입하였는데, 청일전쟁에서 군의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했고,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훈시 내용은 총 6항목으로, 음식, 의복, 주소(駐所), 질병, 재료(材料), 잡건(雜件)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음식 3개 조, 의복 4개 조, 주소 5개 조, 질병 5개 조, 재료 4개 조, 잡건 12개 조로 나뉜다. 훈시 내용은 이시구로가 전시 의료위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점을 중요시하였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전체 조항을 살펴보기보다는 의료 및 위생과 관련된 몇 개의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6개 항목 중 질병 항목은 기본적으로 방역법의 의거한 내용으로, 한반도에 유행하는 전염병과 그 대응, 전염병 발생 시 빠른 방역조치와 책임소재,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와 전염병자의 배설물에 대한 약물 처리, 다수의 수전(水田)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발생과 키니네의 사용, 방부외과요법(防腐外科療法)의 첫 사용 기회 획득과 학술연구 가능성을 기술하였다.²²⁾ 그리고 청일전쟁이 시작된 한반도의 기후, 풍토, 전염병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 파견했던 군의들이 수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잡건 항목은 일반 정보 및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의료관련 항목은 해외로 병사를 파병했을 때 위생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부상자를 빠르게 후송하는 것을 강조한 항목이다. 그 이유로는 부상자는 싸울 수 없는데도 생력(生力)이 있어, 의복과 음식, 거주지, 간호 등을 필요로 하여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부상자를 전장에 장기간 체류시킴으로써 생기는 질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후송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꼽은 것이기도 했다.²³⁾ 그리고 페스트에 주의²⁴⁾할 것도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질병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잡건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청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페스트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이시구로의 훈시의 내용은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상정하고 주의할 점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의료 및 위생 사정과 그에 대한 대책이 주로 담겨 있다. 조선에서 주의할 질병으로 장티푸스, 이질, 두창을 언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종두를 실

21)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伊藤隆, 季武嘉也 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 3, 吉川弘文館, 2007, 28-29쪽.

22)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5-6쪽.

23) 加藤眞生, 「日清戰爭におけるコレラ流行と防疫問題」, 『日本史研究』 689, 2020, 19쪽.

24)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7-8쪽.

시해야 하고, 마실 물의 선정에도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조선의 마을이 일반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징발할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할 것이고, 가옥이 협소하고, 빈대가 많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를 수송할 때에 필요한 들것은 현지에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조선의 생활양식에 비추어 아무 곳에서나 나무판자를 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하고 있다.²⁵⁾

이시구로의 훈시는 그가 조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가 출병하는 과정에서 군의 및 약제관에게 조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70-80년대에 조선에서 활동하던 군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주기적으로 위생보고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다. 훈사에서 언급한 인물은 고이케(小池), 가이세(海瀬), 고마쓰(小松), 다나카(田中)의 4명으로, 조선의 한성과 인천 등지에서 활동한 군의이다. 고이케는 고이케 마사나오(小池正直)로, 1881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육군 군의로 부산 제생의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가이세는 가이세 도시유키(海瀬敏行)를 의미하며, 1883년 6월 한성에 개원한 일본공사관의원에서 조선인 환자를 진료했던 인물이다. 청일전쟁에 참여한 육군 1등군의정(正)으로도 이름을 올렸다.²⁶⁾ 고마쓰는 청일전쟁에 참여한 육군군의 고마쓰(小松運)로 추정된다. 고마쓰는 육군군의학학교 출신으로, 청일전쟁 당시 2등군의정(正)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²⁷⁾ 다나카는 다나카 지카유키(田中親之)로, 1883년 10월 인천 일본영사관의 요청으로 파송된 육군 3등 군의이다. 인천영사관 부속병원을 개원한 인물이다.²⁸⁾ 청일전쟁 때에는 2등군의정(正)이다.²⁹⁾

그들은 일본공사관의 병의원에서 활동하면서 조선 체류 중에 각종 보고서를 일본으로 보냈다. 그리고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2월, 인천항의 위생일반에 관한 조사도 보고되었다.³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민중의 의식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 상황 및 분변처리방식, 청결법, 일본의사의 조선인 진료 및 그들의 질병 상황, 종두법의 보급상황, 외과진료, 전염병 발생 상황 등도 포함되어 있어 조선의 현재 위생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이케의 경우 『계림의사(鷄林醫事)』(1887)³¹⁾를 발간하여 조선의 기후, 풍속, 의료 상황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고, 그의 기록은 이시구로의 훈사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이시구로의 이력으로 보아 청일전쟁 전까지 공식적으로 조선에 체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

25)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4-6쪽.

26)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428쪽.

27) 黒沢嘉幸, 「日露戦争における野戦病院に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34(3), 1988, 370쪽;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429쪽.

28)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46: 신문화운동 2』, 탐구당문화사, 2000, 283쪽.

29)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429쪽.

30) 「27年2月28日 筑波艦韓人の生活及習慣に就き追加報告」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0125477200, 明治27年 公文雜輯 卷5 艦船下(防衛省防衛研究所).

31) 『계림의사』는 고이케가 제생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상편은 조선의 기후, 풍속, 의식주 등에 관해 기술하였고, 하편은 1883년부터 4월부터 1884년 3월까지의 1년간에 제생의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특히 부산 지역의 질병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는데도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조선에 파병한 군의들이 지속적으로 수합한 정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 항목에서는 고이케의 이름과 저작을 직접 인용하며 조선의 질병 상황을 개괄하고 있을 정도로 그의 조사에 대한 신뢰는 컸다. 조선에는 눈에 띄는 풍토병은 없으나 위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전염병이 항상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티푸스가 가장 많고, 이질, 두창 등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고이케는 그의 책에서 조선에 가장 많은 전염병은 말라리아³²⁾이고, 다음으로 장티푸스, 이질, 디프테리아, 두창의 순으로 소개하였다.³³⁾ 서로 파악하고 있는 조선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의 순위와 종류가 다른데, 이 부분은 이시구로가 고이케의 위생조사 및 그 이후에 작성된 자료도 활용하여 정보를 수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이케의 경우, 청일전쟁에서 병참군의부장을 담당하여 군의 의료시설 및 위생재료, 환자 치료 및 입원, 수송 등의 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³⁴⁾을 맡았기 때문에 고이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합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전쟁 전에 조선에서 활동했던 군의들이 정보를 수합하고, 또한 그들이 다시 청일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관련한 의료정보는 청일전쟁 때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기초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4. 전시기 군의 의료: 두묘 확보와 종두술을 중심으로

청일전쟁 전에 일본군은 한반도의 의료 및 위생환경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염병에 의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군대에서의 전염병 발생, 그리고 전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과정은 1890년대의 일본에서 진행된 서양의학의 도입과 실천을 보여준다. 다만, 이 시기는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정보가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 유행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했던 전염병은 두창으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우두법을 활용한 종두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확산을 저지하려고 노력했고, 관련 법령도 제정되어 의무적인 종두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두묘 생산과 보급도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청일전쟁 시기 일본 군대에서도 두창을

32) 그는 제생의원 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의사들과 교류하며 조선에서 많은 질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들에게 들은 대답은 나력(癰癤, scrofulosis, 결핵성경부림프선염), 학질, 전간이었는데, 그는 말라리아가 가장 유행하고, 장티푸스, 이질이 그 다음이었다.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20(1), 2011, 58쪽.

33) 小池正直, 『鷄林醫事』(下篇), 1887, 11쪽.

34) 「7月7日 兵站管区医務概則」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6062101900, 明治27年7月1日至7月25日 「陣中日誌 第1軍兵站監部」(防衛省防衛研究所).

예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사안이었다.

종두는 이시구로가 조선에 파견했던 군의들로부터 보고 받은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전염병 예방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일본 군의의 경우, 군의학교에 지원할 때 개인 정보와 함께 종두 실시 여부를 기재³⁵⁾해야 할 만큼 종두는 위생상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군에서의 종두 접종 의무는 군의학교에 관한 규정이 실시된 1872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종두 사업이 시작되는 1874년 「종두규칙」 제정 이전부터 빠르게 실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청일전쟁 시기 일본에서는 종두 접종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창은 조선, 청국, 대만에서 유행하고 있었지만, 종두 접종의 보편화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전염병으로 인식되었다.³⁷⁾

청일전쟁에 출정하는 병사의 종두 유무는 주요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종두 접종은 징병하는 과정에서 필수 확인사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종두를 실시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는 의무적으로 재접종³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종두 접종 유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된다.³⁹⁾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일본군 병사들의 종두 접종 현황은 예상과는 달랐다.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의 종두 유무를 확인했다는 점은 파병 전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 종두를 실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추가로 파병되는 병사 및 군역부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그들에게 되도록 파견되기 전에 종두를 접종하도록 주의하였지만, 실제로는 미접종 상태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⁴⁰⁾ 이는 1876년 일본에서 「천연두예방규칙(天然痘豫防規則)」이 반포되어, 어릴 때 2번 종두를 실시할 것과 두창이 유행할 때에 연령에 상관없이 종두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접종을 받지 않은 자가 여전히 많았음을 보여준다.⁴¹⁾ 그렇다고 할 때 파병과 동

35) 「衛生部の職制」 중 「軍醫學校」, 『陸軍軍醫學會雜誌』 68, 附錄, 1894년 4월, 105쪽.

36) 김영수, 「근대 일본의 종두: 제도 정비와 실제」, 『의료사회사연구』 9, 2022, 16쪽.

37) 참고로 청일전쟁 이전에 한반도 위생상황에 대한 군의의 보고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종두의 효력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약 70명에게 경성의 개업의(古城梅溪)가 그 기술을 교육하고, 지식영이 종두국에서 두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7月7日 兵站管区 医務概則」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6062101900, 明治27年7月1日至7月25日 「陣中日誌 第1軍兵站監部」(防衛省防衛研究所).

38) 1894년 당시 일본에서 종두의 재접종 시기에 관한 논의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이시구로는 재종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종두 후 3-5년이 지나면 재종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가 종두 효력이 감소하는 시기를 3-5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시구로의 훈시에는 재종두는 3년, 본문 중 두창 예방에 관한 기술에는 5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재종두를 몇 년으로 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4쪽 및 809쪽.

39) 이시구로의 훈시 4쪽 내용을 참조할 것.

40)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10쪽.

41) 18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종두는 일부 빈민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했고, 두창이 유행하여 임시종두를 실시해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관청의 부담이었다. 이에 지방관청이 개인의 사에게 인술을 베풀어 무료로 종두를 시행해줄 것을 부탁하여 의사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종두규칙」이 제정, 개정되어 제도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종두 유행이 반복된 것은 비용부담으로 인한 종두

시에 혹은 파병 후에 종두를 접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두 대상자는 병사뿐만 아니라 군속이나 군 관계자 모두가 포함된다. 전쟁 발발 당시에는 그들에게 종두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쟁 도중에 동원되는 보충병이나 군역부의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많았고, 따라서 전쟁이 진행되면서 파병되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상당한 양의 두묘를 필요로 했다.⁴²⁾ 따라서 전장에서 두장(痘漿)을 항상 비축하여 종두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의무(醫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여기서 말하는 두장은 일반적으로 우두장(牛痘漿)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일전쟁에서는 우두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인전장(人傳漿)⁴³⁾도 포함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는 1889년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에서 두묘를 개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1892년부터는 인전우두묘(人傳牛痘苗) 사용을 폐지⁴⁴⁾하고, 재귀우두묘(再歸牛痘苗)를 우두묘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청일전쟁 때는 일본에서 이미 사용을 중단한 인전우두묘를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두묘의 생산과 보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육군에서 우두묘뿐만 아니라 인전우두묘를 사용하기로 한 데에는 우두묘가 제대로 발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⁵⁾ 일본에서는 최근에 채취한 우두묘를 전장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두묘가 부족한 경우에는 오래된 두묘를 혼입(混入)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전쟁 중에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두묘로 종두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약 17%가 선감을 얻은 예가 있어서, 오래된 두묘의 효력은 미약하지만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오래된 두묘를 폐기하지 않고 전쟁 중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물자부족한 가운데 우두묘의 공급 수량을 맞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⁴⁶⁾

우두묘의 생산과 보급 문제는 접종방식의 문제점과도 연결되었다. 우두묘는 인전우두묘와 물리적 성상이 달라 접종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전우두묘는 두장(痘漿)이지만, 개량된 우두묘는 재귀우두묘로, 소의 피부에 생긴 두포(痘疱) 조직을 긁어모아 글리세린수를 넣어 섞어 만든(磨碎) 유제(乳劑)였다. 양자간에는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팔에 두장을 찔러 넣는 자종식(刺種式)으로는 제대로 접종되지 않았다. 개량된 우두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절종식(切種式)으로 종두를 실시해야 했는데, 청일전쟁 당시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자종

보급의 저해라는 측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영수, 「근대 일본의 종두: 제도 정비와 실제」, 『의료사회사연구』 9, 2022, 23쪽.

42)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10쪽.

43) 인전장은 인전우두묘(人傳牛痘苗)를 의미한다. 이는 우두묘를 사람에게 넣어 두장을 앓게 한 후 채취한 두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44) 인전우두묘의 사용을 폐지하고, 재귀(再歸)우두묘를 종두에 사용하게 되었다. 添川正夫, 『日本痘苗史序說』, 近代出版, 1987, 89-91쪽.

45)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10쪽.

46)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13-814쪽.

식으로 종두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종두의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⁴⁷⁾

청일전쟁 시기는 「종두규칙」이 반포되고, 우두묘도 개량되어 종두의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전장에 보내진 우두묘는 품질을 반드시 보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두묘가 개량되기는 했지만, 종두를 실시하는 의사들의 많은 수는 이전 종두술을 고수하고 있어서 절종식으로 종두를 실시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따라서 일본군은 처음부터 인전우두묘를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효과적인 종두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전우두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두묘가 필요한 지역을 담당하는 군의에게 인전우두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 인전우두묘는 건강한 어린 아이에게 두묘를 접종하여 얻는데, 두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종두를 실시하는 법령을 마련하였고, 그들에게 종두를 실시하면서 인전우두묘를 얻는 방식을 취했다.⁴⁸⁾ 일반적으로 군진의학이라고 하면 전장에서 획득한 임상 사례를 통해 상당히 최신의 의학을 연구, 발표하고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최신의 우두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과 의료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종두기술이 자종식에서 절종식으로 온전히 전환하지 않았던 시기에 종두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이전 방식의 두묘 채취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인전우두묘를 필요로 했던 상황은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실시한 종두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위생기사적요』에는 전장이 된 지역 주민들을 ‘구료(救療)’했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외래환자, 입원환자를 치료하고 보살핀 사실과 함께 두창이 유행한 지역에서 종두를 실시했다는 점을 꼽는다. 1895년 1월, 전리도와 충청도에 두창이 유행했을 때 여분의 두묘를 활용하여 276명에게 종두를 실시했고, 부산에서 활동하던 의료선교사 어빈(Charles Irvin)이 부산병참병원에 여분의 두묘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 원산에서 활동하던 하디(Robert A. Hardie)⁴⁹⁾도 이 소식을 들어 부산영사를 거쳐 여분의 두묘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여 각각 두묘 100관(管)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⁵⁰⁾

당시 한반도에서도 종두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두묘를 나눠준 것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두창의 화로부터 보호했다는 의미에서 한반도의 위생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이 있다.⁵¹⁾ 그러나 당시 일본군 내의 두묘의 공급과 종두술의 문제는 두묘의 분배가 일본군 주둔지 주변의 위생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신선한 두묘를 확보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나 의료선교

47) 添川正夫, 『日本痘苗史序説』, 近代出版, 1987, 94-95쪽.

48)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11쪽.

49) 원문에는 미국 의사 하우웰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당시 원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료선교사는 1892년에 원산으로 이주하여 시약소를 운영하며 선교센터를 건립한 하디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0)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846쪽.

51)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당시 한반도에서 종두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재귀우두묘가 부족하여 인전우두묘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컸을 수도 있다.

사에게 두묘를 배분해 준 곳은 모두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주둔하던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종두의 필요성과 우두묘의 부족으로 인해 인전우두묘를 확보할 필요성 속에서 주둔지 인근의 조선인에게 종두를 실시했다는 점, 원산, 부산 등 일본군 주둔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서양의료선교사를 대상으로 두묘를 분묘했다는 점 등은 일본군이 실시한 종두가 단순히 군인 및 주둔지 주변의 민간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전우두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5. 나가며

본 발표에서는 청일전쟁 시기 군에서 발간한 위생보고서를 소개하고, 그 내용적인 특징을 확인하면서 전시기의 의료 및 위생을 다룬 발간물을 의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본 발표에서 주로 소개한 『위생기사적요』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전에 일본 육군은 군의를 활용하여 조선의 기후, 풍토 및 조선인의 의식주 전반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에 참여한 군의가 청일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책의 한 사례로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종두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종두를 둘러싼 근대 의학지식과 그 적용, 그리고 전장에서의 종두 실시와 대응 등을 살펴보았다.

전장에서 종두를 시행하기 위해 취한 대책은 전쟁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의료의 문제를 군의들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군의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 기술과 실천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채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본군의 종두 정책을 통해 당시 일본 근대의학의 현황, 제도 적용의 한계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서 종두를 실시한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나, 여전히 제도의 실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인에 대한 ‘시혜적’인 종두의 실시가 실제로는 현지에서 두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본 발표는 군의학, 군진의학의 관점에서 청일·러일전쟁을 어떻게 다루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청일전쟁 시기의 의료 및 위생 문제, 그리고 해당 시기의 군의 의료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러일전쟁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러일전쟁은 청일전쟁보다 많은 열강이 개입하고 있어 근대 의학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관련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료

- 「27年2月28日 筑波艦韓人の生活及習慣に就き追加報告」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0125477200, 明治27年 公文雜輯 卷5 艦船下(防衛省防衛研究所).
- 「7月7日 兵站管区医務概則」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6062101900, 明治27年
7月1日至7月25日 「陣中日誌 第1軍兵站監部」(防衛省防衛研究所).
-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明治二十七八年戰役陸軍衛生紀事摘要』, 大本營野戰衛生長官部,
1898.
- 小池正直, 『鷄林醫事』(上·下篇), 1887.
- 陸軍衛生事蹟編纂委員會編, 『明治二十七八年役陸軍衛生事蹟』, 陸軍省醫務局, 1907.
- 「衛生部の職制」, 『陸軍軍醫學會雜誌』 68-69, 附錄, 1894.

단행본 및 연구논문

-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46: 신문화운동 2』, 탐구당문화사, 2000.
- 김경리, 「일본 육군의 모의 전쟁이 전시하는 전승의 욕망-육군특별대연습을 중심으로」, 『일본학』 60, 2023.
- 김봉준, 「청일전쟁 직후의 청국상민 문제와 조선-청-영국의 관계」,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69, 2023.
- 김영수, 「알렌과 예비슨의 방역활동」, 『제중원 130년과 근대의학』, 역사공간, 2016.
- 김영수, 「근대 일본의 종두: 제도 정비와 실제」, 『의료사회사연구』 9, 2022.
- 노윤지, 「메이지 일본의 종군기 연구: 마쓰바라 이와고로(松原岩五郎)의 『정진여록(征塵餘錄)』(1896)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1), 2024.
- 박영준, 「동아시아 패권전쟁으로서의 청일전쟁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2), 2023.
- 박홍서,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 고종 정권과 대원군 세력의 권력투쟁, 그리고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63(3), 2023.
- 서영희, 「청일전쟁·러일전쟁-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군사』 100, 2016.
- 신효승, 「러일전쟁 이후 일본 육군의 인사 적체와 조선 주둔 일본 육군의 공훈 경쟁」,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177, 2023.
- 여인석, 「학질에서 말라리아로: 한국 근대 말라리아의 역사(1876-1945)」, 『의사학』 20(1), 2011.
- 오타니 다다시 지음, 이재우 옮김, 『청일전쟁, 국민의 탄생』, 오월의 봄, 2018.

- 위신광, 「청일전쟁 개전과 일본 혼성제9여단의 인천-용산 간 병참선 구축」,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4.
-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2024.
- 최석완, 「임오군란·청프전쟁·갑신정변과 일본 언론-미래 국가 구상과 청일전쟁 논리의 형성」, 『일본역사연구』 62, 2023.
- 加藤眞生, 「日清戦争におけるコレラ流行と防疫問題」, 『日本史研究』 689, 2020.
- 内田一郎, 「日清戦争における医療・衛生」, 『近代日本戦争史 1: 日清・日露戦争』, 1995.
- 内田正夫, 「日清・日露戦争と脚氣」, 『東西南北』 2007(和光大學総合文化研究所年報), 2007.
- 伊藤隆, 季武嘉也 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辞典』 3, 吉川弘文館, 2007.
- 添川正夫, 『日本痘苗史序説』, 近代出版, 1987.
- 荒木肇, 『脚氣と軍隊: 陸海軍医団の対立』, 並木書房, 2017.
- 黒沢嘉幸, 「日露戦争における野戦病院について」, 『日本医史学雑誌』 34(3), 1988.
- Alexander R. Bay, *Beriberi in Modern Japan: The Making of a National Disease*,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2012.



「근대적 군대의 의료와 위생문제」 토론문

이규원(서울대)



제4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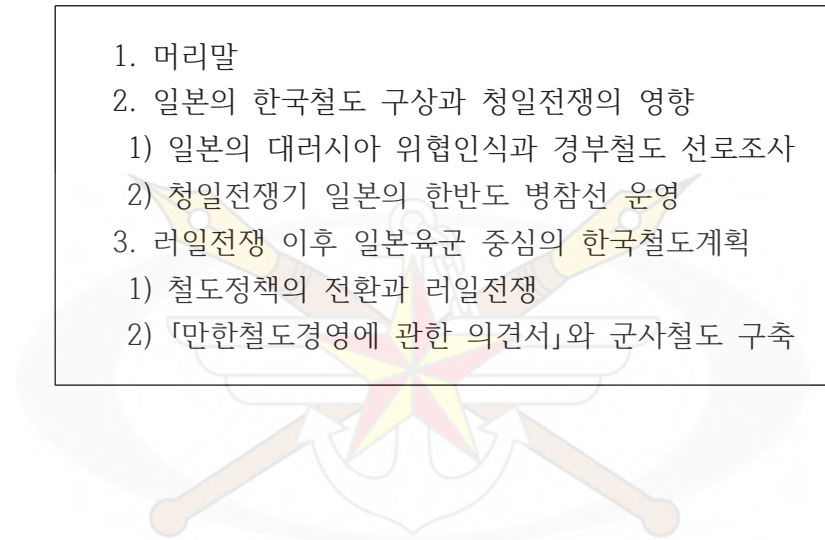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박우현
(고려대)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박우현

- 
1. 머리말
 2. 일본의 한국철도 구상과 청일전쟁의 영향
 - 1) 일본의 대러시아 위협인식과 경부철도 선로조사
 - 2) 청일전쟁기 일본의 한반도 병참선 운영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 중심의 한국철도계획
 - 1) 철도정책의 전환과 러일전쟁
 - 2) 「만한철도경영에 관한 의견서」와 군사철도 구축

1. 머리말

세계사적으로 철도는 전신, 증기선과 함께 19세기 이후 팽창주의적 제국 체제를 형성하는 동맥이었다. 근대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나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함께한 교통수단이었다. 대규모 자본투자,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유통 혁신, 대량 고용 등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는 철도와 함께 성장했다.¹⁾

하지만 전신과 증기선이 그러하듯이 철도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면모만으로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제국주의를 이끌어 간 교통기관이라는 점에서 철도가 가진 군사적 측면은 중요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획득하고 그곳에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철도의 군사적 측면은 부각되었다. 가령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했을 때 도로교통으로 운영하

1) 에릭 홉스봄·전철환 역, 『산업과 제국 : 산업시대 영국 경제와 사회』, 한빛, 1984, 102~106쪽; 에밀리 S. 로젠버그 편·조행복, 이순호 역, 『하버드 C.H. 베크 세계사. [5], 1870~1945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민음사, 2018 409~412쪽.

는 것이 소위 경제적인 방안이라 할 지라도, 제국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비용 저효율이라도 철도가 부설되었다. 프랑스가 중국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부설했던 윈난 철도나, 독일이 탄자니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인 마지막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키고마(Kigoma) 간 철도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철도교통을 관련지어 생각할 때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일본의 식민지 철도정책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위의 윈난철도를 제외하고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군사적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건설한 철도들은 대부분 국경 충돌이나, 내부 반란 진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³⁾ 이와 달리 일본이 한반도에 구축한 철도망은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에 둔 것 외에도, 그 군사적 목표가 외부 침략 즉, 식민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가 가진 특성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준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된 원인을 이해하려면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의 지향점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본격화했던 20세기 초는 이미 전 지구가 제국들에 의해 남김없이 분할된 상태였다.⁴⁾ 오히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진행했던 식민지 확대는 19세기 말, 동북아시아에 이르러 현상 유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확대가 식민본국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시 말해 식민지배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가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던 점⁵⁾과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이었던 중국을 특정 국가가 독점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19세기의 패권국가인 영국으로서는 직접 지배가 어려워진 동북아시아를 경쟁자들 특히 러시아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 방안으로 택한 방식이 영일동맹에 기초한 지역 내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육성이었다.⁷⁾ 일본으로서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직접 지배를 포기한 지역이 눈앞에 놓여있었다. 게다가 패권국의 승인을 얻었

2) 윈난철도에 관해서는 정재현, 「윈난 철도의 건설과 프랑스 제국주의」,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Jean-François Rousseau,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The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5, no. 1, 2014. 독일의 탄자니아 철도 건설에 관해서는 Charis Enns-Brock Bersaglio, "On the Coloniality of "New" Mega-Infrastructure Projects in East Africa", *Antipode* 52, no 1, 2020.

3) 독일의 탄자니아 철도 건설 사례가 대표적인 내부 반란 진압용이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하고자 아프가니스탄 국경까지 건설한 철도가 국경 충돌을 방어할 목적을 우선 고려한 철도 건설이었다 (Ganeswar Nayak,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economy, ecology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3, 2021, pp. 21~22).

4)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 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의 정립 과정과 그 기능」, 『국제정치논총』 51-1, 2011, 85~87쪽.

5) 도널드 서순·유강은 역, 『불안한 승리 : 자본주의의 세계사, 1860~1914』, 뿌리와 이파리, 2020, 696~705쪽.

6) 예외가 있다면 부동항을 원했던 러시아를 들 수 있다. 해양 패권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영국 주도의 제국주의 국가 운영과 다른 방식의 침략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핵심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 참조.

7) 박상현, 「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식민국가의 정치경제 - 통합비교를 위한 시론」, 『사회와 역사』 111, 2016, 31~32쪽.

기에 군비 확장의 명분을 얻었고, 애초에 군부 세력의 성장이 근대화의 동력이었기에 대외 침략은 손쉬운 선택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일제가 구축한 한반도 철도망의 군사적 측면을 영일동맹으로 나아가던 시기 즉, 청일·러일전쟁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침략을 현실화한 최초의 전쟁이었기도 했으며, 향후 만주·중국 침략과 러시아(소련)과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서 병참선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확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일·러일전쟁에서의 병참선 운영 경험이 실제 일제의 한반도 철도 부설 및 운영 어떻게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위기감으로 일본이 한반도 철도부설권 장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점, 육군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철도망 부설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정치·외교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바 있다.⁸⁾

하지만 실제 청일·러일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한반도 철도망 구축의 방향성,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쟁 당시의 병참선 운영을 분석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일본군이 최초로 해외에서 병참선을 구축했던 청일전쟁의 양상 분석이 중요했는데, 인천-용산 간 병참선 구축에 관한 연구⁹⁾가 제출된 이래 최근 청일전쟁 시기 일본육군의 한반도 병참 운영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졌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개설적으로만 이해되었던, 인천-용산, 부산-한성, 원산-한성 간 병참선 구축과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부설 등의 구체상이 밝혀졌다.¹⁰⁾ 본고도 이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청일·러일전쟁을 전후 일본이 한반도 철도에 관해 단행한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하고, 그 조치들이 전쟁을 전후로 겪은 변화들에 집중한다. 나아가 실제 철도가 전쟁에서 병참선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이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 운영 방안과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가 보여주는 양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일본의 한국철도 구상과 청일전쟁의 영향

1) 일본의 대러시아 위협 인식과 경부철도 선로 조사

8)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大學出版會, 1978;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新平』, 南窓社, 1996;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 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영일동맹의 성립과 변질 과정』, 지식산업사, 2005.

9) 遠藤芳信, 「動員実施と1894年兵站体制構築」, 『近代日本の戦争計画の成立』, 桜井書店, 2015.

10)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청일전쟁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던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였던 첫 번째 전쟁부터 그 배경에 철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은 일본뿐 아니라 영국 등 동아시아 패권을 노렸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이때부터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1877~78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878년 베를린회의에서 영국 등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발칸 반도, 오스만 제국으로의 남진에 실패한다.¹²⁾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방향을 바꿔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도모했고, 시베리아를 넘어 우랄산맥 동쪽으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건설이 필요했다. 전쟁과 제국주의 국가 간 대립의 결과였다.

당시 제해권 장악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패권국가로 군림했던 영국으로서는 러시아만이 해상이 아닌 육로라는 지리적 차별성을 매개로 영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 개통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조치였다. 러시아의 육군을 동아시아로 단시일 안에 대량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는 데 반해, 영국의 해군력은 이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은 영국 패권의 국제질서를 흔들 뿐 아니라, 영러 간 아프가니스탄 문제나 아시아의 기존 권익 문제까지 균열을 가할 수 있었다.¹³⁾

이에 대응해 영국은 대외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핵심은 영국 외교의 전통이었던 “영광스러운 고립”정책의 포기과 “동맹정책”의 추진이었다.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자금을 제공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 협약(1892.08.18.)과 동맹조약 체결(1894)도 영국의 대외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게 했다.¹⁴⁾ 영국은 러프동맹과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응할 동맹체제 구축을 고려하기 시작했다.¹⁵⁾

철도를 매개로 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은 인접 국가에도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대륙침략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일본은 향후 국제정치, 군사전략을 재편 즉, 전쟁을 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5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약 7,400km의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 계획이 발표되고 3년 후인 1888년 1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작성한 「군사의견서」에 이미 일본이 느끼는 위협이 반영되어 있었다.¹⁶⁾

11) 하라 아키라(原朗)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점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각기 ‘제1차 조선전쟁’,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하라 아키라·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38~41쪽).

12) 김현수, 「동방문제와 영국정치 1876~1878 -글래드스톤과 디즈레일리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사학지』, 38, 2006, 185~193쪽; 강윤희,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1877~78 러시아-튀르크 전쟁과 베를린 회의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8-2, 2018, 15~32쪽.

13) 야마무로 신이치·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2010, 64~66쪽.

14) 프랑스-러시아 동맹에 관해서는 전홍찬,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러일전쟁에서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나?」, 『국제정치연구』 25-1, 2022, 5~11쪽.

15)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4)」, 『군사』 113, 2019, 99~100쪽.

16) 하라다 게이이치·최석완 역, 『청일 러일 전쟁』, 어문학사, 2011, 46~47쪽.

야마가타는 「군사의견서」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 이해관계 대립이 커지며 분쟁의 씨앗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조선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두 국가가 동양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준비가 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완공되어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연결되면 병력 수송의 효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됨과 함께 부동항을 찾아 조선을 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 보면서, 러시아가 조선 침략을 개시하는 날은 “동양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 날”이라고 경계했다.¹⁷⁾

물론 일본 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을 군사적 중요성보다 무역·공업진흥론의 입장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¹⁸⁾ 러시아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목적을 군사적 목적에 국한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산업화를 이끌면서 유럽과 아시아 무역의 중개자로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경제·통상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시베리아횡단철도는 경제·통상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폭넓게 받아들여지지는 어려웠다.²⁰⁾ 일본 정부 내 여론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침략을 경계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앞서 언급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뿐 아니라 1889년 12월 제1차 야마가타 내각의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아오기 슈조(青木周蔵)도 러시아가 극동에서 부동항을 구하려 함에 따라 섬나라인 일본의 세력범위를 축소하고 외교활동을 견제함으로써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항하는 군비 확장 노선을 지지했다.²¹⁾ 물론 배경에는 영국의 대러 견제 정책과 동맹체제 필요성 인식이 존재했고, 반러 공동전선 동맹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양국이 호응해 가기 시작했다.

나아가 1890년 12월 6일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가 제1회 제국의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1889년 6월 오스트리아 빈대학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서 배운 ‘주권선’과 ‘이익선’ 개념을 사용해 ‘이익선’까지 보호하기 위한 군비 확장을 주장하면서 청일전쟁의 단초는 만들어졌다.²²⁾ 1891년 5월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이 시작되자, 일본에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확대되었다.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로 이후 주필로 활동하고 청일·러일전쟁기 국수주의, 국민주의 경향의 대외경운동(對外硬運動)²³⁾에 앞장섰던 언론인 나카이

17) 大山梓 編, 「軍事意見書」(1888.01),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177~180쪽.

18) 하라다 게이이치, 앞의 책, 2011, 50~51쪽.

19) 최덕규, 「동청철도와 러시아의 만주인식(1894-1904) - 만주분할론과 만주병합론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36, 2023, 42~44쪽.

20) 이후에도 이 철도의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옴스크(Omsk) 동쪽 구간은 단지 전략적인 목적에만 사용되었을 뿐 내륙 지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위르겐 오스터함멜·박종일 역, 『대변혁 III - 19세기의 역사풍경』, 한길사, 2021, 1921쪽).

21) 하라다 게이이치, 앞의 책, 2011, 49~50쪽; 최덕규, 앞의 논문, 2019, 101~102쪽..

22) 하라다 게이이치, 위의 책, 2011, 78~79쪽; 가토 요코·윤현명, 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106~112쪽.

기타로(中井喜太郎)도 1892년 조선특파원으로 파견된 후 낸 논설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위협을 강조했다.²⁴⁾

그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현재 계획대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성되더라도 공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블라디보스토크는 빙결항(氷結港)이므로, 약 3개월간 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데 러시아가 철도를 부설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항구에 만족할 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분명히 항해를 끼고 있는 항구나 함경도까지 철도를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도 분명히 북경에서 경성까지 철도를 부설할 것이니 일본은 반드시 부산에서 경성을 거쳐 인천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부설해야 하고, 일본의 무역항도 하코다테(函館)나 마이즈루(舞鶴)보다 한반도와 인접한 시모노세키(下関)나 모지(門司)를 중심으로 연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²⁵⁾

위기감이 고조되자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까지 군사수송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종관철도 부설 시도가 이어졌다.²⁶⁾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었다. 경부선뿐 아니라 강제병합 이전 한반도에 놓인 철도망은 대부분 청일·러일전쟁을 계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목적이 농후했다. 물론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철도망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노선 등으로 나누는 방식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놓이면 군사·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철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이 적게 드는 도로 건설만으로 유지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해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한 지역과 노선에는 그만큼 지배권력이 중시하는 목적이 있었다. 1890~1910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도로가 아닌 철도망을 급박하게 건설해야 할 만큼 중요했던 목적은 전쟁을 위한 군사적 목적뿐이었다.

군사적 목적에 따른 첫 번째 조치는 철도선로 조사였다. 러시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에 착수한 다음 해인 1892년 4월, 부산 주재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가 귀임하자 일본군 참모차장이었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은 그에게 서울~부산 간 철도 부설을 위한 선로 측량 조사를 의뢰하였다.²⁷⁾ 가와카미 소로쿠는 무로다 요시아야에게 “일본은 장래

23) 대외경운동에 관해서는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8.

24) 이후 나카이 기타로는 1900년부터 동아동문화, 국민동맹회, 조선협회 등의 간사로 활동했고, 1903년부터는 재조선 일본인거류민 회장, 한성신보 주필을 겸임하여 조선에서 일본인의 팽창을 실천하고 간도조사를 거쳐 통감부의 관리를 역임하였다. 나카이 기타로에 관해서는 정애영, 「‘병합사안’을 통해 본 한국병합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7, 2007;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28, 2008.

25) 中井喜太郎, 「サイベリア大鐵道落成後の朝鮮と日本」, 『讀賣新聞』, 1892.09.26.

26) 경부철도 부설권 획득을 위한 일본 등 열강과 한국 정부의 대립에 대해서는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1~50쪽.

27) 가와카미 소로쿠는 참모본부 차장으로서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조선 출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1893년 4월~6월에는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조선과 청국을 정탐하기도 했다(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2024, 41; 166쪽). 무로다 요시아야는 1872년 외무성에 들어가 부산 영사, 초대 멕시코 공사 등을 역임했다. 1902년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대표적인 이토 세력으로, 1909년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행으로 갔다가 안중근의 저격을 받았다(신운

필연적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운명인데, 반드시 그 전에 조선에 철도를 부설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²⁸⁾ 이에 무로다는 같은 해 10월에 측량을 마쳤다. 이 조사에서 선정된 노선은 실제 완공된 경부철도의 원형이 되었다.²⁹⁾

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종래 경성-부산 간 교통망 중 서울(남대문)-용인-죽산-청주-문의-상주-대구-밀양-삼랑진-부산진 노선에 36개 역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³⁰⁾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종래 경성-부산 간 교통망은 3개 노선이었는데, 경상북도 동부 영주에서 죽령을 거쳐 충청북도 단양 부근으로 나아가 서울에 도달하는 동로(東路), 경상북도 김천에서 추풍령을 거쳐 충청북도 영동으로 나가 서울에 도달하는 서로(西路), 두 노선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조령 즉, 문경새재를 넘어 충청북도 괴산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중로(中路)가 그것이었다.

결국 소백산맥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1892년 일본군이 의뢰한 선로 조사에서는 서로와 중로 사이인 문의와 상주 구간을 택했다. 보고서에서도 기존 교통망 중 중로는 상주에서 북상해 함창, 문경을 거쳐 조령을 향하는데, 본 조사는 상주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보은, 문의로 나아가는 노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³¹⁾ 이유는 상주-문경-충주에 이르는 구간에 넘어야 했던 조령의 험준함이었다.³²⁾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존 교통망 중 중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올라가다가 상주에서 서쪽의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 청일전쟁기 일본의 한반도 병참선 운영

무로다 요시아야는 측량을 마친 지도를 참모본부, 외무성에 제출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이 지도가 청일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해 일본군의 행동에 큰 편의를 제공했다고 서술했다.³³⁾ 이 서술을 그대로 믿는다면,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 보고서가 채택한 노선으로 병참선을 구축하고, 군사수송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서울 간 병참선 설치와 일본군의 행군 양상은 보고서와 차이를 보였다.

우선 청일전쟁 당시 부산-서울 간 병참선이 설치되어 일본군의 행군이 이뤄졌던 1894년 7월에 경부철도는 건설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로망을 토대로 병참선이 설치되었고, 병사들은

용, 「일본의 안중근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53쪽).

28)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183쪽.

29)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 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영일동맹의 성립과 변질 과정』, 지식산업사, 2005, 99~100쪽.

30) 정재정, 앞의 책, 1999, 51쪽.

31) 室田義文 → 陸奥宗光, 「白釜山至京城鐵道線路踏査報告書」, 『京釜鐵道敷設一件附京釜鐵道線路保護ノ爲メ巡查常派ノ件・京釜鐵道線路ニ沿ヒ我利權扶殖計畫ノ件第一卷』(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886900), 1892.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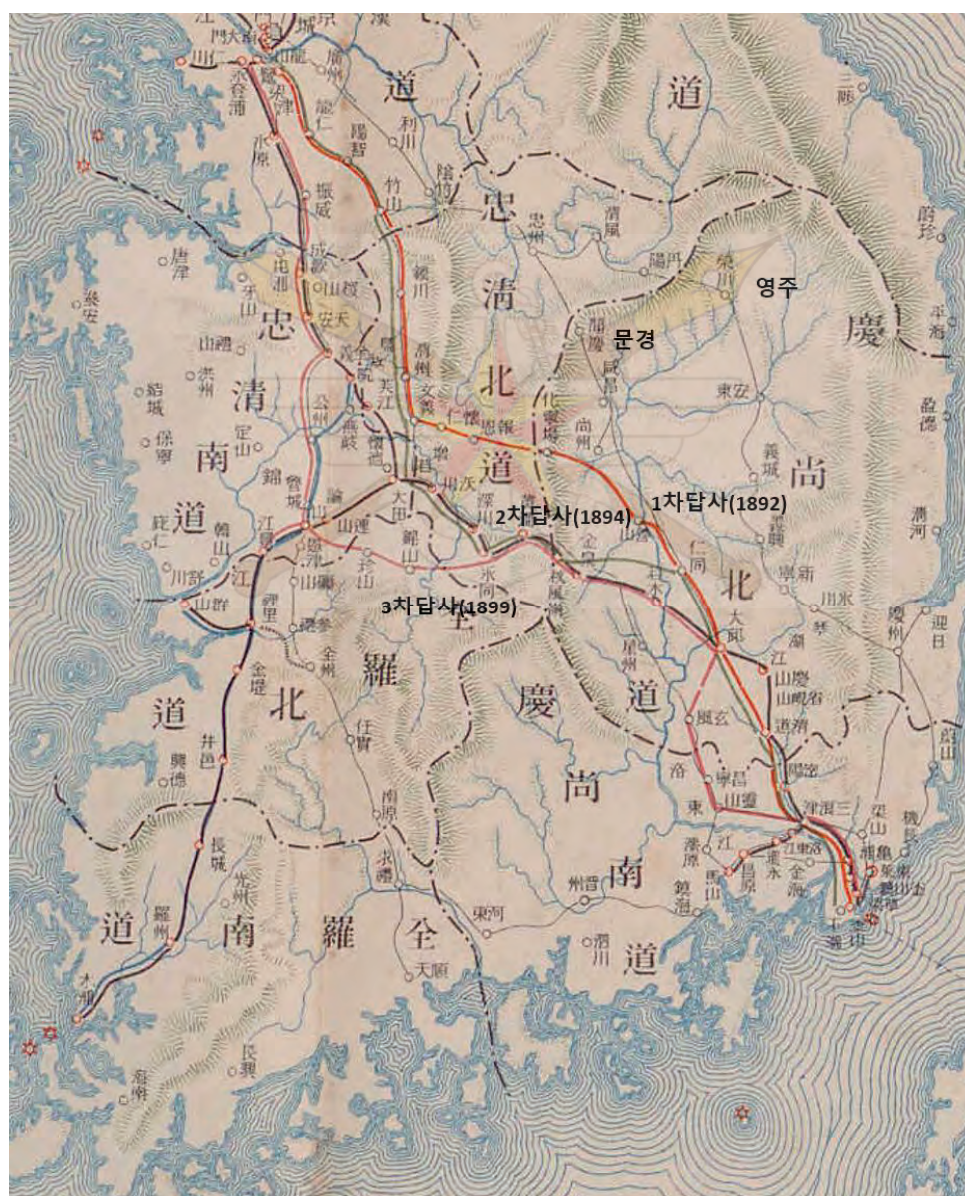
32)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94~96쪽.

33)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187쪽.

행군을 통해 이동하였다. 물론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더라도, 무로다가 제출한 노선대로 일본 군의 행군이 이뤄졌다면 그의 보고서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 당시 설치된 부산-서울 간 병참선은 위 보고서가 채택한 노선과 달랐다.

청일전쟁 당시 부산-서울 간의 육로 병참선은 부산-인천 간 해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대안’이었다. 풍도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에 대본영은 해상 수송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본영은 거리가 길었고, 이른바 신작로도 깔리지 않은 전통적인 도로망뿐이었으나 부산-서울 간 육로 병참선을 설치하는 ‘대안’을 추진하였다.

<그림 1> 1915년 조선철도사 수록 경부철도 답사 노선도



출처 :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그런데 병참총감이 지정한 병참선로는 부산-대구-상주-문경-충주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이였다. 앞서 무로다의 보고서의 기존 교통망 중 중로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간선도로 중 영남대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노선이였다.³⁴⁾ 조령 즉, 문경새재를 넘어야 해 험준하다고 평가한 구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에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경기 남동부로 올라가 한양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도로였다.³⁵⁾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로보다 도로 상태가 좋다고 판단했고, 낙동강과 한강의 수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 병참로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³⁶⁾ 또한 제1전신가설지대가 북쪽으로 가설했던 일본군용 전신선 루트와 일치하는 노선이였다.³⁷⁾ 참모본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행군하는 부대에 배포했던 지도도 1892년 무로다가 제출한 보고서가 아닌 1894년 간행한 <부산항부터 경성에 이르는 동로지>와 <부산항부터 경성에 이르는 서로지> 그리고 <부산항부터 경성 중로에 이르는 연도지>였다.³⁸⁾ 1892년 무로다가 제출한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철도가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도로망을 택하는 것이 비록 문경새재가 험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은 무더위까지 겹쳐 군수품이 담긴 짐수레는 물론 마필의 통행도 어렵고, 고용한 조선인 인부들의 도망과 식량 부족까지 겪으며 행군을 이어갔다. 그러한 와중에 조령을 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문경새재에서 암석들 사이를 빠져나오며 행군해야 했는데, 경사가 심한 바위를 넘는 도중에 말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결국 행군하던 일본군 제5사단장 일행은 근처에 있던 전신가설지대에게 도로 수선을 지시하여 후발 부대의 안전을 피해야 했다. 이처럼 중로를 따라 만든 병참선을 행군하기가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지휘관이었던 제5사단장은 보병 1개 대대만 중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병력은 원산에 상륙시키겠다고 대본영에 보고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본영은 서울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에 이를 거부하였다.³⁹⁾

결과적으로 가와카미 소로쿠 참모차장의 요청으로 무로다 요시아야가 주도해 작성한 1892년 부산-서울 간 철도선로 측량 보고서는 2년 뒤 청일전쟁의 병참선 구축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청일전쟁에서의 병참선 운용은 일본 육군이 한반도에 군용철도 부설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후일 최초의 조선총독이자 청일전쟁 직전에 운수통신장관에 임명되어 병참을 책임졌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이후 한반도와 만주에 군사적

34)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청일전쟁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46~147쪽.

35) 朴相侁, 「小白山脈地域의 交通路와 遺蹟 - 忠州와 연결되는 交通路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6, 1990, 161~163쪽; 崔永俊, 『한국의 옛길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146~148쪽.

36) 조재근, 앞의 책, 2024, 185~186쪽.

37) 魏晨光, 앞의 책, 2023, 147쪽. 일본 육군의 조선 내 전신선 가설에 관해서는 齊藤聖二, 『日清戰爭の軍事戰略』, 芙蓉書房, 2003; 이승희,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 『일본 역사연구』 21, 2004; 박진홍,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8) 조재근, 앞의 책, 2024, 167쪽.

39) 魏晨光, 앞의 책, 2023, 150~155쪽.

목적에 의한 철도 건설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⁴⁰⁾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된 일본 육군의 대응은 전쟁 중에 수행한 조치와 전쟁 이후의 정책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전쟁 중 수행한 조치는 병참선 운영을 위한 경편철도 부설과 경부철도 노선의 제2차 답사였다. 먼저 경편철도 부설 필요성은 일본군이 평양까지 복상한 후에도 인천에서 용산까지 병참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편철도 부설 필요성은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육군차관의 지시로 다케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⁴¹⁾ 혼성제9여단 병참감이 용산-인천 간 도로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894년 9월 10일 작성된 다케우치 보고서는 경인 구간이 땀감과 식수가 매우 부족하고 양화진의 나루터는 홍수가 나면 길이 물에 잠긴다고 지적하며 “더코빌을 부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코빌’은 경편철도의 모델 중 하나로 궤간이 일본의 협궤(1,067mm)의 절반에 불과한 5~600mm였다.

육군성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일에 고다마 차관은 다케우치에게 더코빌 경편철도를 경인 구간에 부설할 예정이니 도로를 정찰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5일에 정찰이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고다마는 곧바로 내무성, 체신성, 외무성 등 관련 부처에 통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다마는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무대신에게 경편철도를 놓는 이유를 경인 간 병참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겨울에 한강이 결빙되면 군수품을 오로지 육로 운반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⁴²⁾ 무쓰 외무대신도 이를 수용해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재경성 특명전권공사에게 경편철도 부설에 관해 조선 정부가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⁴³⁾

그러나 평양전투가 끝나고 주요 전장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급한 병참선이 인천-용산 구간에서 진남포-평양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병참총감을 겸임했던 가와카미 소로쿠는 10월 7일 고다마 차관에게 결빙기에도 급양을 유지하기 위해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경편철도 부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인천-용산 간 경편철도 건설을 위해 확보한 자재를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건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⁴⁴⁾ 조선에도 경편철도 부설 구간 변경을 알리도록 했다.⁴⁵⁾

40) 이형식,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조선통치」, 『역사와 담론』 91, 2019, 29~30쪽. 이에 더해 데라우치는 1893년 3월 22일부터 철도회 의원으로 참여했고, 의화단사건 이후에 철도회 의장에 임명되는 등 철도교통의 군사적 운영과 깊은 관련을 맺었다. 이후 대륙철도의 광궤식(표준궤를 의미함) 운영, 경부철도 속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임시군용철도감부 편성, 압록강 철교 완공에도 영향을 끼쳤다(黒田甲子郎 編纂, 『元帥寺内伯爵傳』, 元帥寺内伯爵傳記編纂所, 1920, 424~427쪽).

41) 다케우치 세이사쿠는 보병소좌로 1892년 육군성 군무국의 제2군사과장을 역임했고, 1894년 9월 제1군 병참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청일전쟁에서의 병참업무를 선봉에서 지휘했다. 청일전쟁 당시의 병참업무를 기록한 『韓地從征日記』를 남겼다(魏晨光, 앞의 책, 2023, 16쪽; 조재곤, 앞의 책, 2024, 176쪽).

42) 魏晨光, 앞의 책, 2023, 198~200쪽.

43) 陸奥宗光 → 大鳥圭介, 「機密送第六二號 京仁間 軍需品輸送 兵站線路 확보를 위한 교섭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 1894.09.17.

44)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335~336쪽; 魏晨光, 앞의 책, 2023, 201~202쪽.

하지만 12월 중순까지 재료가 운송되지 않았고, 땅이 얼어붙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 육군은 서해안을 이용한 해상 운송도 5월까지 이용이 어렵고, 짐꾼을 쓰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전장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남포에서 평양 그리고 의주까지 연결되는 병참선을 중시하고 있었다. 일회성의 병참선을 위해 철도를 부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육군은 1895년 2월 2일 진남포-평양 간 경편철도를 완공하였다. 물론 이 시기 일본의 주력군은 대부분 의주를 넘어 만주로 진입한 상황이었기에 완공된 경편철도가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았고, 예비 병참선으로만 유지되었다.⁴⁶⁾ 하지만 이후 평양-진남포 간 철도 부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평양-진남포 간 경편철도 부설이 전쟁 상황에서의 단기적 목표를 위한 조치였다면, 경부철도 부설을 위해 두 번째로 진행된 선로 측량 답사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조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894년 11월 두 번째 경부철도 선로 측량 조사를 실시했다.⁴⁷⁾ 주도한 세력은 육군성이었다. 조사도 ‘軍路調査’라고 지칭할 만큼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노선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고, 전쟁 중에 주요 병참선으로 기능했던 인천-서울 구간 조사도 병행했다.⁴⁸⁾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혼란 상황이라 답사는 순조롭지 못했다. 조사대를 호위하던 부대가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동학 세력이 컸던 전라도, 충청도는 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⁴⁹⁾ 물론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까지 답사를 계획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경부철도 구간 이외에도 철도 부설을 위한 선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언급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경부철도 2차 답사노선은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1차 답사노선과 같으나 대구에서 상주가 아닌 인동-김산(현재 김천)⁵⁰⁾에서 추풍령을 넘어 영동, 청주로 올라가 서울에 다다르는 경로였다.⁵¹⁾ 청일전쟁에서 병참선을 기존의 영남대로를 답습해 구축하며 겪었던 문제들로 인해 일본 육군은 가능한 지형이 험하지 않은 곳을 찾고자 했다. 특히

45) 陸奥宗光 → 大鳥圭介, 「南浦·馬馳浦와 平壤 간 도고빌 철도부설에 관한 조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 1894.10.10.

46) 魏晨光, 앞의 책, 2023, 202~203쪽.

47) 정재정, 앞의 책, 1999, 51~52쪽.

48) 西郷從道 → 井上馨, 「京城·仁川·釜山間の 철도부설을 위한 軍路調査의 件-軍路 조사 관련」, 『駐韓日本公使館記録』 3, 1894.11.01.

49) 井上馨, 「京城·仁川·釜山間の 철도부설을 위한 軍路調査의 件-踏査要員 護衛兵 靑山附近에서 東徒遭遇 擊退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録』 3, 1894.11.27;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第1卷: 創始時代』, 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255쪽.

50) 김산군(金山郡)은 1914년에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개령군(開寧郡), 지례군(知禮郡) 및 성주군 신곡면(薪谷面)과 함께 김천군에 통폐합된 행정구역이다(『府郡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46), 1913.08, 617쪽; 「第二号調査書 面ノ名稱 名稱ノ由來」, 『面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52), 1913.12, 859~861쪽). 20세기 초반 김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이대화, 「20세기 초반 지방제도 개편의 목적과 추진과정-경상북도 김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23, 2009.

51) 朝鮮總督府 鐵道局, 앞의 책, 1915, 96쪽.

소백산맥을 어디서 넘어야 할 것인가를 1차 답사 당시 채택했던 상부-보은 구간보다 험하지 않은 곳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육군은 상주에서 보은으로 넘어가는 구간도 문경새재보다는 완만하지만, 여전히 난공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추풍령을 횡단하는 구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⁵²⁾ 군의 병참선 구축, 군사수송의 원활한 운영을 철도부설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군부에게 노선을 선정하는 기준은 서울 나아가 만주까지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느냐 뿐이었다. 실제로 채택된 경부철도 노선도 위의 2차 답사노선과 1900년 3월에 일본 육군이 재차 주도해 실시했던 4차 답사노선에 가까운 형태로 확정되어 부설되었다.⁵³⁾

3.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 중심의 한국철도계획

1) 철도정책의 전환과 러일전쟁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해 육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부분은 단지 한반도 철도에만 국한되는 정책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어질 전쟁에서 신속한 병참선 운영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주까지 하나의 연결망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도부대의 창설이다. 대본영은 청일전쟁 기간에 한반도에서 인부와 우마의 도주로 인한 병참 기능의 마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병참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로나 수로가 아닌 육로 병참선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철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청일전쟁이라는 실전을 통해 확인했다.

일본 육군의 수뇌부는 전쟁 막바지부터 철도부대에 관련된 법안 제정에 착수했고, 1895년 5월 「임시 철도대 근무령」, 「임시 경편철도대 근무령」이 완성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쟁이 끝난 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일본 육군에 의해 작성된 「육군 군비 확장안」에는 철도부대 신설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1896년 3월 일본 육군은 철도대대의 평시편제를 확정했다. 철도부대 상설의 이유로 일본 육군은 시간 절약, 인마 인부의 현지 조달 어려움, 교통과 연락의 확실성 확보 그리고 유럽 각국이 평시에도 철도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이번 전쟁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임시로 1개 철도대를 편성하려 했지만 강화조약으로 포

52) 채택한 본선에 대한 비교선으로 청주에서 조령을 넘어 문경으로 나와 상주, 선산, 인동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노선과, 부산에서 경주를 거쳐 문경에 달하는 노선도 답사했다(朝鮮總督府 鐵道局, 앞의 책, 1937, 255쪽).

53) 정재정, 앞의 책, 1999, 55~58쪽.

기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술 습득을 위해서라도 개전 이전부터 충원, 소집, 집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⁵⁴⁾ 일본 육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두 번째 조치는 일본에서 실행된 철도 국유화였다. 주지하다시피 1905년까지 일본은 사설 철도 노선이 관설철도 노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6년 3월 공포된 「철도국유법」을 통해 일거에 17개 사설철도회사가 국유화된 것은 큰 사건이었다. 그만큼 일본의 철도 관료, 군부, 재계의 의견이 사설철도 주도에서 국유론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⁵⁵⁾

군부의 철도 국유화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청일전쟁 이전까지 참모본부는 ① 표준궤 혹은 광궤 채택, ② 간선의 복선화 ③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간선 경로 변경을 우선시했고, 철도 국유화를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는 청일전쟁을 겪고 난 후 협궤로도 차량제조기술이 향상되어 궤간의 3배까지 적재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 속도보다 전국적인 수송 체계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궤간 개축보다 국유화가 시급하다고 견해를 바꾸게 되었다.⁵⁶⁾ 외지에서의 전쟁을 통해 병참선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군부의 의견 전환이었다. 이는 1906년 3월 철도 국유화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도 국유법안과 동시에 제국의회에 제출된 경부철도 매수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정부가 추진한 철도 국유화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와 만주까지의 철도 운영 일원화였다.⁵⁷⁾

청일전쟁 이후 한반도 철도와 관련해 일본 육군이 주도한 정책적 대응의 마지막은 직접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철도를 부설하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강제병합 이전 일제에 의해 구축된 한반도 철도망의 핵심은 경부선과 경의선으로 일본에서 만주로 빠르게 직행할 수 있는 종관철도망이었다.⁵⁸⁾ 그런데 이 외에도 최초의 철도망인 경인선과, 경부·경의선의 지선이었던 마산선(마산-삼랑진)과 평남선(평양-진남포)이 강제병합 이전에 다른 노선들에 비해 빠르게 완공되어 운영되었다. 이들 노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청일전쟁 혹은 러일전쟁 기간에 일본군이 병참선 확보를 위해 경편철도를 부설했거나, 부설할 계획을 하고 있던 구간이라는 점이었다. 평남선과 경인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병참선 확보를 위해 경편철도 부설을 계획했거나, 부설을 시행한 구간이었고, 마산선은 일본이 러일전쟁 도발 직후 경편철도를 부설한 구간이었다.

우선 경인선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유일하게 준공된 한반도 철도였다. 부설권 획득을 위한 열강 간 대립이 치열했으나, 철도가 놓인 노선은 인천에서 용산까지 연결되는 동안

54) 魏晨光, 앞의 책, 2023, 222~227쪽.

55) 일본의 철도국유화 조치에 관해서는 武知京三, 「日本鉄道史に関する一覽書 - 鉄道国有化前後の動向-」, 『近畿大学短大論集』 14-2, 1982; 松下孝昭, 『近代日本の鉄道政策-1890~1922年』, 日本經濟評論社, 2004; 老川慶喜, 「鉄道国有化の歴史的過程について」, 『立教経済学研究』 58-4, 2005; 『日本鉄道史-幕末・明治篇』, 中央公論新社, 2014; 恩田睦, 「渋沢栄一の鉄道觀と鉄道国有化政策」, 『明大商學叢』 106-4, 2024.

56) 老川慶喜, 위의 책, 2014, 190~191쪽.

57) 정재정, 앞의 책, 1999, 106~110쪽.

58) 경부철도와 경의철도의 부설권 대립, 부설과정과 한국인의 저항 등에 관해서는 정재정, 앞의 책, 1999, 34~110쪽.

오류동을 거치는 등 청일전쟁 당시 병참선, 병참분견소를 설치했던 곳을 지나갔다.⁵⁹⁾

그리고 마산선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도발한 직후 마산-삼랑진 구간을 경편철도로 부설해 경부선과 접속하도록 만들었다. 러일전쟁 시기 일본 정부는 부설 중인 간선철도 경부선에 연결하는 지선 건설을 경계했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인이나 한국인 등에게 지선 부설을 허가하는 것을 경계했다.⁶⁰⁾ 육군의 의도가 가장 크게 반영된 조치였다. 1905년 7월 8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에게 경부선과 경의선에 지선 부설을 청원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철도는 모두 “일본의 군사상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⁶¹⁾

물론 일본육군의 필요에 따라 부설하는 지선이었던 마산선은 불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산선은 일본 정부가 경부선, 경의선 등 주요 간선만큼 중요시한 철도였다. 러일전쟁 발발 후 한국에서의 정치·군사적 실권 및 경제 이권 확장을 도모한다는 「제국의 대한방침」의 실행지침으로 마련된 「대한시설강령」에도 마산-삼랑진 간 철도 부설권 확보가 명시되어 있었다.⁶²⁾ 그 이유는 진해만에 인접한 마산포는 한국 남단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군사 및 경제상 유용하다는 논리였다.⁶³⁾

하지만 마산포를 철도로 연결하는 구상은 군사적 목적이 더 컸다. 본래 일본 군부는 부산보다 마산포가 군항으로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청일전쟁 시기부터 태평양 연안에서의 부동항 해군기지로 마산포를 조차하고자 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으로서는 마산포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러일전쟁이 시작되고 발틱함대가 동아시아에 파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상의 군사 거점으로서의 마산포가 더욱 중요해졌다.⁶⁴⁾ 따라서 전쟁 중에도 마산선 부설은 추진되었고, 경편철도가 아닌 표준궤 궤간을 채택해 경부선과 직접 연결하도록 결정해 1905년 5월 21일 준공하였다.⁶⁵⁾

평남선은 러일전쟁 중 추진했다가 선로 부설에 이르지 못했는데, 통감부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09년 9월부터 부설을 재개해 1910년 10월 16일 전 구간을 개통했다. 진남포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로 1897년 7월 목포와 함께 개항장이 되었다. 이후

59) 遠藤芳信, 『近代日本の戦争計劃の成立』, 櫻井書店, 2015, 814쪽. 경인선 부설 과정에 관해서는 한국 철도문화재단 외, 『新한국철도사 : 총론』,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협회, 2019, 41~42쪽.

60) 萩原 代理公使 → 小村壽太郎, 「京釜鐵道 支線を 충청·전라 양 도에 부설하는 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06.14.

61) 寺內正毅 → 桂太郎, 「(陸軍省 送達) 滿密發 第991號」, 『朝鮮鐵道關係雜件』(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942300), 1905.07.08.

62) 「대한시설강령」(1904)에 대해서는 한성민, 「『韓國併呑』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 -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72, 2021.

63) 小村壽太郎 → 林權助, 「일본 정부의 對韓 施政 방침 훈령 示達 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07.08.

64) 러시아의 마산포 획득 시도는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1, 1999; 이노우에 유이치, 앞의 책, 2005, 159~160쪽. 제2태평양함대(발틱함대)의 극동 파견에 관해서는 윤상원, 『동아시아의 전쟁과 철도 - 한국철도의 정치사 -』, 선인, 2016, 48~51쪽.

65) 한국철도문화재단 외, 앞의 책, 2019, 45쪽.

진남포에는 각국 거류지회, 세관, 일본과 청의 영사관 등이 개설되었다.⁶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남포의 중요성이 부각된 계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일전쟁 당시 경편철도를 부설해 병참선을 유지할 만큼 일본 육군에게 요충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일전쟁 당시 부설했던 경편철도를 근간으로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철도를 부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개항장임과 동시에 청일전쟁 당시부터 확인된 군사적 요충지라는 명분이었다.⁶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육군을 중심으로 추후에 한반도에서의 병참선 활용을 위한 철도정책을 다양하게 펼쳤다. 하지만 마지막 조치인 철도 부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04년 2월 일본이 러일전쟁을 도발할 무렵 한반도에 준공된 철도망은 경인선 뿐이었다.⁶⁸⁾ 경부선·경의선은 물론, 마산선·평남선도 부설 중이거나 계획만 세운 상황이었다. 경부선이라도 급하게 부설하기 위해 1903년 12월 28일 가쓰라 내각은 칙령으로 「경부철도 조기 완성 명령」을 포고하고, 미착공된 구간의 공사비를 특별보조의 형식으로 1년 한도의 국고보조를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작된 공사는 1904년 3월부터였고, 성현-부강, 영등포-초량 구간은 11월 10일에서야 개통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군은 이미 남만주로 북상하고 있었다.⁶⁹⁾

결국 러일전쟁 개전 당시 육로 수송이 필요한 부대는 청일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마산에서 도보 행군으로 서울까지 이동해야 했다. 중도에 인천 및 여순 해전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자 해상수송을 통해 인천에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철도가 부설되지 않아 육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청일전쟁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⁷⁰⁾ 한반도 철도망의 병참선 활용은 러일전쟁 시기에도 불가능했다. 주요 기반 시설로써 제국주의 침략의 첨병으로 철도와 함께 언급되는 전신은 청일·러일전쟁에 활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다면, 철도는 오히려 전쟁에 활용되지 못하면서 일제가 필요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설적으로 이 시기까지를 한반도 철도망 구축의 역사에서 군사적 목적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일본이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까지 침략하겠다는 목적 아래 경부·경의선의 부설권을 획득하고 속성으로 건설하는 과정까지만 군사적 목적이 다른 요소를 압도했던 시기로 이해한다.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1910년대 경원선 호남선 등 주요

66)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 러일전쟁 이전 이주 상층자본가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26~27쪽.

67) 染谷成章 → 林權助, 「北韓 지방에 日文 電信 개시 건과 平壤·鎭南浦 간을 연락하고 철도 부설의 의의에 대한 上申」,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4.10.27; 「平壤·鎭南浦 철도에 관한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 1905.07.01. 한편 평남선 부설 승인은 당시 평양과 원산의 재조일본인 자본가들이 추진하던 평원선 부설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으나 이 글의 논지와는 관계가 없어 생략한다. 이에 관해서는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20, 203~205쪽.

68) 이노우에 유이치, 앞의 책, 2005, 158쪽.

69) 黒田甲子郎 編纂, 앞의 책, 1920, 426~427쪽; 이노우에 유이치, 위의 책, 2005, 159~160쪽.

70) 黒田甲子郎 編纂, 위의 책, 1920, 261~262쪽.

간선이 완공하는 시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육군 등 이른바 대륙침략을 통한 식민지 확대를 꿈꿔왔던 세력은 중국침략을 실제로 실행하기까지 한반도에 구축한 철도·항만 등 교통인프라에 관한 군사적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단지 시기별로 일본 내 정치권력의 중심이 어떤 세력인지에 따른 정책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는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때 식민본국에 필요한 상품에 편중된 경제적 이윤 극대화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다.⁷¹⁾

2) 「만한철도경영에 관한 의견서」와 군사철도 구축

결국 러일전쟁 이후, 철도 건설로 이야기하면 경의선 속성 이후에 일본의 한반도 철도정책이 보여주는 군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909년 9월 21일 일본육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만한철도경영에 관한 의견서(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이하 의견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육군의 대한반도·만주 철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자, 향후 실제로 진행된 한반도 철도망 구축 양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참모본부가 작성한 의견서는 당시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제출되었다. 자료가 제출된 시기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서 물러났으나 그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점진적 병합론이 여전히 유력한 상황에서 육군 중심의 급진적 병합론이 구체성을 마련해나가는 시기였다.⁷²⁾

의견서 앞에는 참모총장이 육군대신에게 우선 러일전쟁 후 러시아의 극동 경영이 활발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고, 만주와 한국에서의 철도망이 러시아에 대항할 중요한 시설임과 동시에 일본군 승패의 관건이므로 이 의견서 내용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⁷³⁾ 러일전쟁에 승리했음에도 여전히 일본군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의 남아였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복선화 등 러시아의 극동 철도정책이 완성되면 하루에 34회의 직통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120사단에 달하는 대병력을 가진 러시아가 단 시간에 군사수송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견서 작성의 이유였다.⁷⁴⁾

의견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만주·한국 철도망 정비를 한반도 종관철도, 안봉선(안동-봉천), 봉장선(봉천-장춘)을 일대 간선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노선을 지선으로 두는 것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3기로 나눠서 제시

71) 박우현, 「일제시기 조선철도 건설의 성격에 관한 세계사적 검토」, 『식민지적 근대와 조선사회 1』, 선인, 2024, 155~204쪽.

72)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에 관한 논의 과정에 관해서는 오가와라 히로유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열린책들, 2012; 윤대원,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2015.

73)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09.21, 157쪽.

74)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66~167쪽.

했다. 그중 1기만 ‘시베리아횡단철도 복선화 준공 전까지’라는 기한이 제시되어 있었다. 1기 계획은 ① 마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종관선 개축, ② 안봉선 개축, ③ 소가둔(蘇家屯) 이북(≡)남만주철도(이하 만철) 본선의 복선화, ④ 경성-원산 철도 부설(경원선), ⑤ 경원-회령-청진 철도 부설(함경선, 도문선)이었다. 2기 계획은 ① 안봉선의 복선화, ② 한국 종관선의 복선화, ③ 원산-청진 철도 부설(함경선), 3기 계획은 평양-원산 철도 부설(평원선)이었다.⁷⁵⁾

이후 의견서는 한국의 종관철도망과 만철 노선을 주요 간선으로 설정하는 이유부터 설명한다. 군의 전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육상수송과 해상수송이 함께 해 단시일에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해운력을 보조할 수 있는 육상교통기관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때에 따라 육상수송력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종관 철도망부터 안동-봉천-장춘 간 만철노선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로 연결된다. 핵심은 제해권이 었다. 즉, 제해권 장악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만주로 병력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러일전쟁 후 러시아가 해군 재건에 착수해 6~7년 뒤 황해와 동해의 제해권을 지금처럼 일본이 장악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해상수송을 통해 대련으로 향해 거기서부터 만철 본선으로 장춘에 이르는 루트를 대체하는 육상수송루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었다.⁷⁶⁾

또 하나의 이유는 해상수송에 의지해 황해를 거쳐 대련에 도착한 후 장춘에 이르는 해상수송루트에 비해 한국 종관철도와 만철의 지선인 안봉선을 거쳐 장춘에 이르는 육상수송루트가 1일 수송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이었다. 참모본부는 해상수송루트로 군대와 군수품을 수송할 경우 1일 17열차(군대 13열차, 군수품 4열차), 6,800톤 수송이 가능하다고 계산하였다. 하지만 마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종관철도를 개량해 활용하면 1일 37열차(군대 28열차, 군수품 9열차), 14,800톤까지 수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마산 기점의 한국 종관철도가 대련 기점의 해상수송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육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도 제해권에 의지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참모본부는 한국 종관철도를 군사수송에 적합한 수준까지 건설 및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⁷⁷⁾

의견서 주장의 골격에 해당하는 위 내용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된 사항이 1기 계획의 ① 마산 기점의 한국 종관선 개축, ② 안봉선 개축, ③ 소가둔 이북 만철 본선의 복선화였다. 특히 1909년 현재 일본육군은 경부선을 한국철도의 주요 간선으로 설정하면서도, 남부 종단항을 부산이 아닌 마산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러일전쟁 당시 마산선 부설 필요성을 제기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육군은 부산은 방비가 곤란해 대군을 양륙시키는 데

75)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0~172쪽.

76)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3~177쪽.

77)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79~183쪽.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마산포는 이미 해군이 군항을 건설하고 있는 진해만⁷⁸⁾이 감싸고 있어 엄호가 가능한 지형이므로, 속히 항만 확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⁹⁾ 마산선의 표준궤 개축과 마산항 수축은 일본육군의 군사적 목적에서 부산항보다 중요한 부분이었다.⁸⁰⁾

이처럼 일본육군은 경부·경의선으로 설명되는, 이른바 한국의 종관철도망을 군사수송에 적합한 수준으로 건설·개량을 진행함과 동시에 함경북도로 향하는 경성-원산 철도, 두만강 일대를 연결하는 경원-회령-청진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유는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북도에 반드시 일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데, 지세가 험하고 물자가 부족해 신속하게 군을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나아가 의견서는 북만주에서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장악하기 위한 발판으로 길림-회령 간 철도 즉 길회선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⁸¹⁾

건설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시된 노선이 평양-원산 간 철도였다. 의견서에 제시된 모든 노선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노선이었던 것과 달리 평원선은 유일하게 동서를 완벽히 횡단하는 노선이었다. 의견서는 만철 부속지 등 압록강 이북에 주둔할 일본군과 함경북도 두만강 주변에 주둔할 일본군 간 제2 연락선 역할로 작전을 지도하기 위한 철도망으로 평양-원산선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다른 노선에 비해 시급하지 않으므로 3기 계획으로 배치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⁸²⁾

의견서가 제시한 한국철도망 건설 및 개량안은 실제로 건설된 철도망과 어느 정도 일치할까?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경원선, 함경선, 도문선, 평원선 등은 모두 1910~30년대에 걸쳐 건설되었다. 물론 의견서 상의 계획과 순서 면에서 차이가 있고, 기공 혹은 준공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강제병합 직후 경성-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은 호남선과 함께 부설을 시작했지만, 경원-회령-청진을 연결하는 함경선, 도문선은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도문선은 1927년 실시한 조선철도12년계획에서야 신설 노선으로 포함될 정도로 시간이 걸렸다.⁸³⁾

78) 일본군의 진해만요새 구축에 관한 연구는 김경남, 「韓末 日帝의 鎮海灣要塞 建設과 植民都市 開發의 變形」, 『항도부산』 28, 2014;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2015; 이학수, 「진해 군항의 탄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이지영, 「한말 일제의 대륙 진출과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항도부산』 44, 2022.

79)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184~185쪽.

80) 이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는 1930년대 후반에도 마산항은 부산항과 함께 일본군이 중점적으로 조선총독부 재정을 투입하고자 했던 항만으로 자리했다. 이에 관해서는 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141~146쪽; 「1930년대 후반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전시(戰時) 인프라 개발」, 『역사와현실』 132, 2024, 176~184쪽.

81)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188~193쪽.

82)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위의 글, 1909.09.21, 194쪽.

83) 도문선을 포함한 조선철도12년계획의 승인에 이르기까지 총독부와 사설철도회사의 동향에 대해서는 矢島桂,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國有鐵道十二箇年計畫」」, 『歴史と經濟』 52-2, 2010. 재조일본인사회의 동향은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1910~1923)」, 『석당논총』 40, 2008;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와 「朝鮮鐵道十二年計畫」」, 『역사와경계』 71, 2009. 해당 계획으로 부설된 철도망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景林, 「日帝下 朝鮮鐵道 12年計劃線에 關한 研究」, 『경제사학』 12, 1988. 조

<그림 2> 「의견서」 수록 철도망 계획도



출처 :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 09.21

선사업공채 발행계획의 측면에서 1927년에 계획이 성사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박우현, 「192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재원조달의 부실화」, 『한국사연구』 185, 2019.

<그림 3> 1945년 현재 조선철도망



출처 : 朝鮮總督府 交通局, 「朝鮮鐵道略圖」, 1945.8.

설사 기공했다라도, 공황 등에 의한 일본 재정의 악화, 일본 내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 식민지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의견서에 제시된 일본육군의 계획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른바 정당 세력과 정치적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군부 세력이 일본 정치의 권력을 잡으면 한국철도망 건설 및 개량에 자금이 조달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다.⁸⁴⁾ 1914년에 기공했으나,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었던 함경선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호전과 철도확장을 통한 대륙침략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총리가 되면서 군비확장을 포함한 확장재정정책의 추진이 함께 이뤄지면서 1918년부터 건설비가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⁸⁵⁾

평원선은 1922년 내각과 제국의회에 부설을 승인받았으나, 오랜 기간 완공무용론에 시달리다가,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군사수송 측면에서 동서 횡단철도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1941년에야 완공될 수 있었다.⁸⁶⁾ 의견서 상 2기 계획에 속했던 한국 종관선의 복선화도 1936년에 2.26사건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추진되었다. 일본은 물론 대만보다 조선철도의 복선화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는데, 군부의 정권 장악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물론 경부·경의선에 한정된 복선화였다.⁸⁷⁾

이처럼 의견서에 제시된 계획 실현 여부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을 이해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참모본부의 계획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 조선철도가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선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강제병합 이후 조선철도에 관해 육군성·조선군과 조선총독부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⁸⁸⁾

84) 정당 세력 간 갈등도 극심했고, 정우회 계열은 식민지 철도 확장에 긍정적이었지만, 큰 틀에서 경제적 이윤극대화를 위한 철도 부설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군부 세력과 일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26년 말 1927년 초 조선철도12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헌정회 계열 주요 인사들의 조선철도 건설을 주장하는 움직임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浜口雄幸傳刊行會 編, 『浜口雄幸傳』, 浜口雄幸傳刊行會, 1931, 209~212쪽; 杉山伸也, 「金解禁論爭-井上準之助と世界經濟」, 『帝國日本の學知 第2卷「帝國」の經濟學』, 岩波書店, 2006, 152쪽; 李炯植,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2007, 107~115쪽.

85) 박우현, 「191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의 전개와 난맥상」,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106~111쪽.

86)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20, 211~232쪽.

87) 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144~146쪽.

88) 일례로 1925년 5월 조선철도의 조선총독부 철도국 직영이 재개된 후 조선군과 철도국은 철도의 건설·개량, 차량, 방호, 수송 등에 대해 군에 통보·협의하고 특히 선로의 신설, 복선화 개량, 군사수송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參謀本府, 「朝鮮鐵道關係事項に就テ總督府トノ連絡ニ關スル件」, 『密大日記 大正14年 6冊の内第4冊』(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T14-4-9), 1925.04.20.). 특히 군사수송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군사수송위원회를 만들어 조선군사령부 소속 장교가 참여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林采成, 『戰時經濟と鐵道運營: 「植民地」朝鮮から「分斷」韓國への歴史的経路を探る』, 2005, 25~26쪽;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23쪽). 또한 1933년 예산편성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철도건설 및 개량비 예산책정 과정에 육군성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까지 했다. 만주사변과 만주국 성립 이후의 정세를 반영한 조치였다(박우현,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재정 위기와 제국의 차별적 대응」, 『한국사학보』 94, 2024, 136~138쪽).

하지만 의견서 상의 계획이 실현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중단되거나 승인받지 못하는 시기가 길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당 의견서가 작성된 시기는 육군세력이 일본내각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권력과 경제 상황이 군사계획 혹은 철도·항만 등의 대형 인프라 구축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가깝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일본 내 정치 지형의 변화, 러일전쟁 이후 일본경제의 불황, 제1차 세계대전, 관동대지진, 세계대공황까지 1910~20년대 일본의 정치·경제적 격변은 계획의 안정적 실현을 어렵게 했다. 참모본부가 대륙침략과 연계된 군사적 목적으로만 대규모 재정자금을 철도·항만 구축에 조달할 수는 없었다.

특히 식민지의 철도·항만 구축에 조달되었던 조선사업공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식민본국인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의 정치·경제적 변화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시기마다 일본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의 의사결정에 휘둘렸고, 그사이에 조선인 심지어 조선 내 일본인 세력의 의사나, 조선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의견서가 중요하게 제기한 내용인 이른바 ‘만한철도의 통일’ 즉, 만철과 한국 철도를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실행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식민통치의 양상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⁸⁹⁾ 이 내용은 강제병합 이후 1911년 5월 참모본부가 한 차례 더 작성해 육군대신과 조선총독을 겸하고 있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제출한 「조선·만주의 철도경영방안(朝鮮·滿州二於ケル鐵道經營方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⁹⁰⁾ 이는 1917년 7월 31일부터 실시된 조선철도의 만철 위탁경영으로 실현되었다.⁹¹⁾ 이 사안 역시 함경선 건설비 증가처럼 데라우치 내각에서 현실화되었다는 점과 1920년대로 들어서며 일본육군 중심의 대륙침략 시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환원되었다. 일제의 식민정책상 병참선으로서의 조선철도망 구축이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9) 「滿韓鐵道經營二關スル意見書」, 앞의 글, 1909.09.21, 204~205쪽.

90) 「朝鮮·滿州二於ケル鐵道經營方案」,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9), 1911.05, 454~457쪽.

91) 만철의 조선철도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橋谷弘, 「朝鮮鐵道の滿鐵への委託經營をめぐって--第一次大戦前後の日帝植民地政策の一断面」,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9, 1982; 이용상·배은선·정병현, 「한국철도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위탁경영시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7-4, 2014; 정태현,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한국사학보』 60, 2015.

4. 맺음말

본고는 청일·러일전쟁의 배경이 된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부터 시작해, 전쟁이 한국철도망 구축의 방향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반도에 놓인 철도망이 남북을 연결하는 종관 노선에 집중되었던 점은 현대 한국의 교통과 도시발달 방향을 결정했다. 여전히 경부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철도가 서울로 집중하는 방식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동했다.

물론 산업화를 매개로 철도가 발전했던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안이고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적 연계, 지역 내 발전 등을 고려하며 중심지를 향하는 철도만을 부설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기에 중심지를 거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철도 부설이 함께 진행되었다. 철도의 순기능은 여러 지역을 연결해 다양한 사람과 물자를 옮겨낼 수 있어야 발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식민지 확대 즉, 대륙침략을 최우선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된 한반도 철도망 건설의 방향성은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30년대 말이 되면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를 향하는 종관철도망이 3개, 40년대 초에는 4개로 늘어났고, 군사수송을 위해 확장된 남부 항만도 4개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일제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철도를 통해 드러낸 욕망은 군사적 목표만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한반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횡단철도 부설을 통해 지역 내 유통망 확대를 요구했다. 대구-남원, 강릉-군산, 대구-광주 간 철도 부설은 조선총독부 계획에도 자리하고 있었던 중요 노선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철도 부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공채를 발행해야 가능했다. 조선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채를 발행한 권한은 식민본국인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대륙침략으로 요약되는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세력이 권력을 잡은 시기에 조선 내 횡단철도 부설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만주로 향하는 철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철도12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남부횡단선인 경전선도 결국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한국철도망에 부족한 횡단철도는 동서 간 교류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자,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었다. 수도권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연계해 새로운 경제 권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망부터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비용-편익을 계산하는 현대사회에서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권역을 만들자는 주장은 굳이 그러지 말고 수도권에 의

지해 사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넘어서기 어렵게 되었다.

태생부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확대라는 군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한반도 철도망은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 시기까지 대부분 기간을 동일한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되었다. 흔히 한국철도의 군사적 성격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성격을 대칭으로 두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군사적 성격을 중시했으므로 경제적 성격이 반감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경제적 성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철도를 부설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부설했다고 하더라도 평시에는 경제적 목표에 순응해 운영되기 마련이다. 단지 전통적인 중심지와 구별되는 지역이 발전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를 군사적인 부문에만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소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철도가 처음 부설되던 시기에 나타났던 군사적 목표로의 편중이 만든 종관철도 집중과 횡단철도 소외라는 불균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반에 끼치는 문제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讀賣新聞』『駐韓日本公使館記錄』

「滿韓鐵道經營ニ關スル意見書」,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1), 1909. 09.21.

「府郡廢合ニ關スル件」, 『府郡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46), 1913.08.

寺內正毅 → 桂太郎, 「(陸軍省 送達) 滿密發 第991號」, 『朝鮮鐵道關係雜件』(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942300), 1905.07.08.

室田義文 → 陸奥宗光, 「自釜山至京城鐵道線路踏查報告書」, 『京釜鐵道敷設一件附京釜鐵道線路保護ノ爲メ巡查常派ノ件·京釜鐵道線路ニ沿ヒ我利權扶殖計畫ノ件第一卷』(外務省外交史料館 B04010886900), 1892.11.16.

「第二号調査書 面ノ名稱 名稱ノ由來」, 『面廢合關係書類』(국가기록원 CJA0002552), 1913.12.

「朝鮮·滿州ニ於ケル鐵道經營方案」, 『陸軍一般史料-文庫-宮崎』(防衛省防衛研究所 文庫-宮崎-49), 1911.05.

參謀本府, 「朝鮮鐵道關係事項に就テ總督府トノ連絡ニ關スル件」, 『密大日記 大正14年 6冊の内第4冊』(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T14-4-9), 1925.04.20.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浜口雄幸傳刊行會 編, 『浜口雄幸傳』, 浜口雄幸傳刊行會, 1931.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朝鮮總督府 鐵道局, 1915.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第1卷 : 創始時代』, 朝鮮總督府 鐵道局, 1937.

2. 저서

가토 요코·윤현명, 이승혁 역,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도널드 서순·유강은 역, 『불안한 승리 : 자본주의의 세계사, 1860~1914』, 뿌리와 이파리, 2020.

야마무로 신이치·정재정 역, 『러일전쟁의 세기-연쇄시점으로 보는 일본과 세계-』, 2010.

에릭 홉스봄·전철환 역, 『산업과 제국 : 산업시대 영국 경제와 사회』, 한빛, 1984.

에밀리 S. 로젠버그 편·조행복, 이순호 역, 『하버드 C.H. 베크 세계사. [5], 1870~1945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민음사, 2018.

오가와라 히로유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 열린책들, 2012.

위르겐 오스터함멜·박종일 역, 『대변혁 III - 19세기의 역사풍경』, 한길사, 2021.

윤대원, 「일제의 한국병합 방법과 식민 통치 방침」, 『한국문화』 70, 2015.

윤상원, 『동아시아의 전쟁과 철도 - 한국철도의 정치사 -』, 선인, 2016.

이노우에 유이치·석화정, 박양신 역, 『동아시아 철도 국제관계사-영일동맹의 성립과 변질 과정』, 지식산업사, 2005.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조재곤,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2024.

崔永俊, 『한국의 옛길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하라 아키라·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하라다 게이이치·최석완 역, 『청일 러일 전쟁』, 어문학사, 2011.

한국철도문화재단 외, 『新한국철도사 : 총론』,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협회, 2019.

老川慶喜, 『日本鐵道史-幕末・明治篇』, 中央公論新社, 2014.

北岡伸一, 『日本陸軍と大陸政策 1906-1918』, 東京大學出版會, 1978.

小林道彦,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新平』, 南窓社, 1996.

松下孝昭, 『近代日本の鐵道政策-1890~1922年』, 日本經濟評論社, 2004.

遠藤芳信, 『近代日本の戦争計画の成立』, 桜井書店, 2015.

林采成, 『戰時經濟と鐵道運営 : 「植民地」朝鮮から「分断」韓国への歴史的経路を探索』, 2005.

齊藤聖二, 『日清戦争の軍事戰略』, 芙蓉書房, 2003.

酒田正敏, 『近代日本における對外硬運動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8.

黒田甲子郎 編纂, 『元帥寺内伯爵傳』, 元帥寺内伯爵傳記編纂所, 1920,

3. 논문

강윤희, 「아르메니아 문제와 유럽 강대국 외교: 1877-78 러시아-튀르크 전쟁과 베를린 회의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8-2, 2018.

김경남, 「韓末 日帝의 鎮海灣要塞 建設과 植民都市 開發의 變形」, 『항도부산』 28, 2014.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71, 2021.

金景林, 「日帝下 朝鮮鐵道 12年計劃線에 關한 研究」, 『경제사학』 12, 1988.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2015; 이학수, 「진해 군항

- 의 탄생」, 『해항도시문화교섭학』 7, 2012
- 김현수, 「동방문제와 영국정치 1876~1878 -글래스턴과 디즈레일리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사학지』, 38, 2006.
- 朴相侁, 「小白山脈地域의 交通路와 遺蹟 - 忠州와 연결되는 交通路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6, 1990.
- 박상현, 「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식민국가의 정치경제 - 통합비교를 위한 시론」, 『사회와 역사』 111, 2016.
- 박우현, 「192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재원조달의 부실화」, 『한국사연구』 185, 2019.
- 박우현,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20.
- 박우현, 「1910년대 조선사업공채 정책의 전개와 난맥상」,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 박우현, 「1930년대 중반 조선사업공채 발행과 교통망 구축의 불균형」, 『한국사연구』 201, 2023.
- 박우현, 「1930년대 후반 조선사업공채 정책 변화와 전시(戰時) 인프라 개발」, 『역사와현실』 132, 2024.
- 박우현, 「일제시기 조선철도 건설의 성격에 관한 세계사적 검토」, 『식민지적 근대와 조선사회 1』, 선인, 2024.
- 박우현,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의 재정 위기와 제국의 차별적 대응」, 『한국사학보』 94, 2024.
- 박진홍, 「청일전쟁기 일본 육군의 조선 내 군용 전신선 가설」,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 신운용, 「일본의 안중근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 魏晨光, 『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청일전쟁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 이가연, 『개항장 일본인 자본가 연구 - 러일전쟁 이전 이주 상층자본가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이대화, 「20세기 초반 지방제도 개편의 목적과 추진과정-경상북도 김천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23, 2009.
-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 근대 일본에서 ‘제국’ 개념의 정립 과정과 그 기능」, 『국제정치논총』 51-1, 2011.
- 이승희,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 『일본역사연구』 21, 2004.
- 이용상·배은선·정병현, 「한국철도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위탁경영시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 철도학회논문집』 17-4, 2014.
- 이지영, 「한말 일제의 대륙 진출과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항도부산』 44, 2022.
- 이형식, 「조슈파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조선통치」, 『역사와 담론』 91, 2019.
-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1910~1923)」, 『석당논총』 40, 2008.

-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와 ‘朝鮮鐵道十二年計劃」, 『역사와경계』 71, 2009.
- 전홍찬, 「프랑스-러시아동맹 연구: 러일전쟁에서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았나?」, 『국제정치연구』 25-1, 2022.
- 정애영, 「‘병합사안’을 통해 본 한국병합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7, 2007.
- 정애영,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28, 2008.
- 정재현, 「원난 철도의 건설과 프랑스 제국주의」,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정태현,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한국사학보』 60, 2015.
- 최덕규, 「러시아 해군성과 마산포(1894-1905)」, 『한국시베리아학보』 1, 1999.
- 최덕규,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4)」, 『군사』 113, 2019.
- 최덕규, 「동청철도와 러시아의 만주인식(1894-1904) - 만주분할론과 만주병합론을 중심으로 -」, 『만주연구』 36, 2023.
- 한성민, 「韓國併呑’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일관성 검토 - 「對韓施設綱領」과 「對韓施設大綱」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72, 2021.
- 橋谷弘, 「朝鮮鐵道の滿鐵への委託經營をめぐって--第一次大戦前後の日帝植民地政策の一断面」,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9, 1982.
- 老川慶喜, 「鐵道国有化の歴史的過程について」, 『立教經濟学研究』 58-4, 2005.
- 武知京三, 「日本鐵道史に関する一覽書 - 鐵道国有化前後の動向 -」, 『近畿大学短大論集』 14-2, 1982.
- 恩田睦, 「渋沢栄一の鐵道觀と鐵道国有化政策」, 『明大商學論叢』 106-4, 2024.
- 矢島桂,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國有鐵道十二箇年計畫」」, 『歴史と經濟』 52-2, 2010.
- 李炯植, 「戰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2007.
- 杉山伸也, 「金解禁論爭-井上準之助と世界經濟」, 『帝國日本の學知 第2卷「帝國」の經濟學』, 岩波書店, 2006.
- Charis Enns·Brock Bersaglio, “On the Coloniality of “New” Mega-Infrastructure Projects in East Africa”, *Antipode* 52, no 1, 2020.
- Ganeswar Nayak,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The Railways in Colonial South Asia economy, ecology and culture*, New York: Routledge, 3, 2021.
- Jean-François Rousseau, “An imperial railway failure: the Indochina-Yunnan railway, 1898-1941”, *The Journal of Transport History* 35, no. 1, 2014.

「청일·러일전쟁 이후 일본군 병참선으로서의 한반도 철도망 확대」 토론문

김윤미(군사편찬연구소)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청일전쟁 발발 130년, 러일전쟁 발발 120년 기획 학술회의
전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발행일 2024년 8월 30일

발행처 대한민국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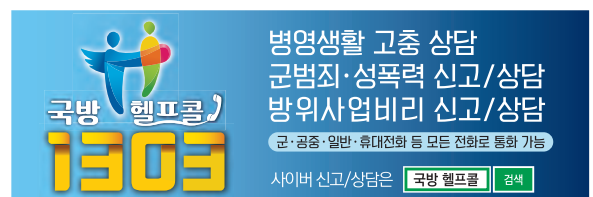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M240840695



신고유형
포간첩/테러범·보안사고(위반)
외국통/방산 스카이·군사기밀유출

신고내역
간첩선·간첩: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최고 1억원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변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cc.mil.kr



병영생활 고충 상담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강역**

